

대선 공약 이행계획

- 시도 공약 -

2013. 2.

- 본 계획서에 수록된 공약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 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추후 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 공약이행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세부적인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차 례

부산 1	해양수산물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3
부산 2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5
부산 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7
부산 4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13
부산 5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15
부산 6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17
부산 7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21
부산 8	수산물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25

대구 1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29
대구 2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33
대구 3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38
대구 4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40
대구 5	K2 공항 이전 추진	42
대구 6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44
대구 7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51

인천 1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57
인천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59
인천 3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61
인천 4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65
인천 5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68
인천 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70
인천 7	인천항 경쟁력 제고	72

광주 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77
광주 2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79
광주 3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81
광주 4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83
광주 5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87
광주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89
광주 7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92

대전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103
대전 2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108
대전 3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112
대전 4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115
대전 5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117
대전 6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121
대전 7	회덕 IC 건설 지원	123

울산 1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도약	127
울산 2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135
울산 3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137
울산 4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141
울산 5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143
울산 6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146
울산 7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149

서울·경기 1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153
서울·경기 2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155
서울·경기 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157
서울·경기 4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161
서울·경기 5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164
서울·경기 6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73
서울·경기 7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178
서울·경기 8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182

강원 1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187
강원 2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190
강원 3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196
강원 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199
강원 5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202
강원 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207
강원 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210
강원 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212
강원 9	청정농축산업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 육성	216

충북 1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221
충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223

충북 3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225
충북 4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228
충북 5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232
충북 6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234
충북 7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236
충북 8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238

충남 1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243
충남 2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245
충남 3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247
충남 4	동서 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252
충남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254
충남 6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257
충남 7	충청권 광역철도(논산 ~ 대전 ~ 세종 ~ 청주) 건설	276

전북 1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281
전북 2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290
전북 3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 ~ 고창간) 건설 추진	292
전북 4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294
전북 5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300
전북 6	동부내륙권(새만금 ~ 정읍 ~ 남원) 국도건설	305
전북 7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307

전남 1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311
전남 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313
전남 3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315
전남 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317
전남 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321
전남 6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327
전남 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329

경북 1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339
경북 2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345
경북 3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354
경북 4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 ~ 포항), 동서5축(보령 ~ 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357
경북 5	김천 ~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361

경북 6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사업)	364
경북 7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368
경북 8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371

경남 1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375
경남 2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380
경남 3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386
경남 4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390
경남 5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397
경남 6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404
경남 7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406

제주 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411
제주 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413
제주 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420
제주 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422
제주 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424
제주 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426

부 산

부산-1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①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부활 -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및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13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양수산부 설치	법령개정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 개정

○ 입법추진계획

- '13년 1월 국회 기 제출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농림분야와 수산분야가 융합된 법률의 소관 분리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 제기 우려 가능
- ⇒ 농림과 수산분야 관련 법률의 소관 검토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

5. 기대효과

-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관리 등 해양 정책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
- 해운·수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자원개발,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신해양산업' 발굴·진흥을 통한 신 성장 동력 마련
- 분산된 해양기능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융합 효과 제고를 위한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

< 참고 : 관련 현황 >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어업정책, 국토해양부에서 해양 및 해양환경·항만·해운물류 정책 등 수행 중
- ◆ 바다를 대상으로 한 수산해양정책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독자·통합적인 수산해양정책 추진동력 약화

부산-2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①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등을 구축 - 첨단영상기술센터, 아시아 영화교육진흥원, 수변공연장, 야외촬영장, 첨단·대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설치 ②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를 조성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을 계기로 센텀지구와 글로벌 영상인프라 등을 연계한 영상콘텐츠밸리 구축
- 민자수익시설인 (가칭)‘아시아 영화촌(영상테마파크 및 호텔, 쇼핑몰 등)’은 2단계 확장 계획을 통해 구축
-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투자 지원을 위한 전문 투자조합 결성

* 3년간 총 400억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영발기금 100억원, 부산시 100억원, 민자 200억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상콘텐츠밸리 구축	사업타당성연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 설계	건립사업	건립사업	운영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조성	기본계획 수립	펀드 조성·운영	펀드 조성·운영	펀드 조성·운영	펀드 운영

3.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부진으로 조성 재원마련에 애로 및 사업 부지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토지수용 등에 어려움(협의매수)

5. 기대효과

-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과,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을 계기로 부산을 세계적 영상도시로 육성

부산-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① 문헌금융단지 조성 ②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설립·유치 -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③ 국제금융연수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① 문헌금융단지 조성 ■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문헌 금융단지 홍보를 위해 ‘09년부터 실시해온 해외IR을 확대(연1→2회)하고 부산 금융중심지 국제컨퍼런스를 신규 개최

* 해외IR : (‘09년)홍콩/싱가폴, (‘10년)동경, (‘11년)뉴욕, (‘12년)시카고

* ‘13년 부산 금융중심지 해외IR 예산 70백만원(‘12년 대비 27백만원 증액) 및 국제컨퍼런스 신규예산 1억원 확보

- (‘14~‘17년) 부산 금융중심지 해외IR을 지속 추진하고, ‘14.6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준공에 따라 필요시 BIFC 내 입주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실시*(‘12.4월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자금지원근거 旣마련)

* (지원대상) ①창업 금융기관, ②국내 신규진입 외국 금융기관

* (지원항목) ①사업용설비 보조(기관당 최대10억원), ②고용 보조(기관당 최대 6천만원), ③ 교육훈련 보조(기관당 최대 6천만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헌금융단지 조성·발전	• 해외IR 확 대개최 • 국제컨퍼런 스 개최	• 부산IFC 완공에 따 른 입주 금융기관 자금지원 시행 • 해외IR 등 홍보지원 (지속)	• 국제컨퍼런 스 등 홍보 지원(지속) • BIFC입주 금융기관자 금지원(지 속)	• 해외IR 등 홍보지원 (지속) • BIFC입주 금융기관자 금지원(지 속)	• 국제컨퍼런 스 등 홍보 지원(지속) • BIFC입주 금융기관자 금지원(지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업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이 부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이 이미 성숙단계에 있어
 - 금융공공기관 이전 외에 국내외 금융기관의 문헌 금융단지 집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선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금융산업 육성, 부산 금융중심지 해외 I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5. 기대효과

-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②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설립·유치

-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한 기본방향 마련('13.상반기 중)
- 정책금융기능 재정립 방안과 연계하여 선박금융공사의 역할, 업무, 인력·조직, 자원조성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검토 필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선택금융공사 설립	●연구용역 추진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 입법추진계획

- 기 발의(의안번호 552)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소요 자원)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등 소요자원 조달 방안 마련
 - 현재 정무위 계류중인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진복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
- (기능)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선박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他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재조정 검토
 -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금융과 관련한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리스크 관리방안) 선박금융에 집중된 자산구조를 감안하여 조선·해운업 불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글로벌 조선·해운업 불황으로 해외 주요 선박금융전문기관(Commerzbank(獨), Societe Generale(佛) 등)의 구조조정 진행 중
- (통상마찰) 특정산업 지원기관 설립에 따른 통상마찰 발생 방지 방안 검토
 -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specificity)에 해당시 보조금 문제*가 쟁점화될 우려 → WTO 제소 또는 상계관세 부과 가능
- (금융인프라) 부산 지역 금융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선박금융의 특성상 선사, 조선사, 은행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선박금융공사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 (전문성 확충) 차질없는 선박금융 지원을 위해 선박금융 관련 전문인력 및 시스템 확충 방안 검토
 - 단기간내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선박금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인력 조정 방안 등도 검토 필요

5. 기대효과

- 선박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조선업·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③ 국제금융연수원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금융위원회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1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출연금(3억원)을 지원하여 KAIST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발전계획 연구용역* 실시, 금융업계 자율**로 국제금융연수원 설립 추진 유도

* 부산지역 교육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므로 설립에 앞서 금융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현재 금융업계는 자율적으로 업권별 연수원, 기관별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

- ('14년)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과부, 기재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향후 추진방안을 협의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 KAIST에 출연금 지원	• 연구용역 결과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금융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금융 전문교육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13년 KAIST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교육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실시
-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시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교과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
 - KAIST 발전계획 결과를 토대로 교과부, 기재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 국제금융연수원의 경우, 부산 지역 교육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 금융업계가 교육수요를 진작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

5. 기대효과

-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부산-4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순천간 복선화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② 순천~광주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여 부산 ~ 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전선(삼랑진~순천~광주송정) 구간중 일부구간(삼랑진~진주, 광양~순천)은 既완료, 공사중인 진주~광양구간은 '15년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 순천~광주송정 구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기 착공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남해안철도고속화	-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순천~광주송정의 경우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 실현에 차질 우려
 -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지원,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교통네트워크 연결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기재부)하고, 별도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공약사업 심의(인수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 등 추진

5. 기대효과

- 경전선 미개량구간(순천~광주송정)의 전철화에 따른 일괄수송체계 구축, 광역통행시간 단축
- 남해안 선벨트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연계협력 발전에 기여



부산-5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① 방사선 연구 인프라와 기술진흥 및 고급인력 양성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의학 연구 및 진료기능 확대추진(계속)
- 기 구축 중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개발 및 신형연구용원자로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계속)
- 동남권 지역에 추진중인 방사선기술분야 핵심시설 연계·활용, 방사선 연구기능 확충, 방사선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기획추진 및 핵심사업 도출('13)
- 도출된 핵심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마련('14)
- 핵심사업 상세 실행계획 마련 및 착수('15~)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기획연구 추진 및 핵심사업 도출	핵심사업 사업비 조달 방안 마련	핵심사업 상세 실행계획 마련 및 착수	핵심사업 추진	핵심사업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 단계, 부산지역에 구축중인 방사선의·과학 관련 국책사업은 시설 장비 구축 중심으로 추진
 - 향후, 방사선연구 및 인력양성 기능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최대 활용 하고 부족부분에 대한 사업발굴 및 적정사업 도출
- 첨단 방사선기술 중심의 산업벨트구축을 위해 교과부의 연구인프라 조성지원 만으로는 한계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국토부·지자체), 산업육성 인프라 조성(지경부·중기청) 등 타 부처의 긴밀한 지원협조 필요
- 원자력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타지역(광주·전남 등)에서 지역균형차원에서 방사선연구기반구축 요구발생 예상
 - 타 지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및 특화전략 차원에서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5. 기대효과

- 첨단 방사선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개발역량을 향상하고, 특화된 강점분야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지원으로 관련 산업발전 선도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첨단 방사선의학 연구 및 진료기능 확대로 동남권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의료관광산업의 핵심적 역할 수행
 - 구축중인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 및 신형 연구용원자로를 기반한 방사선의·과학 산업육성 토대 마련을 통해 첨단 고부가 신산업 창출

부산-6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① 신발관련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② 신발 성능 표준화 및 인증제도 구축	

① 신발관련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부산시는 신발관련 핵심원천부품소재개발 기술혁신 지원 추진을 위해 R&D 3개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
 - ①친환경 도시기반 신발제조 기술개발('13~'17년, 국비 100억원), ②미래 핵심 소재부품 개발('14~'18, 200억원), ③IT융복합 첨단신발 개발('15~'19, 150억원)
- 사업추진 여건,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부 R&D 사업 등에 반영 추진하고,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은 검토·조정하여 추진
 - 우선 '친환경 도시기반 신발제조 기술개발'을 '13년부터 5년간 추진('13년 20억원 반영)하고, '미래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IT융복합 첨단신발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을 검토·조정하여 '14년 이후 추진할 계획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발관련 핵심원천부품소재 개발	예산반영 (일부)	예산반영 (추가확보)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걱정 예산의 확보 가능성(산업계 요청액 전액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
 -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

5. 기대효과

- 고용창출형 성장산업으로 신발산업 도약 가능
 - 생산성 향상 및 도시형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 기업의 생산이익 증대를 통한 국내 신규창업의 확산
- 기능성 신발의 품질 신뢰성 확보로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 촉진

② 신발 성능 표준화 및 인증제도 구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지자체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을 검토·조정하여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내용 검토	예산반영 사업추진	사업추진	-	-

- 취임 3개월 후 예상성과 : 신발성능 표준화/인증제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적정 예산의 확보 가능성(산업계 요청액 전액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

- 지자체 요구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

5. 기대효과

- 고용창출형 성장산업으로 신발산업 도약 가능
 - 생산성 향상 및 도시형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
 - 기업의 생산이익 증대를 통한 국내 신규창업의 확산
- 기능성 신발의 품질 신뢰성 확보로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 촉진

부산-7	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① 도시재생사업 시행 ②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① 도시재생사업 시행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13)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14.상)

* 상임위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거쳐, 13.6월 제정추진

-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시, 부산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검토

* 부산시에서는 총 사업비 1.2조원 중 국비지원 8,130억원 요구 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시재생사업 시행	재생법 제정, 재생기금 조성, 지원조직 신설 등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6월)
- 도시재생기금 조성(연간 1.4조원) 및 지원조직 설치('13.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 및 선도지역 지정('13.하)
- 도시재생사업 추진('14~)

※ '14년 도시재생 사업공모 접수 시 제출된 지자체 수립 재생계획서대로 추진 예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회에 제출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협의 필요
- 제정(안) 주요내용 중 조직신설(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재생기획단, 지원기구, 지원센터 등) 및 기금신설(도시재생기금)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의견조정 필요

5. 기대효과

- 산업기반시설이 저조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초인프라 정비 등으로 자생력 확보

② 첨단융합, 지식서비스 등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재생계획 수립 착수('13.6월) 및 주민·관계기관 협의 후 지구지정 (~'14.6)
- 재생시행계획 수립 착수 등 사업 본격화('14.7~)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생사업 추진	재생계획 수립	지구지정	시행계획 수립	사업착수	사업착수 (계속)

※ '17년말 기준 단지 재생 부분 공정을 90% 목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쟁점 및 애로사항)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 및 용도지역 혼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

- (해결방안) 총사업비 대비 국비 지원 상한액(50%)이 전액 지원되도록 적기 예산 배정 필요

5. 기대효과

- 노후된 산업단지를 첨단전략업종으로의 재편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성장엔진으로 재창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부산-8	수산물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① 남항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② 자갈치시장을 글로벌 수산 관광 명소로 재창조 ③ 공동어시장 조성 적극 지원 (부산 남항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자갈치시장을 글로벌 수산 관광 명소로 재창조하고 공동어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 2012.12.14., 부산 진구 ‘부산지역 합동유세’)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전제조건이 충족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 사업 추진

* 총사업비 규모가 2,562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부산시) 공동어시장 인수	(부산시) 감천항과 공동어시장을 연계한 도매시장 설립·운영계획 수립 (부산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사업기본계획 수립	(정부) 예비타 당성 조사 실시	(정부, 부산시) 사업추 진	(정부, 부산시) 사업추 진
자갈치 시장의 글로벌 수산관광 명소화	(부산시) 사업추진에 대한 자갈치 일원 노점상인 및 어업인과의 협의 완료	(부산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사업기본계획 수립	(정부) 예비타 당성 조사 실시	(정부, 부산시) 사업추 진	(정부, 부산시) 사업추 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공약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선결조건 이행에 어려움 예상
 - 부산시의 공동어시장 인수는 출자조합인 5개 조합간의 청산합의, 인수금액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합의에 상당시간 소요 예상
 - 자갈치시장의 관광명소화 사업은 부산시와 노점상인, 항만시설을 활용하는 어업인들간 사업추진 합의과정에서 마찰 예상

5. 기대효과

- '63년 건립되어 낙후된 공동어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
 - 자갈치시장을 관광 명소화 함으로써 수산물 판매 증가로 인한 어업인 소득 향상,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익 증대 예상
- ⇒ 총사업비 2,562억원의 공사비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약 9,000억원, 고용 파급 효과 약 2,300명 예상

*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참고

대 구

대구-1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①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 첨단의료 R&D 센터 유치·건립, 임상연구기반 구축 - 첨단의료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침복단지 내 첨단의료 R&D센터 유치·건립 타당성 검토(법·제도)
- 대구경북침복단지 차별화전략과 연계한 R&D센터 유치·건립방안 수립
- 개별 R&D센터별 건립 상세기획 및 기 설립중인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와의 연계전략 수립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첨단의료 R&D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법령개정, 상세기획, 제2차 침복단지종합계획 수립, 설립추진	설립추진	설립추진	설립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대구경북 및 충북 오송 첨단단지내에 건립중인 4개 센터(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경부, 실험동물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이상 복지부)의 완공 및 기능 정립 선행 필요('13년말 완공예정-붙임 1 참조)
- 2개 단지를 합성·IT(대구경북)와 바이오·BT(충북오송)으로 차별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바, 양 단지별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균형있는 발전전략 수립이 선행될 필요

※ 대구경북과 충북오송단지의 차별화전략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중복투자 우려

- 첨단단지가 지방에 입지하여 우수 인재·연구개발기관 투자 유치가 어려우므로 적극적 유인방안 강구 필요

○ 해결방안

- 대구경북 및 충북오송 양 단지가 공동기획하여 첨단의료 R&D센터 유치·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2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14~'16)에 반영
- 개별부처(교과부, 지경부, 복지부)는 소관센터의 완공에 대비('13년말 예정), 중장기 발전전략 및 운영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시행
- 단지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 선행

5. 기대효과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

주관부처(보건복지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정부는 4개 핵심연구시설(센터) 완공소요(1,030억원)예산 지원('13) 및 우수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17까지 총 441명 충원)
 - 외부연구기관이 첨복단지의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활용한 아이템(기술, 제품, 물질) 개발 등 사업화지원 개시('13.하반기~)
 - ※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신약·첨단의료기기 분야의 의료제품 개발 발굴지원
 - 지자체(대구시)는 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해 편의시설 구축, 정주여건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 '12.12 현재 8개 업체·기관의 입주 확정, 약 벤처기업 등 20개업체 추가 유치계획('13)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국가 첨단의료허브구축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2013년까지 핵심시설 구축 및 사업화 지원 개시를 위한 소요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

* 총사업비('09~'13, 국비) : 총 2,649억원(건축비 1,497억원, 장비비 1,152억원)

- 공약사항 추진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단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 공약사항 중 '기술교육·산업화지원'은 현재 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추가 검토 필요

※ 첨복단지 지원수요,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합성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구경북의 의료기관, 연구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 국가의료 R&D허브로 육성
 -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로 교용효과 창출, 기술 집적화 도모

대구-2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①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② 대구~광주간 철도건설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①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확보
- 사업비 분담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구권 광역철도망의 단계적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 '17년말 기준 계획 :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획재정부에서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검토 중으로 예타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방안 확정
- 동 사업을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 지정이 필요하나,
 - 사업연장이 62km로 지정요건(연장 50km이내)에 부합되지 않고, 대구시는 지방비 부담(25%)에 소극적인 입장
 - 광역철도 사업기준(지정요건 및 지방비 부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반철도(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5. 기대효과

- 대구 및 경북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② 대구~광주간 철도건설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경제성분석, 지역낙후도, 재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수요가 부족하여 추가검토 대상사업(2021년 이후)으로 분류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11.4월) B/C 0.14

- 중장기적인 여건변화 등을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적정 시점에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1년차	2년차	3~4년차	5~9년차
대구~광주 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적정 추진시기를 검토하여 시행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재정(4.9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이용수요가 적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B/C=0.14$) 중장기적 여건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진 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경전선, 호남선 복선전철 사업과 이어져 서해안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륙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영호남간 지역화합에 기여



대구-3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①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 기술발전·전쟁사·경제사·우주변천·생명진화 등 세계사를 전시하는 테마파크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 방지 및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종전부지 활용방안 검토
 - * 대구시가 추진 중인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13.1~’13.11)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
- 대구시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국고지원 기준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지원방안 마련
 -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제도개선 등 시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전터 개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검토	정부지원방안 마련			

3. 입법조치

※ 연구용역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파악 가능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정부지원방안 및 재정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대구-4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없는 완공
① 88올림픽 고속도로 사업 적기 준공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적정 예산 확보 및 공사 시행으로 '15년말 개통 추진 (필요시 부분 개통)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8선 확장공사	공사시행	공사시행	(부분)개통		

※ '17년말 기준 계획 : 개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연차별 적정예산 미확보시 적기 준공 어려움

5. 기대효과

- 교통수요 증가 및 사고위험(국내 유일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 효과적으로 대처
- 운행시간 30분(116분→86분), 운행거리 11.9km 단축(154.6km→142.7km)으로 영호남의 개발 촉진 및 물류지원 체계의 효율 제고

대구-5	K2 공항 이전 추진
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 근거 마련 ② K2 이전·후적지 활용 방안(도시계획 수립 등) 마련 ■ 주관부처 : 국방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사위에 계류)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법령제정 이후 대구광역시장의 이전 건의시 시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15년	2016년~25년
K2 공항 이전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이전건의시 타당성 조사 및 최적위치 선정	도시계획 반영 및 부지매입, 공사 완료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입법추진계획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사위에 계류)
⇒ 기 발의(의안번호 1079)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행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이전부지 선정에 있어 군용공항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정서상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됨
- 이전비용 및 지원비용 마련을 위해 종전부지 가치상승이 필요

5. 기대효과

-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문제 해결 및 공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
- 소음 배상금과 대책사업비 등 국가 재정부담의 완화 및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

대구-6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①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를 포함한 로봇산업 육성 ② 수성의료지구 내에 SW융합산업단지 조성	

① 로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를 포함한 로봇산업 육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반구축) 로봇 전문기업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로봇혁신센터 및 시제품 제작·제품 양산을 위한 로봇협동화팩토리, 관련 로봇장비 구축

◇ 위치 : 대구시 북구 노원동 일원(제3공단), 부지면적 12,053㎡ ◇ 로봇혁신센터: 연면적 총 7,378㎡, 지하1층·지상4층, 23개 로봇기업 입주 ◇ 로봇협동화팩토리 : 연면적 총 2,788㎡, 지상2층 ◇ 장비: 로봇설계·해석·디지털검증 등 시제품·시작품 가공/제작 장비, 성능·시험 평가 및 품질인증 관련 장비 등 총 40개 분야 100여종 구축
--

- 로봇혁신센터와 로봇협동화팩토리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 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센터구축 본격 착공('13년)

* 롯데제과, SL주식회사 이전완료 및 부지 매매계약 체결(예산은 지방비로 확보)

- 기업·연구소·학계 대상 장비 수요조사 및 장비구축 전문가를 구성하여 도입 대상장비 심의, 확정('14년)

-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에 기업지원 장비 구축('15년)

- 사업화 로봇제품의 성능평가·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축 ('16년)
- (기술사업화촉진) 로봇기술 제품화 및 로봇기술 이전 등을 통해 중소 로봇기업들의 사업화 촉진
 -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매년 기술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기반구축 이후에는 품질인증 분야까지 확대하여 지원('13년 14개 과제 → '17년 20개 과제)
 - 로봇기술 제품화 : 기 개발 완료된 로봇기술에 대한 제품화를 지원
 - * (신청요건)중소기업 단독 또는 기업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지원비율)국비 70% 이내
 - 로봇기술 이전 : 연구기관·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 로봇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제품화 검증 및 사업화 지원
 - * (신청요건)기술보유 연구기관(대학)과 도입기업간 컨소시엄, (지원비율)국비 70% 이내
- (상용화기술개발) 의료, 사회안전, 중소제조 3대 분야 로봇제품 및 로봇 부품(부분품)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매년 R&D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계속과제는 3년간 지원
 - * '13년에 14개 과제를 선정하고 '17년까지 총 39개 과제를 지원(총 436억원)
 - 사회안전분야는 재난 방지·복구, 사회 인프라시설 점검·탐지 로봇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 중소제조분야는 뿌리산업 공정, 섬유공정, 정밀연마공정 등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의료로봇은 재활훈련, 이동보조, 헬스케어, 간호보조 등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로봇클러스터 조성	부지조성, 센터착공, R&D과제선정	센터구축, 기술지원 확대, 장비도입 심의	센터완공, 장비구축 추진	장비도입 완료, 네트워크 확대	품질인증, 성능평가, 자립기반 마련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센터구축 기본설계 완료, 상용화기술개발 14개, 기술 사업화지원 14개 등 총 28개 과제 선정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로봇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용화기술개발과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과의 분야별·제품별 기술개발사업 중복 우려
- (해결방안)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규모, 분야 등을 차별화하여 추진
 - 로봇클러스터조성사업은 제품 상용화 중심 기술개발로 단기(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분야 중심으로 사업 수행
 -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 중심의 기술개발로 중·장기(5년 이상), 10억원 이상/년, 클러스터 특화분야 이외 중심으로 사업 수행

5. 기대효과

- 집적화된 로봇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원스톱 지원을 통해 로봇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로봇제품 상용화기술개발 → 시제품 제작 → 성능평가·품질인증 → 사업화

- 로봇기업 창업 지원, 타산업 영위기업(예 : 기계장비업, 의료기기업 등)의 로봇기업화 유도 등 로봇전문기업 창업보육 및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로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로봇산업을 육성
- 3대 특화분야 상용화기술개발 및 품질인증, 성능평가, 제조지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간 품질인증 20건·시험평가 50건·시제품 제작 지원 50건, 5년간 특허출원 50건 및 등록 10건 기대

② 수성의료지구 내에 SW융합산업단지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차년도, '13) 대구 지역내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 SW융합기술센터 구축 및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실시설계, 운영계획 수립

* SW융합 기술센터 : 건축 8,933m²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

- SW융합기술센터 內 지역소재 중소 SW융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성을 고려, “SW품질 역량강화” SW테스트 베드 우선 구축

* SW 테스트 장비(안) : Load Runner, LDRA, Code Sonar, SPARROW, QAC, TEST Express 등 SW융합기업의 수요기반 구축장비

- 지역 SW융합기업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 중장기 R&D가 필요하고, 정부 정책의 시급성이 높은 6개 핵심기술과제의 기술로드맵 수립 및 지원

〈6대 핵심 기술과제(후보)명〉

No.	과제명	5년간 예산 투입계획(억원)
1	CPS지원 미들웨어 개발	25
2	임플랜터블 플랫폼 기술	25
3	실시간 고장감내 기술개발	20
4	대용량, 초고속, 분산 데이터 고성능 관리 시스템	55
5	대화이해 및 관리기술, 가상-실세계 상호작용 기술	20
6	논리기반 지식표현 및 추론기술	20

- (2차년도, '14) 대구 지역내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계속)
 - SW융합기술센터 구축 및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착공 및 센터 건립 추진
 - SW품질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테스트베드” 장비도입 및 운영
 - * 구축장비를 통한 지역내 중소SW기업대상 품질 테스트,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수요 중심의 SW융합 R&D과제 지원
 - * 6대 핵심기반기술 지원과제 (2년차 지원 계속)
 - * 핵심기반 기술지원 과제와 연계한 6개 응용기술 과제 지원추진
- (3차년도, '15) 대구 지역내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계속)
 - SW융합기술센터 구축 및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센터 건립 완료
 - SW품질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테스트베드” 장비도입 및 운영
 - * 구축장비를 통한 지역내 중소SW기업대상 품질 테스트,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수요 중심의 SW융합 R&D과제 지원
 - * 6대 핵심기반기술 지원과제 (3년차 지원 계속)
 - * 핵심기반 기술지원 과제와 연계한 12개 응용기술 과제 지원추진 (기존 6개, 신규6개 과제 추진)
- (4차년도, '16) 대구 지역내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계속)
 - SW융합기술센터 구축 및 인프라를 활용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추진

- * 인프라 내 SW융합관련 산·학·연 유치 및 운영지원, 신기술 정보 분석, 발전전략수립 및 기술과제 기획 및 지원, 관리
- SW품질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테스트베드” 장비도입 및 운영
- * 구축장비를 통한 지역내 중소SW기업대상 품질 테스트,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수요 중심의 SW융합 R&D과제 지원
- * 6대 핵심기반기술 지원과제 (4년차 지원, 완료)
- * 핵심기반 기술지원 과제와 연계한 12개 응용기술 과제 지원추진(계속)
- (5차년도, '17) 대구 지역내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완료)
- SW융합기술센터 구축 및 인프라를 활용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추진
- * 인프라 내 SW융합관련 산·학·연 유치 및 운영지원, 신기술 정보 분석, 발전전략수립 및 기술과제 기획 및 지원, 관리
- SW품질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테스트베드” 장비도입 및 운영
- * 구축장비를 통한 지역내 중소SW기업대상 품질 테스트, 컨설팅 등 지원
- * SW시험/표준·인증 평가지원 및 표준화 지원기구 유치 추진
- 지역수요 중심의 SW융합 R&D과제 지원
- * 6대 핵심기반기술 지원과제 (종료 결과물의 활용 지원)
- * 핵심기반 기술지원 과제와 연계한 12개 응용기술 과제 지원추진 (완료, 상용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센터구축, 계획확정, 부지매입, 실시설계, R&D과제추진	센터 착공식, R&D과제추진	센터 건립완료, 클러스터 사업추진, R&D과제추진	클러스터 활성화, R&D과제추진	클러스터 활성화, R&D과제추진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중장기 사업의 경우, 적절한 총사업비 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의 한정적 문제로 인하여, 삭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 적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

5. 기대효과

-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SW거점 조성으로 클러스터 내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장비 구축 등을 통해 SW융합 조기 활성화 유도
 - 국내 산업규모 대비 수도권 SW산업 현황 : 생산액 93%, 고용 90%, 기업수 75%
- SW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내 SW고급인력 1,000명 유입 및 고용 연계형 R&D지원을 통한 신규 청년 일자리 400개 창출
- SW융합산업은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제조·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신경제 창출

대구7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①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환경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미래 물산업 트렌드를 선점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물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 연관기관·기업을 단지별로 집적화하여 상호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주요사업) 물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
 - 물산업 육성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물산업진흥원 건립
 - 물 관련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부품소재단지 조성
 - 물기업이 개발한 신기술(하폐수처리·재이용, 정수처리 등)을 직접 현장 적용하면서 실용화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 순환 시범지구 구축 등
- (세부 추진계획)
 - 물산업 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연구 및 예타(기재부) 준비 ('13년)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및 기본·실시설계 (‘14~‘15년)
-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15~‘17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타당성 조사	예타 및 설계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조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조성으로 미래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물 관련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창출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물분야 최대 국제 행사*인 제7차 세계물포럼('15년 대구·경북)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최지인 대구·경북을 물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

* 제6차 세계물포럼('12, 프랑스)시 173개국 약 3.5만명(연인원) 참석

* 네덜란드는 2차 물포럼 개최('00)를 계기로 물 선도국가로 부상

- 수자원 조사 및 정보화, 물산업 동향 조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가칭)수자원정보기술원”의 대구·경북 지역 설립('14년)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산업 진흥의 코어역할 수행

* 現 “유량조사사업단(총원 123명, 연 예산 130억원)”을 확대·개편하고, 법정화 추진

○ 수자원 관련 연구·교육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UNESCO IHP 연구·교육센터 설립*('15),물관리 R&D Test-bed 조성

* UNESCO IHP 집행이사회 심사 등을 고려 現 수공 연구원(대전)에 유치('13말), '15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전 설립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물산업 클러스터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수자원정보기술원 설립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 UNESCO IHP 연구센터 설립		

* 금년 상반기에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완료('13.4 예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물산업진흥원(가칭 “수자원정보기술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개정 필요
 - * 기존 유량조사사업단(유량조사사업 추진, 연 120억 규모)을 이전·활용할 예정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물산업 전문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내·외
- 물산업 범위는 환경부의 상하수도, 수질기술 외에도 국토부의 담수플랜트, 수자원확보·홍수예방 등 통합물관리,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
 -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추진이 바람직
 - * (국토부) (가칭)수자원정보기술원 설립, UNESCO IHP 연구·교육센터 이전 설립 등
 - * (환경부) 상·하수도 등 물산업 실증단지 조성 등

5. 기대효과

- 제7차 세계물포럼('15년, 대구·경북 개최)을 통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핵심 앵커기능을 수행
 - 물관련 주요조직 설립·유치 및 물산업 실증단지(Test-bed) 조성

인 천

인천-1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 연차별 지원
 - (경기시설 등) ‘보조금법’에 따라 경기장(9,736억원)은 30%, 경기장 진입도로(1,198억원)는 50%를 정부에서 지원
 - * ‘12년까지 3,209억원을 인천AG시설 건립에 기 지원
 - (운영비) 총 운영비(5,454억원)의 30%선에서 지원
 - * ‘12년까지 302억원을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기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	-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제경기대회 정부지원은 ‘보조금법령’ 등에 따라 일관되게 지원(경기장 30%, 하계도로 50%, 동계도로 70%)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지역 과도한 지원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국제경기대회를 경제적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정부지원 원칙을 고려하여, 국회 계류 중인 대회지원법 개정보다는 보조금법령에 따른 지원을 추진

5. 기대효과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천-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① 유료도로법 개정 ②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통행료 폐지) 연구용역('13~'14년) 등을 통해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고속도로 해제 후,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
- (지하화) 과거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중단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사업 재착수시 적극 협조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행료 폐지	지자체 이관 등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연구용역 완료 및 대안 마련	대안 마련시 후속조치		
지하화	지하화 사업 착수 협의	협약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협약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협약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협약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 '17년말 기준 계획 : 인천시와 정상 협의시 지하화 사업 착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경인선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다른 노선과 지역간 통행료 불균형으로 투자비가 회수된 타 노선(경부, 울산선 등) 무료화·감면 요구가 촉발되어 현행 요금체계(통합채산제) 유지 곤란
 - 타 지역 통행료 인상 불가피로 지역균형발전 저해가 우려되며, 경인선의 물류기능 상실 및 서울외곽선 교통혼잡 가중
 - ☞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별도 검토

5. 기대효과

- 경인선 요금체계 개편, 지하화 등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대

인천-3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① GCF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 세계적 수준의 Green-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구축 ②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 ③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① GCF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②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주요 국제기금 유치 도시의 성장 모델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소 등을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13 상반기)

* 관련 연구용역 수행 중('12.12~'13.2, KMPG·네모파트너스 공동, 1.4억원)

- MICE 인프라(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기 확충 추진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다각적 활동 지속
- 송도지구 항만 배후부지 조성(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B)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MICE 인프라 조기 확충	컨벤시아 2단계 착공	2단계 공사	2단계 공사	컨벤시아 2단계 준공	
송도 글로벌 대학 캠퍼스 조성		1단계 준공 2단계 착공	2단계 공사	2단계 공사	2단계 공사
항만 배후부지 조성	아암물류단 지, 신항물류 단지(B) 기반공사 착공	아암물류단 지, 신항물류 단지(B) 기반공사 준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03년 지정된 이후(3개 지구, 총 169km²), '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이 다소 더딘 상황('11년말 기준 37.5% 개발)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12.10.20)를 계기로 송도를 금융, 컨설팅, MICE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침체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기대

5. 기대효과

- 개발완료시 생산유발액 53조 4,3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2조 4,370억원, 고용유발 약 13만명('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당시 기준)

③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인천시에서 자체 타당성을 확보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후속 사업절차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계획 보완	예비타당성 조사시행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 '17년말 기준 계획 : 설계 실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자체 타당성확보가 필요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나, 인천시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12.5, B/C=0.56)

- 아울러, 전체 사업비 12,337억원의 40%인 4,935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하나,
 - 인천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건설중인 인천2호선의 경우도 개통시기를 '14 → '16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는바('12.5), 인천시 재정상황 감안 필요(도시철도사업 사업비 분담비율 : 국가 60%, 인천시 40%)

5. 기대효과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제고

인천-4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① 물류체계 개선, 관광·레저 중심으로 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 ② 수변 물류거점도시로 조성 - 인천항, 인천·김포공항, 한강과의 연계성을 강화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물류 활성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운항여건 개선과 맞춤형 포트 세일즈 강화 등을 통해 물동량 증대를 도모
 - ※ 선박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11~'13)하고, 예도선료도 감면(다만, 향후 아라뱃길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면제와 감면을 적극 검토)
 - 정부·K-water 합동의 화물유치설명회를 지속 개최(4회 개최)하고, 초중량 화물, 중고자동차 등 전략화물에 대한 타겟마케팅 추진
 - ※ 부두특성에 맞는 전략화종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추진 ⇒ (컨부두) 중고차, 건설기계, (철제부두) 발렛, 코일, (다목적부두) 재활용, 철제
 - 기존 육송화물의 아라뱃길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교통 보조금」지원('13년 예산총액 75억원)
 - ※ 아라뱃길에 대한 전환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 서울시 쓰레기와 경기도 유류화물의 아라뱃길 운송 유도
- (지역개발) 인천터미널은 물류, 김포는 관광·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 인천터미널은 배후에 인천시 중고차단지의 경인항 이전 추진(아라오토밸리)

- 김포터미널에는 요트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호텔, 대형쇼핑몰 등 입점을 유도

※ 수공/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마케팅 추진중(현대 아울렛 입점 확정, '12.12월)

- 인천(물류, 항공교통)과 서울(금융·비즈니스)을 잇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김포터미널 일대에 Canal City(물류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검토중(수공)

※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13.2~'14.2, 총 사업비: 5억원)

- (수변공간 이용) 아라천 수변공간을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

-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레저 시설을 확충하고, 버스노선 확대·배차간격 단축 등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추진

※ 카페촌·먹거리촌 조성, 지자체 버스노선에 대한 적자보전 방안 검토중

- 강변에 계절별 정원(봄꽃, 여름녹음, 가을단풍)을 조성하고, 루미나리에 행사 등을 개최하여 야간경관을 조성 ⇒ 유람선 등 여객관광 활성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아라뱃길 물류활성화/ 주변지역 개발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지속점검 제도개선	지속점검 제도개선	지속점검 제도개선	지속점검 제도개선

* '13년중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연구” 타당성 조사(수공)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

* '13년 상반기중, 한강내 선착장의 안정적 사용방안 마련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아라뱃길은 운영초기단계로서 물동량 증가, 주변개발 등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필요 ⇒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5. 기대효과

- 인천항, 평택항 등 주변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고, 육송이 어려운 초중량화물(플랜트 설비) 운송 확대 등 물류 효율화에 기여
 - ※ 교통혼잡 완화편익 6,827억원, 물류비용절감편익 4,869억원 예상 (KDI. 연구결과('08))
 - ※ '12년 별내·포천발전소의 발전설비 11기를 수송하여 28억원의 비용절감 및 150일의 기간단축
- 강과 바다를 이어, 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창출
 - 수도권 서부지역의 관광·물류 명소화 ⇒ 송도·청라지구 등 주변지역 발전

인천-5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①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 지역장애인을 위한 자기계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의 취미활동 등 교양교육,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및 인천시 등)과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한 계획(부지확보 등)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재원 분담 협의('13)
-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추진('13~)

2. 추진일정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 평생교육관 건립	기초조사	토지 매입	교육관 건립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장애인 복지관 등 지자체가 운영중인 평생교육시설과의 차별성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5. 기대효과

- 인천광역시 장애인(13만명, 12.9기준)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 수준 향상

인천-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인천시에서 재정여건 및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연장('14 → '16)하여 '1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 인천시, 기획재정부와 조기 개통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조정 협의
- '14년 아시안게임 개최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2호선 조기 개통	공사계속	공사계속	공사계속	개통	-

※ '17년말 기준 계획 : 개통('16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12년말 공정률은 51%로서 공기단축을 통하여 '15년말 개통시 '14~'15년간 각각 1,473억원의 추가 국비지원 소요되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필요

* 국비지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14	'15	'16	'17	'18
'16년개통시	5,350	1,202	1,202	1,202	872	872
'15년개통시	5,350	2,675	2,675	-	-	-

* ('17~'18년 국비지원 1,744억원은 인천시 선투입 사업비 정산금액)

5. 기대효과

- 인천 서북부 주민들의 도시철도망 이용으로 교통편리성 제고

인천-7	인천항 경쟁력 제고
①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 → 16m)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인천신항 항로증심준설 사업 타당성재조사 시행 및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 착수('13)
- 인천신항 항로증심준설(1단계) 사업착공('14)
- 항로증심 준설토 투기장(2단계) 조성 용역 착수('15)
 - * 총 준설량 3,526만㎥ 중 약1,600만㎥(1단계)는 기존 투기장에 투기 가능하나 잔여 증심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는 신규 투기장(2단계) 조성 필요
- 항로증심 준설토 투기장(2단계) 조성 공사 착공('16)
- 인천신항 항로증심준설(1단계) 사업준공('17)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천신항 항로증심준설	타당성재조사 , 설계용역	준설사업 (1단계)착수	투기장 (2단계) 용역착수	투기장 (2단계) 공사착공	준설사업 (1단계)완료

* '13년 상반기 : 사업타당성 재조사 요청(기재부)

※ 1단계 준설사업 완료 및 2단계 신규 투기장 축조공사 진행으로 전체 사업 51% 공정 진행('17년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항로 중심사업은 약7천3백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당국의 타당성재조사 등 선행 필요(타당성 미확보시 추진불가)

- 인천항의 물동량 전망, 입·출항 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중심 구역의 단계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재조사 추진('13)

※ '13년 예산 설계비 10억원 반영(수시배정 사업으로 4/4분기 배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총사업비/사업내용) 7년 / 7,290억원 / 항로 중심준설 약 3,526만m³(약3,970억원), 투기장 조성(호안축조)약 6.3km(약3,320억원)

5. 기대효과

- 8,000TEU급 이상 대형선박의 상시 입·출항가능한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도약

광 주

광주-1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 자동차산업 부지확보와 공장이전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클린디젤차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반구축 지원
- 총사업비 : 1,871억원 (국비 1,283, 시비 366, 민자 222)
 - * 국비 : '11년 40억원, '12년 120억원, '13예산 140억원
- 사업기간 : '11 ~ '15 (5년)
- 위 치 : 광주시 진곡산업단지

- 부지확보, 공장이전,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업계수요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업계의 지원 요청시 지원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적극 검토

2. 추진 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예산반영 사업추진	예산반영 사업추진	예산반영 사업추진		

※ 부지확보, 공장이전지원, 생산라인 유치의 추진 일정은 이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관련기업과 추진일정을 협의할 필요

※ 취임 3개월후 예상 성과 : 동사업은 중장기 R&D사업으로 사업완료시점에 가시적 성과 예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관련사업 예산의 정상적인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5. 기대효과

- 클린디젤 핵심부품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수출시장 확대가능
-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의 기술 고도화 견인

광주-2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① 5·18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 추진 ② 교육·문화공간 확대 ③ 광주교도소~시가문화권~무등산~구도청 및 5·18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관광벨트 구축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5·18민주화 관련 상징시설물과 공원화 사업추진(5·18 민주평화광장 조성, '13년~'15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원도심 활성화 및 5·18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원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 광주 동구 금남로 및 충장로 일원
 - ※ 조성면적 23,750㎡, 소요예산 : 1,300억원 정도(국비)
- 교육·문화공간 확대(민주·인권·평화센터(한국민주주의 전당)조성, '13년~'17년)
 -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포함한 민주와 평화가 공존하는 테마공원 조성
 -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중 (법무부)
 - ※ 조성면적 330,000㎡, 소요예산 : 3,300억(국비 3,000, 민자 300)
- 세계적인 인권관광벨트 구축(5·18 아카이브센터 구축사업, '12년~'14년)

- 5·18민주화운동 유물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영구보존 필요
- 5·18아카이브 기본설계 용역('12.3), 카톨릭센터 건물 리모델링, 전시 콘텐츠 및 기록물 D/B구축 등

※ 조성면적 5,742.41㎡, 소요예산 : 297억(국비 162, 시비 135)

→ 기 국비 지원 30억원('12년), '13년 45억 지원예정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18 민주평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사업완료		
민주 인권 평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사업완료
5·18 아카이브센터 구축	예산확보	사업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필요

5. 기대효과

- 한국민주주의 전당 등 시설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의 발전 기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변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광주-3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① 부산~순천간 철도 고속화 ② 송정~순천간 철도 개량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전선(삼랑진~순천~광주송정) 구간중 일부구간(삼랑진~진주, 광양~순천)은 既완료, 공사중인 진주~광양구간은 '15년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 순천~광주송정 구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기 착공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남해안철도 고속화	-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순천~광주송정의 경우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 실현에 차질 우려
 -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지원,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교통네트워크 연결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기재부)하고, 별도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공약사업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 등 추진

5. 기대효과

- 경전선 미개량구간(순천~광주송정)의 전철화에 따른 일괄수송체계 구축, 광역통행시간 단축
- 남해안 선벨트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연계협력 발전에 기여



광주-4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① 양동시장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화사업 추진 ②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복원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환경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생태하천복원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13~'14년)
- 하천별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15년)
- 생태하천복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15~'17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주변 환경 조사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생태복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도심권 집중개발로 복개되어 하천기능을 상실한 도심하천의 복원으로 녹색 생활공간 재창조
- 오폐수 유입차단을 위한 분류식 하수도 설치로 수질개선 및 복개하천 철거로 인한 도심 교통망 재구축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광주천은 광주시에서 양동시장 현대화사업(재개발 등)을 시행시 토지이용계획에 등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

* 양동복개상가(2층18,932㎡, 점포361개) 현대화사업 시행 후 '15년부터 생태하천 복원 L=400m

- 용봉천·서방천은 대체도로 지정·개설 등 보상 및 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추진

* 용봉천 1.6km(8차로), 서방천 1.2km(4~6차로)에 대한 교통대책수립후 '15년부터 복원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 도심하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생태하천 0.4km 복원	생태하천 1.0km 복원	생태하천 1.0km 복원

※ 상가 재개발 계획 및 간선도로 이설 등의 사업 시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일정은 유동적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선 시장 현대화 사업, 대체도로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광주시와 협의하에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5. 기대효과

- 생태·문화공간 조성, 홍수피해 방지, 도심환경 개선 등

광주-5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① 광주외곽으로 연장 16.15km의 4차로 건설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현재 추진중인 구간의 실시설계를 '14년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15년)

* 광주외곽 총 연장 16.15km 중 교통량이 적고 민원이 극심한 6.8km는 보류 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 추진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공사시행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연차별 적정예산 미확보 시 적기 준공 어려움

*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

5. 기대효과

-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로 물류 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 확보

광주-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①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갤러리 설치 등 예술 창작활동 지원 - 문화체험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치 -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국내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교류 및 관광활성화 지원〉

-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광주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기존문화 시설과 연계한 「창작예술인촌(아시아 아트컬처파크)」 조성
 - * (비엔날레 국제타운) 국가별 비엔날레 전시관(파빌리온), 공방촌 등 조성 및 관광객을 위한 인접 문화시설간 접근성 개선
 - * (아시아아트컬처파크) 예술인 창작거주 구역(예술인의 집, 창작공방, 사랑방), 관광객 교류구역(체험공방, 예술서당), 예술장터 등 조성
- 구)광주여고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게스트 하우스 조성
 - * 광주 구)서구청사 활용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13.8월 개관예정)
 - * 구)광주여고 활용 「예술인 게스트하우스」 조성('15.2월 개관예정)
- 문화전당과 연계, 지역특색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예술 활성화
 - * 남도전통 오감자원(한옥, 남도정원) 활용한 체험관광테마마크 「오감 한옥마을 조성」
 - * 대인시장 및 예술의 거리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 공원 등 인프라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송암산업단지의 재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콘텐츠시설을 집적화하는 「광주디지털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실감콘텐츠 제작센터, 디지털콘텐츠 기획·창작지원센터,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 건립 등 3D콘텐츠 미디어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외예술인 창작활동·교류 및 관광활성화 지원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예타신청 설계착수	설계완료 조성착수	조성 (계속)	조성 (계속)	조성 (계속) *완료 (18년)
-아시아아트컬처파크 조성	설계완료	조성착수	조성 (계속)	조성 (계속)	조성완료
-아시아문예창작공간 조성	개관(8월)				
-예술인게스트하우스 조성	부지매입	설계완료	개관(2월)		
-오감 한옥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설계완료	조성착수	조성 (계속)	조성완료
-문화예술활성화프로그램운영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 디지털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신청	설계완료 조성착수	조성 (계속)	조성 (계속)	조성 (계속) *완료 (18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지방재정의 취약, 사업대상 민간부지 취득 어려움 예상
- (해결방안) 민간자본 최대유치 노력, 지역주민 대상 의견수렴 및 사업 효용성 적극 홍보

5. 기대효과

- 문화·예술·관광 위주의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 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광주-7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① 대표적 저탄소산업인 LED 등 광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의 친환경도시를 지원 ② 녹색 산업 육성, 녹색 환경도시 모델 사업시행 - 자원순환도시 구축	

① 대표적 저탄소산업인 LED 등 광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의 친환경도시를 지원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既추진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

- (기반구축) LED융합산업, 레이저산업의 기반을 광주 및 인근지역에 구축
- LED융합허브기관(한국광기술원)을 중심으로 기존의 LED융합센터*간 네트워킹 강화(5년간, '12~'16)

* 지역별 LED융합센터 현황

- (호남권) LED농생명융합기술센터(전북대)
 - (대경권) LED-IT융합기술센터(영남대)
 - (수도권) LED융합기술지원센터(광교 나노팹)
 - (동남권) LED해양융합기술센터(부경대)

- LED조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실증센터 구축 및 광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5년간, '09~'13)
- 차세대 마이크로레이저 시스템 기반(5년간, '11~'15) 및 펄스융합 기술기반구축(3년간, '13~'15)
- (기업지원) 既구축된 지역내 연구장비를 적극 활용·개선하여 LED를 포함한 광산업체의 핵심 애로기술 해결(5년간, '09~'13)
- (기술개발) 조속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시장선점이 필요한 광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광소재 및 부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5년간, '11~'15)
- 글로벌 최고 효율의 LED조명용 칩개발(3년간, '12~'14)
-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모듈 기술지원(5년간, '10~'14)

〈 신규 사업 추진 〉

- OLED조명산업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광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고도화 사업 등 타당성 조사 준비('13년)
-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개사업 각각 추진, '14년 상·하), 사업추진('15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지역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기존 사업추진,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준비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추진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착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LED 등 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LED, 레이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광산업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구축

② 녹색 산업 육성, 녹색 환경도시 모델 사업시행

- 자원순환도시 구축

■ 주관부처 : 환경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주관부처(환경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교통수단 등 도시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확대

· (방향) 전기·수소에너지 사용 교통수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충전시설)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 (추진계획) 전기차('11년~) 및 수소연료전지차('13년~) 보급과 병행하여 전기차('11년~) 및 수소차('13년~) 충전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

* '13년 수소충전시설 1기 및 수소차 5대 시범보급

-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하여 '탄소은행제' 지원 확대

·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은행제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13.1월~) 및 '탄소은행제' 도시 CDM방법론 개발('13.7~'14년)

2. 추진 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소차 보급확대	수소차 충전소 시범보급(차 량5, 충전소 1기)	수소차 충전소 시범보급 계속(차량10, 충전소1기)	수소차 충전소 시범보급 계속(차량10, 충전소1기)	수소차 충전소 시범보급 계속(차량10, 충전소 1기)	수소차 충전소 시범보급 계속(차량10, 충전소 1기)
도시 기후변화대 응센터 시범운영	도시 기후변화대응 센터 시범운영 (계속)	도시기후변화 대응센터 확대 개편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운영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	탄소포인트제 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계속)	탄소포인트제 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계속)	탄소포인트제 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계속)	탄소포인트제 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계속)	탄소포인트제 와 연계한 탄소은행제 지원(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충전시설 입지 기피 및 수소연료 전지차의 안전인증기준 등 미비로 양산체제 지연 우려
 -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시유지 및 도시외곽 부지확보 필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증기준 조기 마련

5. 기대효과

- 수소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다변화
- 탄소중립도시 관련 인프라와 연구기능이 종합된 ‘싱크탱크’ 운영으로 국내외 탄소중립도시 확산 선도

관련부처 계획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주 등을 유형별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국토계획법(제127조)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 R&D를 통해 개발중인 탄소저감형·친환경 도시 계획 및 관리기법 등을 시범적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선도모델 조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예산반영	계획수립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 '17년말 기준 전체 공정률 75%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쟁점사항)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관련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을 위한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해결방안) 범부처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5. 기대효과

-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된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모델’을 랜드마크化하여 녹색도시 조성 확산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4.6월까지 호남권(광주 생산기술연구원, 전북대), 충청권(충북 TP), 대경권(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중심으로 태양광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태양광 분야 시험장비 구축과 신재생 부품·소재 제조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 (사업비) 3년(‘11 ~ ’13)간 3개 지역권(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에 총 240억원
- (사업 내용) 결정질 태양전지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분야의 소재소자에 대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내구성을 시험 평가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 (구축 현황) 2차년도 시험장비 도입과 더불어 테스트베드 시운전과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추진 중

- 현재 구축중인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태양광 분야 광역 클러스터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5년간, '15~'19)
 - 호남권(태양광 소재), 대경권(태양광 부품), 충청권(태양광 제품)의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태양광 분야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
 - 제품 양산 및 검인증 장비 구축, 전문기업·연구소·학교 등 관련 네트워크 집적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 수행
 -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1단계 사업(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분석 및 2단계 사업(클러스터 조성)의 구체화 및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12.10월~'12.12월)
 - '13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 '15~'19년, 태양광을 포함한 풍력, 연료전지 등 총 1,300억원 규모(태양광 분야 200억원 규모)

< 클러스터 주요 기능 >

- 태양광 인력양성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태양광 인력 양성 지원센터 구축
 - 태양광 기업 주문식 맞춤형 현장 전문인력,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확대
- 구축 인프라 활용 현장 맞춤형 태양광 인력양성 교육
 - 마이스터고, 특성화 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태양광 현장기능 인력양성
- 글로벌 태양광 비즈니스 센터 개설 및 기업 지원
 - 태양광 관련 기업 All-in-one Business 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 태양광 테스트베드 연계를 통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술 멘토링 지원
 - 애로기술진단 및 전문가 Pool을 활용한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태양광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기술 DB 활용을 통한 기술지원
- 개발된 유망상품 사업화 촉진 및 기술 가치 평가 지원
 - 맞춤형 특허맵 지원, 사전 특허 분석 지원
- 국내외 업계 정보,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 및 활성화
 - 지역 태양광 관련 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기별 최신 기술 및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 자료 제공
- 권역별 정보 교류를 위한 초 광역권 기술 교류회
 - 권역간 클러스터 및 기업 협의체, 정보제공 및 기술교류회 운영
- 해외 선진기관 협력네트워크 및 인력교류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전문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한 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지역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15년 예산반영 추진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 취임 3개월후 예상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필수적임
 - 해외사례 분석, 경제성 분석 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
-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15년
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14.6월 종료)과 약
6개월 정도의 사업기간 공백 발생
 -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5.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태양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호남(소재평가), 대경(시험플랜트), 충청권(예비인증 기능) 등 권역
별로 특화된 태양광 산업 집적화 및 기업 동반 성장 유도
- 태양광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된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
력 강화 및 차세대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대 전

대전-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 국고 지원 ②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에 대한 조속한 정책 결정 완료 필요
 - 부지매입비의 분담주체, 투입시기 등 분담방안에 대한 기재부·대전시와의 협의 및 최종 정책결정('13년 상반기)
 - ※ 사업시행자는 '13년 실시계획은 차질없이 수립(약 80억원 투입 예정)하나, 부지매입비 확보 여부에 따라 토지보상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
 - '14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13년 상반기)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추진('14~'16)
 - 거점지구 개발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관기관간 협의채널 유지('13년~)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해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및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추진
 -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강화 및 성과확산 촉진 기반마련을 위한 '과학벨트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13년~)

- 기능지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 사업 지원('13년~)
-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 창출·지원과 거점지구에 필요한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추진('14년~)
- 과학벨트 성과확산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기능지구별 Biz-Connect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과 전시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등 개최('15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 확보방안 정책 결정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
거점· 기능지구 간 연계강화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부지매입비 분담방안에 대해 기재부, 대전시 등 유관기관 이견
 - '14년 부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LH)의 사업비 조달 부담 등으로 토지보상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여 개발사업 일정에 차질 우려

※(기재부) 지자체 혜택,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 대전시 분담필요

(대전시) 국책사업이므로 전액 국고부담 필요

※ 부지매입비 미반영에 따른 영향

- 부지가 既 확보된 기초과학(연) 캠퍼스(광주, 대구 등)도 본원공사 미착공으로 연계 지연
-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지역주민 반발 예상
- '14년에도 미확보시 재무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우려

○ 해결방안 : 기재부,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

5. 기대효과

- 거점지구의 연구 및 정주기반 등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과학벨트를 글로벌 지식창출 거점으로 육성
- 거점지구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세종시~대덕 테크노밸리 연결 광역도로 조기 건설(~'15)
-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4-2 생활권에 외국인 주거, 학교 등 정주 여건 조성(~'15)
- 행복도시내 외국 대학 설립 허용에 따라, MOU체결된 글로벌 대학 타운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외국명문대학 유치 추진('13~)
- 대덕 테크노밸리의 첨단연구산업단지와 세종시 내 기업 유치를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를 촉진('13~)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종시~대덕 테크노밸리 광역도로 건설	예산집행	예산집행	준공		
외국인생활권 부지·기반 조성	예산집행	예산집행	완료		
외국대학 및 기업 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

※ '15년까지 세종시~대덕 테크노밸리 광역도로 준공 및 외국인생활권 조성 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덕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문제 해결 필요
 - 교과부와 기재부, 대전시의 협의 필요
- 세종시가 기능지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족성 조기 확보 필요
 - 주거, 교통, 교육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기능지구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확립 필요

5. 기대효과

-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상호 교류 활성화로 대덕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R&D특구 육성 가능
- 외국인 생활권 조성에 따라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어 과학벨트에 국제적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가능
- 세종권내 외국명문대학이 유치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가능
- 세종권내 첨단연구산업을 유치로 인해 거점지구에서의 연구결과의 산업화 가능

대전-2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①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 지원 ②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국고 지원 및 공사비 일부 지원	

①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충남도청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14~'17)

- 세계민속박물관*, 창작활동·교육연구공간, 한국식 정원 등 박물관 창작지구 조성 추진

* 지구촌 문화의 집적 공간으로 각국의 공연, 전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청 청사 부지현황]

- 소재 : 대전 중구 중앙로 / 건립 : 1932.8월 / 등록문화재 제18호
- 규모 : 부지 25,456㎡(7,700평), 연면적 4,798㎡(1,450평), 지하1/지상 3층
- 소요예산(안) : 총 4,400억원(추정)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연계 확보

2. 추진일정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후 수립예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지자체와 협의, 구체계획 수립 후 추진

5. 기대효과

- 충청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도모

②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국고 지원 및 공사비 일부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지 공동화 방지 및 종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종전부지 활용방안 검토

* 대전시가 추진 중인 “근대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린 시설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12~’13)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

- 대전시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국고지원 기준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지원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제도개선 등 시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청이전법 개정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검토	정부지원방안 마련			

3. 입법조치

※ 연구용역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파악 가능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정부지원방안 및 재정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 문화재로 등록된 충남도청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및 문화재청과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대전-3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② 신탄진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해 '1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 신청('12.12 우리부→기재부)
-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국토균형발전,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기 착수 추진
- 기본계획 등 절차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완료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사 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비용(384억원)은 철도건설법(영 제22조)상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예산으로 이설 곤란

* 대전시는 인입선('76년 신설)이 도시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국가부담 이설을 지속 요구

- 인입선 이설은 사업추진,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충청권내 거점 도시를 연결하여 철도 중심의 충청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기여
- 대전광역시 인접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광역권 사회기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전-4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①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② 지방비 매칭비율 완화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LH(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여건, 주민·지자체 의견 및 주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기 및 구역 조정이나 사업방식 변경* 등 다양한 대안 마련

※ 공동주택방식 → 현지개발방식, 수용방식 → 관리처분방식

-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확대*로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

※ 국고지원 비율확대(안) : (현행) 15% → (개선) 30~50%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국 국고지원 비율이 평균 15%에 불과

- 국고지원 비율 확대에 의한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매칭비율을 완화 (국고 매칭비율 상향)

※ 광특회계(도시활력증진사업)의 국고보조율(매칭비율, 현행 50%) 상향을 기재부와 협의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12.12~'13.6월)

- 국비지원 확대방안 협의 및 예산 확보(∼'13.12월)
-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14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반시설비 지원확대로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재부 협의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특회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하나로 지원되므로, 국고보조율(매칭비율) 상향을 위해서는 도시활력증진사업 전체(중전 16개 사업 등)의 매칭비율이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광특회계(포괄보조사업)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회계 전환 필요

5. 기대효과

-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노후·불량주거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고통받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대전-5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①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적극 검토 ② 도시철도 1호선의 과학벨트 연장구간(16km) 타당성 검토	

①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적극 검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12.11, B/C = 0.91, AHP = 0.508)되어 대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 대전시에서 기본계획을 우리부에 제출하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승인 후 기본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전2호선 조기 착공	기본계획 수립	기본, 실시설계	착공	공사계속	공사계속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15%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대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 제고

② 도시철도 1호선의 과학벨트 연장구간(16km) 타당성 검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대전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확보 후, 사업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시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전1호선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타당성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 '17년말 기준 계획 : 설계 시행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전1호선 연장은 과학벨트 건설사업과 연계검토가 필요하며, 대전시와 협의 후 대전시의 자체 타당성 검토 추진 필요
- 동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사전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하나, 대전시는 1호선 연장보다는 2호선 조기착공이 시급하다는 입장

5. 기대효과

- 과학벨트와 대전도심을 연결함으로써 과학벨트 활성화 제고

대전-6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① 대전역사 주변을 대전의 랜드마크화하고 동시에 철도 중심으로 육성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4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준공에 맞춰 선상역사를 우선 증축하고, 선상주차장, 서광장데크 등 부대시설은 철도공사·공단, 대전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설치
 - * 기존 주차공간이 충분하므로 선상주차장 및 데크(차량 진입용) 중·장기 검토
- 선상역사 증축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후 공사 착공('13.5월)
- 선상주차장 및 데크 설치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립('13.하반기)
 - ※ 복합환승센터는 수요 여건, 투자자 등을 감안 장기적 검토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상역사 증축	공사 착공	완공			
부대시설 설치	관계기관 협의				

※ '17년말 기준 계획 : 선상역사 증축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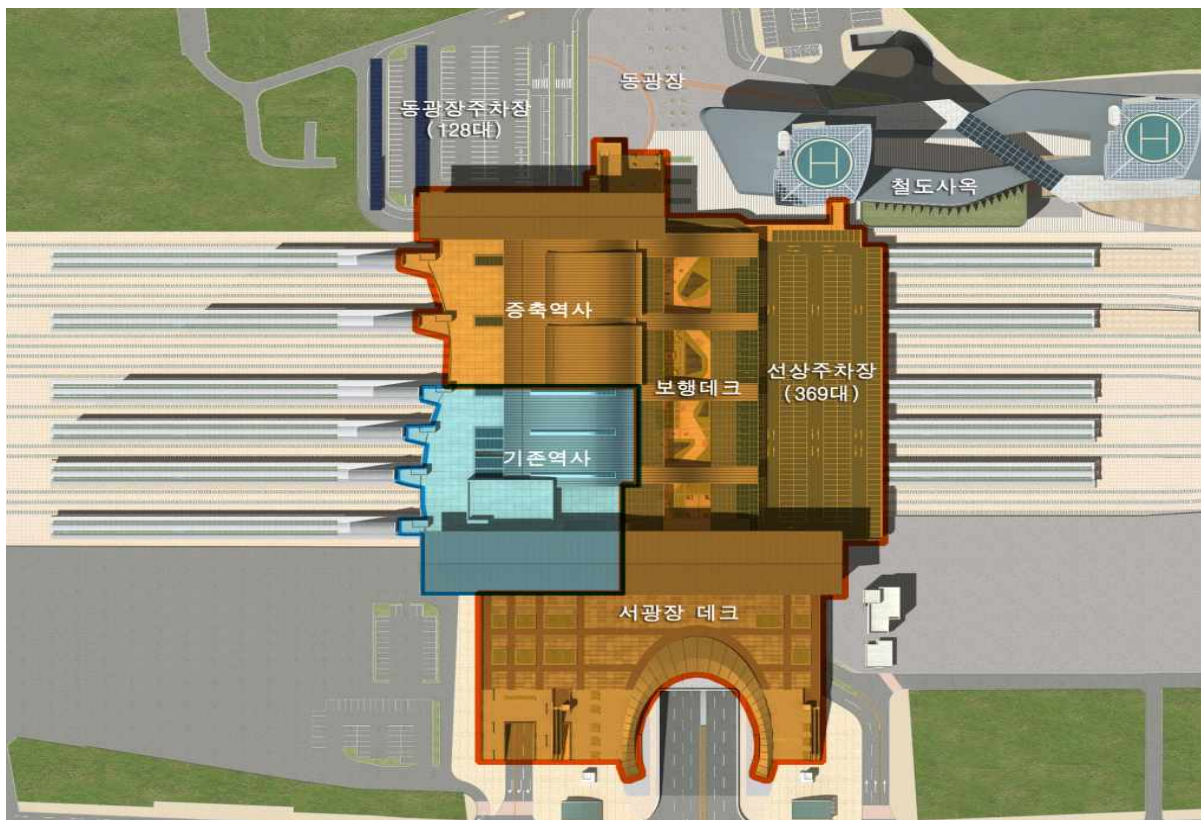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선상주차장,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
 - (철도공단) '14년 개통시 필요한 선상역사 부분만 우선 증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결정
 - (대전시) 공단이 선상역사 및 선상주차장, 서광장데크를 동시 시공
- 철도공사·공단, 대전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대시설설치 추진 방안 결정

5. 기대효과

-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KTX 이용객 증가에 부응하여 KTX 대전역사 이용고객의 이용편의 증대



대전-7	회덕 IC 건설 지원
① 대덕구 연축동(경부고속국도) ~ 신대동(천변고속화도로)간 560m 건설 ② 세종시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접근성 개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연결허가 승인(국토해양부)후 협약체결('13년 1월, 대전시↔도로공사)
- 사업비 분담방안 확정시, 실시설계 착수('13.5월) 및 공사착공('14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덕IC 건설지원	실시설계 추진	공사착공	공사시행	공사시행	완공 (공정률 100%)

※ '17년말 기준 계획 : 사업비 분담협의 적기 완료후 사업 추진시 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당초 연결허가 승인조건으로 지자체의 사업비 전액 부담이 전제이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시 회덕 IC 신설 사업 반영 여부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5. 기대효과

- 신탄진IC의 교통혼잡 개선 및 주행거리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 증대

울 산

울산-1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
① 2017년까지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공단 리모델링,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석유화학 공정기술 교육센터 등 건립 ②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	

① 2017년까지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공단 리모델링,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석유화학 공정기술 교육센터 등 건립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상반기 중 울산시·산업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등을 우선 추진
- * ‘13.3월, 지자체·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신르네상스작업반(T/F)’ 구성·운영
-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울산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	정책연구 실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계속)			

* 취임 3개월후 예상성과: 추진TF 구성 및 세부추진 계획 검토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13년 상반기 중 울산시·산업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등을 우선 추진할 필요
- “울산석유화학신르네상스사업”을 통한 주요 수혜기업들은 울산산단에 입주한 화학대기업들로 동사업이 대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외부지적 우려
 - 따라서 추진계획 수립시 개별기업의 현안성격의 사업은 배제하고 울산석유화학단지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추진
 - * 대기업 지원성격의 공정기술개발은 최소화하고 중기형 정밀화학소재 개발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공정기술교육센터 등은 설치
- 동 사업 추진시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등 일부사업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설치하는 방안 강구

5. 기대효과

-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이 단지 통합관리 강화를 통해 원료 및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녹색산업으로 전환
- 석유화학산업의 생산효율성 제고, 핵심화학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제5위 화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②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지식경제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① 조기 물동량 확보를 위한 상업용 탱크터미널의 차질없는 건설·운영
 - '20년까지 탱크터미널을 계획대로 준공(북항 '16년, 남항 '20년) 건설하여 현물 저장시설 확보
 -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탱크터미널 합작법인 지분참여를 통해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외국 투자자 모집 및 초기 운영 활성화 도모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조성 내용 〉

구분	울산		여수
	북항(1단계)	남항(2단계)	
사업부지	295천㎡	604천㎡	262천㎡
사업기간	2010 ~ 2016	2016 ~ 2020	2008 ~ 2012
사업규모	990만B(제품)	1850만B(원유)	820만B(원유 350, 제품470)
총사업비	5,085억원(전액민자)	9,948억원(전액민자)	4,910억원(전액민자)

* 울산 남항사업은 북항사업 우선 추진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②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 정책연구를 통해 석유거래·물류 제도연구,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석유거래소 설립·운영방안 등 마련('13~'14년)
- 상업용 탱크터미널 운영을 기반으로 한 석유상품거래소 개설('17~'18년)
 - * (1단계) 거래소 개설 초기에는 현물 위주로 거래물동량 확보 및 두바이 유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MOPS)와 같은 기준유가(K-Price) 고시 → (2단계) 이를 기반으로 선물, 파생상품 시장으로 확대
- 선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 청산시스템 구축 및 거래 위험관리, 자금관리 등을 위한 선진금융기법, 상품개발 등 금융인프라 구축
 - * NYMEX(뉴욕상품거래소) 등 해외거래소와 청산업무에 대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거래소의 조기정착 추진
 - *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이원화한 감독체계 구축 검토
- 미국은 현물시장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시장은 SEC(증권거래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규제
- 석유거래소 개설에 필수적인 국제적 역량을 겸비한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석유 선물·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전문 금융인력 양성
 - * (예) 싱가포르는 CHIMAC(Chemical Industry Manpower Advisory Committee), CPTC(Chemical Process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여 산·학 공동으로 대학에 트레이더 양성과정 개설 및 지원

③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계속)

- 외국계 기업, 트레이더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 부과 및 환급체계 개선, 블렌딩 등 부가가치활동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 외환거래 지원 및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활성화, 신용공여제도 도입, 석유 파생상품 관련 규정 재검토 등 추진
 - * CME(시카고상업거래소)는 약 15개 국가와 50개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자격부여

2. 추진 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탱크터미널 건설	북항 착공 및 공사진행			북항 준공	북항 운영
			남항 타당성조사	남항 설계	남항 착공
	규제완화				
석유거래소 개설	정책연구 및 법령개정		예산반영 ('17년 개설)		
	규제완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예산반영 및 시행		

* 취임 3개월후 예상성과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남항) 사업규모 축소 검토
 - 당초 계획된 남항 부두 30만톤급 유조선(VLCC) 접안을 위해서는 항로폭 700m가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을 이유로 최대 접안규모를 당초 30만톤급에서 20만톤급으로 축소 검토중
 - *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11.7.25, 국토부 고시 제2011-402호)
 - 동북아지역의 상업적 유류저장시장 선점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로 육성{1단계 4선석(북항 1만/3만/5만DWT), 2단계 3선석(남항 5만/20만/30만DWT)}
- (해결방안) 울산항이 동북아 오일허브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30만톤급 유조선 접안 유지 절실
 - 30만톤급 유조선 접안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방파제 연장 등 필요

4. 기대효과

- 국내 정유사에 의해 수직계열화(93%)된 국내 석유유통시장 상황에서 국제 석유거래시장 형성을 통해 석유 유통가격의 투명성 확보
- 원유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위주의 기존 산업에서 석유물류산업으로 신산업 창출
 - * 오일허브의 부가창출효과는 로테르담(GDP의 7.3%), 싱가포르(GDP의 11.5%)
 - * 미 선물거래소 '09년 거래량(25.8억건) 및 거래가(813조달러)의 약 10%가 에너지거래
- 유조선 등의 빈번한 입출항 및 수송으로 저장·수송·물류·금융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및 발전 촉진
-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생산유발효과 4조4647억원, 임금유발효과 6059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2천명, 울산지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1억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목표

- ◇ 동북아 석유물류시장 선점을 통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성장
 - * 세계 3대 오일허브 : 미 걸프연안, 유럽 ARA, 싱가포르 Jurong
- ◇ 저장시설 확충 및 물동량 확대, 석유거래소 개설 및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석유거래 중심지 역할 수행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남항지역 남방파제 착공('13년)
- 오일허브(북항지역) 사업 착수('14년)
- 북항지역 북방파제 준공('15년)
- 북항지역 북방파호안 준공('16년)
- 오일허브(북항지역) 운영 개시('17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남방파제 착공	오일허브 (북항지역) 사업 착수	북방파제 준공	북방파호안 준공	오일허브 (북항지역) 운영개시

* '13년 상반기 : 남방파제공사 입찰공고

※ 오일허브(북항지역) 운영개시('17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반시설) 방파제, 방파호안 등 외곽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만 항만내에 민자사업으로 구축되는 오일허브사업(접안시설, 저장탱크 등)의 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2014년부터 매년 약 950억원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 (오일허브사업)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

5. 기대효과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접안 및 저장시설, 외곽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울산을 세계 4대 석유물류거점으로 육성

울산-2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①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설립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산재 모병원 건립추진 기본계획 마련 및 예비타당성 조사의뢰('13년)
- 예비타당성 조사('14년)
-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 추진 결정시)('15년)
- 사업 시행('16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립울산산재재활병원 건립	산재 모병원 건립 추진 기본계획 마련(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의뢰(기획재정부,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관련 추가소요 등 분석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사업 추진 결정시)	사업 시행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애로사항) 일반 의료기관의 팽창에 따라 산재병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산재병원 전반의 발전방향 및 기능재조정과 병행 검토 필요

5. 기대효과

- 직업병(직업성암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근로자에게 질 높은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울산-3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 산업기술박물관의 개념 > — “우리나라 경제성장, 산업기술 창조의 60년사를 정리·보존·전시·전수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력 대물림 및 미래 기술인재 육성” - 산업기술 “전시 + 홍보 + 체험 + 교류”의 장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립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 입지선정, 콘텐츠수집 등 전반적인 박물관 건립내용 마련('13년 상반기)

-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건립 추진 관련 중요사항* 의사결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산학연 협조 유도('13년 상반기)

* 입지선정, 건립 및 전시계획, 건립 및 운영 주체, 설립재원 조달, 전시물 확보 등

· 지경부 내 건립추진단을 발족('13년 상반기)하여 추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건립을 위한 법·제도 등 세부계획 마련('13년 하반기)

※ 문광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시 부내 건립추진단(25명) 설치,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추진 시 부내 설립운영단(12명) 설치, 국토해양부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기획단(17명)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13년 하반기 또는 '14년 상반기)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건립예산(건축비) 확보
- (콘텐츠수집) 산업기술사 조사 및 유물 수집 (~'17년)
 -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한 산업기술 부문에 대한 역사조사, 정보의 체계화(정책, 제도, 제품, 기술, 사회, 문화 등 조사)
 - * '한국경제 60년사(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의 연구결과를 재정리하여, 섬유, 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약 22개 산업부문을 우선 진행
 - 산업기술 유물 조사 및 확보(기증, 대여, 임대, 구매, 제작 등)
 - * 유물기증 대국민 캠페인 실시, 기업의 협조 유도, 산업기술사 박람회 개최를 통한 홍보, 관심 형성 및 결과물 활용 등
 - 전시 시나리오 및 연출 계획 수립
 - * 실물체험을 통한 스토리, 감동 전달에 중점
- (설계 및 건축) 건립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건축 및 전시 설계(~'15년), 공사 (~'17년)
 - 건축을 위한 인허가, 설계, 토목 및 건물공사, 전시공사 등 실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산업기술사 조사 건축설계	유물수집	전시설계	전시설계
	입지선정		건축설계		건물공사
	예타신청		건물공사		전시공사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추진계획
 - 2013년 하반기 제출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고려사항) 사업 추진 시 입지선정

- 기본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간 300만명 관람객 수요확보 및 최소 20만㎡이상 부지확보 등 기본요건을 갖춘 입지선정 필요

* 유치희망 지자체는 건축비 매칭 분담, 충분한 부지 제공, 유치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한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재 10여개 지자체*에서 유치의사 표명을 한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공모가 필요

* 울산, 광주, 구미, 대구, 아산, 인천, 창원, 청주, 포항, 하남 등

- 특정 지역을 지정할 경우 기업들의 박물관 유물 기증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애로 예상

* 지정된 지역의 대표산업이 아닌 기업들의 유물 제공에 대한 거부반응시 설득 논리 부족

○ (대응방안)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

- 건립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입지 선정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불필요한 갈등 방지

5. 기대효과

- (경제적)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11조원으로 추정

- 건립투자의 경제효과는 약 1조원, 운영의 경제효과는 약 10조원*

* 관람객의 소비지출효과 7.8조, 기업전시 홍보효과 1.8조

※ 건립투자비 5,000억원, 연간 관람객 300만명, 100개 기업 전시공간 제공 가정

○ (사회적)

①산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②산업기술문화시설의 인지도 확산(현재 국민의 20%만 인식)

③이공계 인력 증가유발(연간 최대 8.6%, 4.4만명/11년 기준)

울산-4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①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 및 실용화 연구동 구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차질 없이 지원·추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거리주행(400km이상) 전기차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린카기술 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 총사업비 : 1,493억원 (국비 1,105, 시비 163, 민자 225) * 국비 : '11년 30억원, '12년 114.5억원, '13예산 165.5억원 ○ 사업기간 : 2011 ~ 2015 (5년) ○ 위치 : 울산시 중구 우정동(울산TP 그린카 기술센터)

- ‘실용화 연구동 구축’은 기존사업 완료시점에 국내 전기차 보급추이 등을 감안하여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존사업의 ‘그린카 기술센터’의 공간과 장비 활용방안과 별도 구축방안에 대해 '15년이 후 검토·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반영 사업추진(완료)			-	-
실용화 연구동구축	-	-	정책검토	필요시 예산반영	

※ 취임 3개월후 예상 성과 : 동사업은 중장기 R&D사업으로 사업완료시점에 가시적 성과 예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관련사업 예산의 정상적인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5. 기대효과

- 장거리주행 전기차 기술과 인프라 확보를 통한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핵심부품 조기 양산화로 세계 일류부품기업 육성
- 친환경 자동차산업 부품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견인

울산-5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①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등 추진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포항지역 연구기반과 울산지역의 실증기반을 연계하여 연료전지 광역 클러스터 조성 추진(5년간, '15~'19)
 - * 현재 대경권(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진행중
- 제품 양산 및 검인증 장비 구축, 전문기업·연구소·학교 등 관련 네트워크 집적을 통해 기술개발~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
 - * 바이오화학분야 상용화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 추진중인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10-'14년, 국비 200억, 지방비 167억, 울산시)” 계획대로 수행
- 1단계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2단계 클러스터로 고도화 사업 추진
 - * 1단계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한 2단계 기업 연구지원센터, 검증센터 구축 및 기업 R&DB 지원 체계 완성을 통한 세계적인 고온형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15년 예산반영 추진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경권(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진행 중이나, 연료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
 - 포항지역에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울산지역에 수소타운 조성** 및 연료전지 차량 시범사업 진행중
 - * 국내 기업의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제품 시험평가 지원을 위한 테스트 장비 구축
 - **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연료전지 연료로 활용, 인근지역에 전기 공급
- 현재 구축중인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산업 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료전지 산업 육성 극대화 추진

〈 클러스터 주요 기능 〉

- 수소파워벨리 내 공공지원기관 구축을 통한 제품개발 및 기업 육성
 - 수소연료전지 검인증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재료의 규격화 및 상품화, 수출 촉진
 - 개발 부품/재료의 시험생산 설비구축을 통한 대량 생산기술 지원
 - 개발 제품의 실증시험을 위한 파일럿 시험을 통한 상품화 촉진
- 다양한 제품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컨소시엄 구축
 - 제품별 /부품 모듈별 2, 3차 supply chain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및 상품화 촉진
 - 핵심 수입 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부품 경쟁력 확보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연구회 구축, 애로기술 지원
 - PEMFC용 대형 개질기 성능 최적화 및 설계 기술 연구회 구축
 - SOFC 스택별 BOP 시스템 설계 및 최적화 연구회 운영
 - 선박용 연료전지 디젤개질기/시스템 개발 연구회 운영
 - 대형 IGFC용 시스템 개발 연구회 구축 및 운영 등
- 인력 양성 및 훈련
 - 대학 등과 연계한 기술 고급인력 양성
 - 공고, 전문대 인력의 현장 실습을 통한 훈련
 - 국내외 전문가 풀을 활용한 기업 인력 교육 및 훈련

5.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연료전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된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울산-6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① 남구 무거동, 중구 다운동 일원에서 울산 과기대,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울산 대학교 등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를 확대·추가 지정 ②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 ■ 주관부처 : 중소기업청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중장기 검토·추진

- '00.11월 울산에 벤처촉진지구가 1개 지정되었고, 벤처기업(66개)·중소기업(158개)가 입주하여 운영 중

〈 울산촉진지구 지정 현황('12) 〉

지정시기	지정면적	벤처기업(중소기업)	주력업종	평균매출액
'00.11.8	1.14km ²	66 (158)	S/W, 화학, 자동차 부품 등	14억원

* 울산지역 벤처기업 현황 : 업체수(449개), 평균매출(72억원)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 BI, 울산벤처빌딩 3개 건물이 핵심거점

구분	소재위치	입주업체(개)	벤처기업수
계		158	66
집적시설 내	소계	151	59
	울산대학교 BI(창업보육센터)	34	8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동	59	39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24	
	울산벤처빌딩	34	12
일반지역	남구 무거동 일반지역소재	7	7
	중구 다운동 일반지역소재		

- 울산시는 중장기적으로 벤처촉진지구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 현 지정지역은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위주로 입주하여 있는데, 도심지임에 따라 사업장 확장 등 성장에 불리한 입지
 - 울산과기대, 테크노밸리(개발 예정)를 추가 지정 후보지역으로 제안
- 현 울산지역 고려 중인 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여건 등을 고려할 때 촉진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없어 지정이 불가
 - 울산과기대 : 학교내 BI 미보유, 인접지역 벤처기업 부재 등에 따라 지정여건 충족 곤란
 - 테크노밸리 : 첨단업종 중소기업 입주 예정으로 '13년에 공사 시작 예정이나 완료시점이 '17년임
 - 3개 산단지역 : 벤처기업이 일정수준 입주하고 있으나, 산·학·연 클러스터링 기반이 미흡하여 부적합
- * 지정기준(벤처특별법 시행령) : ① 벤처기업 집적(지구내 중소기업수 대비 벤처기업수가 10% 이상) ② 대학·연구기관 소재 ③ 기반시설 구비
- 단, 주변지역의 여건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이 필요
 - * 지정 가능 후보지 : 우정 혁신도시, 고연산업단지, 매곡 산업단지, 효문공단 등

▶ 촉진지구 입주시 혜택 ·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기업육성법) ▶ 후보지역 검토 절차 · 지정 절차 : 울산시 지정 신청 → 중기청 지정(벤처촉진지구심의위원회) · 울산시 : 아래의 후보지역을 검토한 바, 단기적으로는 적격지역이 없어, 테크노밸리·우정혁신도시 조성 이후 추진 필요('16년~)
--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울산 벤처촉진지구 확대	적격지역 검토	적격지역 검토	적격지역 검토	“우정 혁신도시” 지정 검토	“테크노 밸리” 지정 검토

※ 100일 이내 성과 : 우정혁신도시 내 융복합첨단과학기술센터('13.5 ~ '14.12)
및 그린카기술센터('13.5~'14.12) 등 건축공사 착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없음 : 울산시도 중기청의 검토의견과 동일

5. 기대효과

- 테크노밸리, 우정혁신도시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경우, 그린카기술센터, 바이오화학 허브 등 R&D기능과 첨단업종 중소·벤처기업과의 클러스터링 효과를 통해 매출·고용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울산-7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①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주관부처 : 문화재청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사연댐 수문설치 등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13~'16년)
-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연구 및 등재추진단 구성(울산시, '14년)
- 세계유산 진정성·완전성 규명, 보존관리 계획 수립('15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사연댐 수문설치)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초공사	토지보상 구조공사	준공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등재 타당성 연구	세계유산 진정성 규명 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세계유산 진정성 규명 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세계유산 진정성 규명 등 보존관리 계획 수립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쟁점사항 :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관계기관 입장 차이로 해결 애로
 - 국무총리실 주재 조정 합의안('10년) : 사연댐 수문설치를 통한 수위조절(60m→52m) 추진
 - 울산시 입장 : 생활용수 확보를 전제로 동의
 - 대체수원 확보방안으로 검토한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활용방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여 울산시에서 제방설치안, 유로변경안 등 4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진행 중
- 국무총리실 조정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시 물 부족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 모색

5. 기대효과

- 단기적, 반구대암각화 주변환경을 보존하면서 암각화 훼손정도 경감 가능
- 중장기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제반 보존대책 마련으로 등재 가치 제고

서울·경기

서울·경기-1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①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주변의 MICE·쇼핑·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MICE복합단지 지정 법적근거 마련('13)
- 국내 최대규모 컨벤션시설인 킨텍스(KINTEX)의 대형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 산업·쇼핑 등 복합관광 활성화 도모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류지원 기반조성	MICE복합단지 지정근거 마련	대형전시/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계속	계속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클러스터 형성 촉진 위한 관광기금 융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 시 관련 부처·지자체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한류 확산에 기여

서울·경기-2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①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간 3개 노선 GTX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중 민자적격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후 '14년 착공, '20년 완공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GTX 추진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및 착공	사업추진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25%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1.12~)이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KDI 중간검토 B/C=0.58)으로 공약실현에 차질 우려

※ (사전 검토결과) 국토부 B/C=1.17(교통연), 경기도 B/C=1.24(대한교통학회)

- KDI는 기 시행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사업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교통연 86만명/일 → KDI 57.7만명/일)
-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을 통한 수도권 외곽주민들의 교통복지 지원 등과 연계된 사업임을 종합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 B/C 분석을 철저히 적용하는 독일의 경우도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은 B/C 분석 면제

5. 기대효과

- 광역권 통행시간 감소로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
 - ※ (예) 의정부~강남간 전철 이동시간 : (현재) 73분 → (사업시행후) 20분
 - ※ '21년 기준 승용차 통행량은 11만대/일 감소, 버스 통행량은 4만대/일 감소
-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교통사고 절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연간 1조 6천억원이며, 30년간 총 48조원 수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6조 2천억원, 고용창출효과는 36만 7천명

서울·경기-3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 도로 상·하수도 등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기반시설 지원 - 토취장 개발 및 관광단지 인·허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도 77호선 등 4개 진입도로공사 : '12. 5 ~ '16. 6
- 상수도시설공사 : '12. 8 ~ '16. 12.
- 하수도시설공사 : '12.10~ '16.12.

※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10.12)따라 외부와 유니버설스튜디오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입도로 공사 시행중이며, 상·하수도사업도 유니버설스튜디오 개장시기에 맞추어 공사 시행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진입도로 건설	건설계속	건설계속	건설계속	준공	
상하수도 건설	건설계속	건설계속	건설계속	준공	

※ '16년까지 광역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준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USKR 부지공급을 '12. 9.30. 계약 체결토록 하였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USKR측에서 수공와의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아 계약 미체결
- 우리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당초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한 공개경쟁 입찰('13.8월)에 의해 부지공급 예정이며, 사업자인 USKR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할 경우 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5.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기여, 국가 이미지 제고
- 건설시 : 고용 4만2천명, 생산 3.4조원(년간)
- 운영시 : 고용 10만8천명, 생산 8.4조원(17년간)
- 관광수지 개선(년간 65억\$), 동북아 관광거점 조성

※ USKR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단지내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비도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에서 확보하여 추진 예정

관련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주)USKR에서 조성 추진 중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의 진입도로,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 중기재정계획 반영('13년), 토취장 개발 및 관광단지 인·허가 지원('13년)
- *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신청 및 문화부 협의 요청시, 적극 지원(「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지정은 기초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 공약집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국토부 소관사항임(송산그린시티 주변 전철사업)
- 진입도로(4~6차선 8.2km, 교차로), 상·하수도(40km), 오수처리시설(30,000m³/일) 등 기반시설 예산 확보 및 지원('14~'15년)

- 위치/면적 :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127만평(간석지)
- 사업주체 : 롯데자산개발,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경기도 등
- 지원사항('14~'15년) : 국고 500억원(진입도로 8.2km, 상하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USKR 조성 지원	-중기재정계획 반영 -기반시설 '14예산 확보	기반시설 예산 지원 (진입도로)	기반시설 예산 지원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	-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애로사항) USKR(주)·수자원공사 간 간척지 양도·양수 이견으로 추후협의를 필요
 - (USKR) '12.9월말까지 간척지 매입 계약을 체결기로 하였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부지 용도 및 비용 조정을 수자원공사에 요청
 - * 토지 용도 : 콘도 용지 → 유보지 등, 매입비용 : 5,040억원 → 3,000억원
 - (수자원공사) 간척지 매입 비용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한 것으로 동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
- (해결방안) USKR(주)·수자원공사 양자 간 간척지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지원 추진

5. 기대효과

- 세계적 글로벌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약 1.1만명) 및 관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서울·경기-4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①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우선 GTX 노선(의정부~삼성~수서)을 활용하여 의정부까지 KTX 직결 운행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통일 등에 대비하여 신선 건설도 검토
- (1단계) 수서~의정부간 GTX 노선을 활용하여 의정부까지 KTX 노선을 연장 운행
- (2단계)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별도 신선건설 검토

2. 추진일정

세부공약	1년차	2년차	3~4년차	5~9년차
수서~의정부 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적정 추진시기 검토(GTX 노선 활용시(1단계) 소요비용은 GTX사업에 기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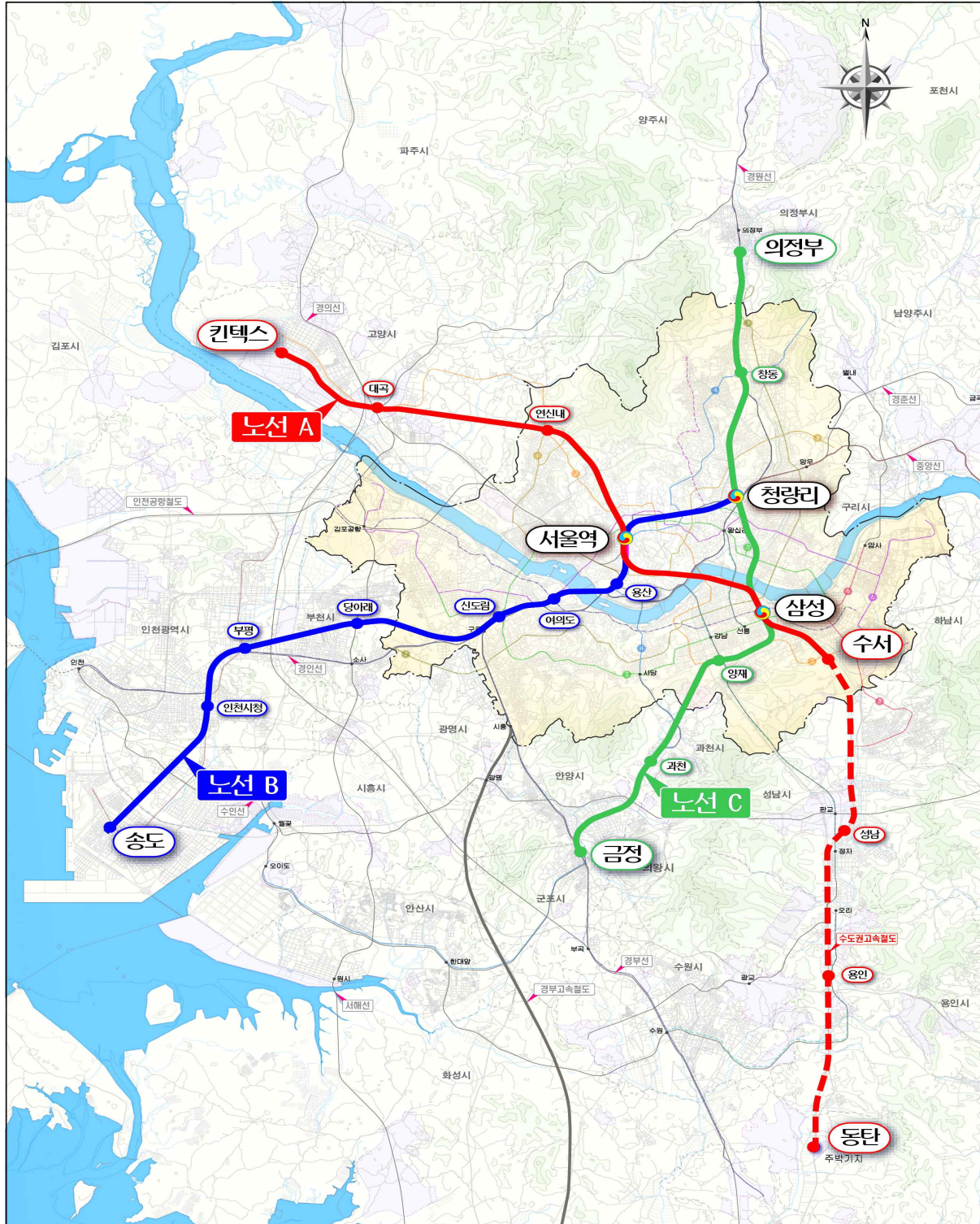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GTX 노선을 활용한 의정부 KTX 직결 운행(1단계 방안)을 위해 GTX 조속 추진 필요

5. 기대효과

- 수도권 KTX 노선(수서~평택)을 의정부까지 연장해 서울 강북 및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임



서울·경기-5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① 월곶~광명~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②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③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① 월곶~광명~판교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월곶~광명~판교 등 동서간선철도망 연계에 필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인천~평창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인선(인천~월곶), 월곶~광명~판교선, 성남~여주선(판교~여주), 여주~원주선, 수서~용문선, 원주~강릉선 통과필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월곶~판교 복선전철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2.8월 완료), GTX 미반영시 타당성이 확보되나, GTX 추진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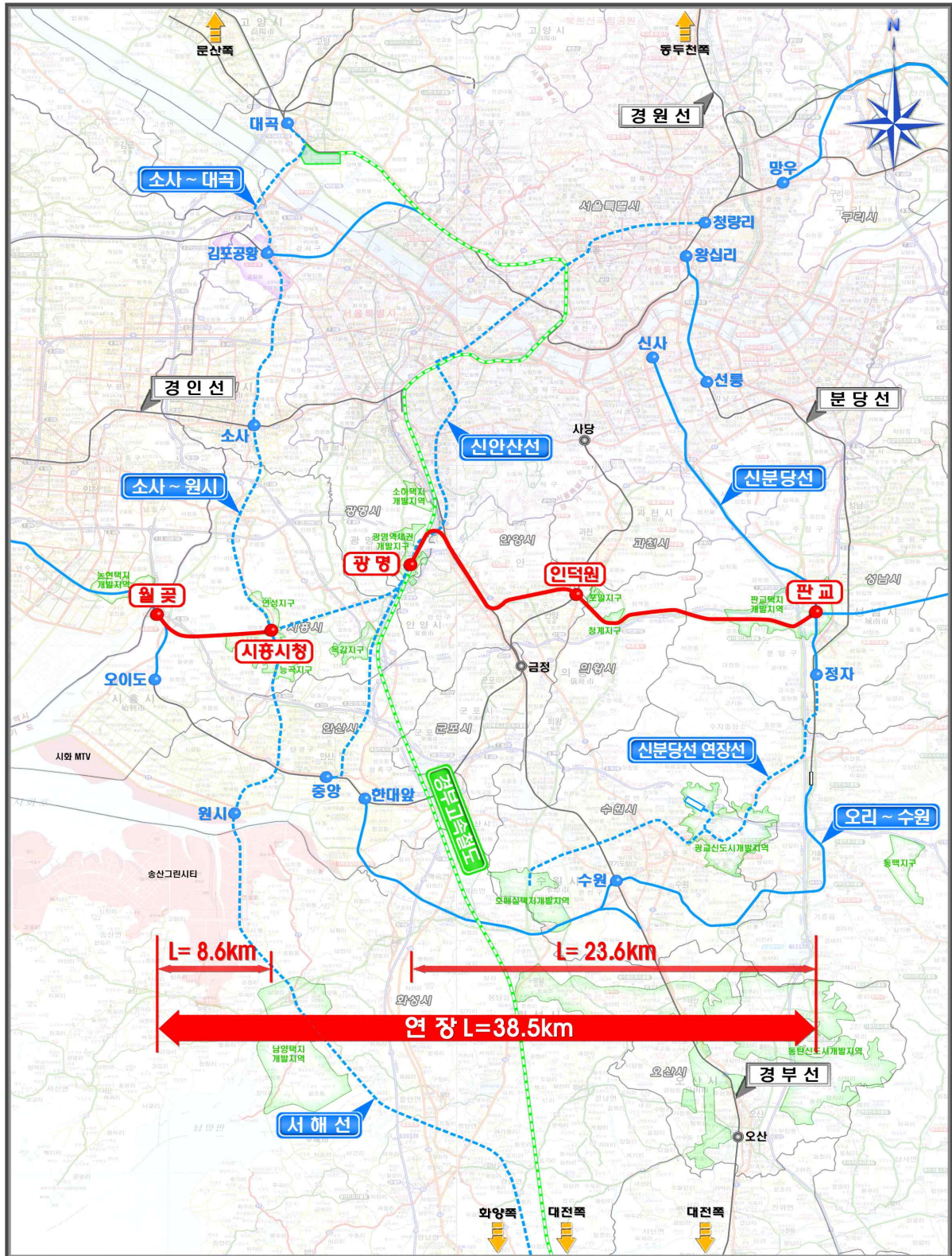
* 기본안(GTX 반영) : 타당성 미확보($B/C=0.89$, $AHP=0.457$)

시나리오안(GTX 미반영) : 타당성 확보($B/C=1.04$, $AHP=0.535$)

- (국토부) 장래 수도권(인천, 성남지역 등)과 강원,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필요, GTX 영향 미미

5. 기대효과

- 수인선 및 성남-여주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 동서축 철도망 구축으로 미연결구간 해소 및 광명역 연계교통체계 구축



②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여주~원주 구간을 우선 추진하되, 대안으로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사업도 병행하여 검토·추진
- 수서~용문이 연결되면, 강릉(원주~강릉선)과 경주·안동(중앙선)에서 원주를 거쳐 서울 강남(수서)까지 고속화 열차(EMU 250km/h)로 접근 가능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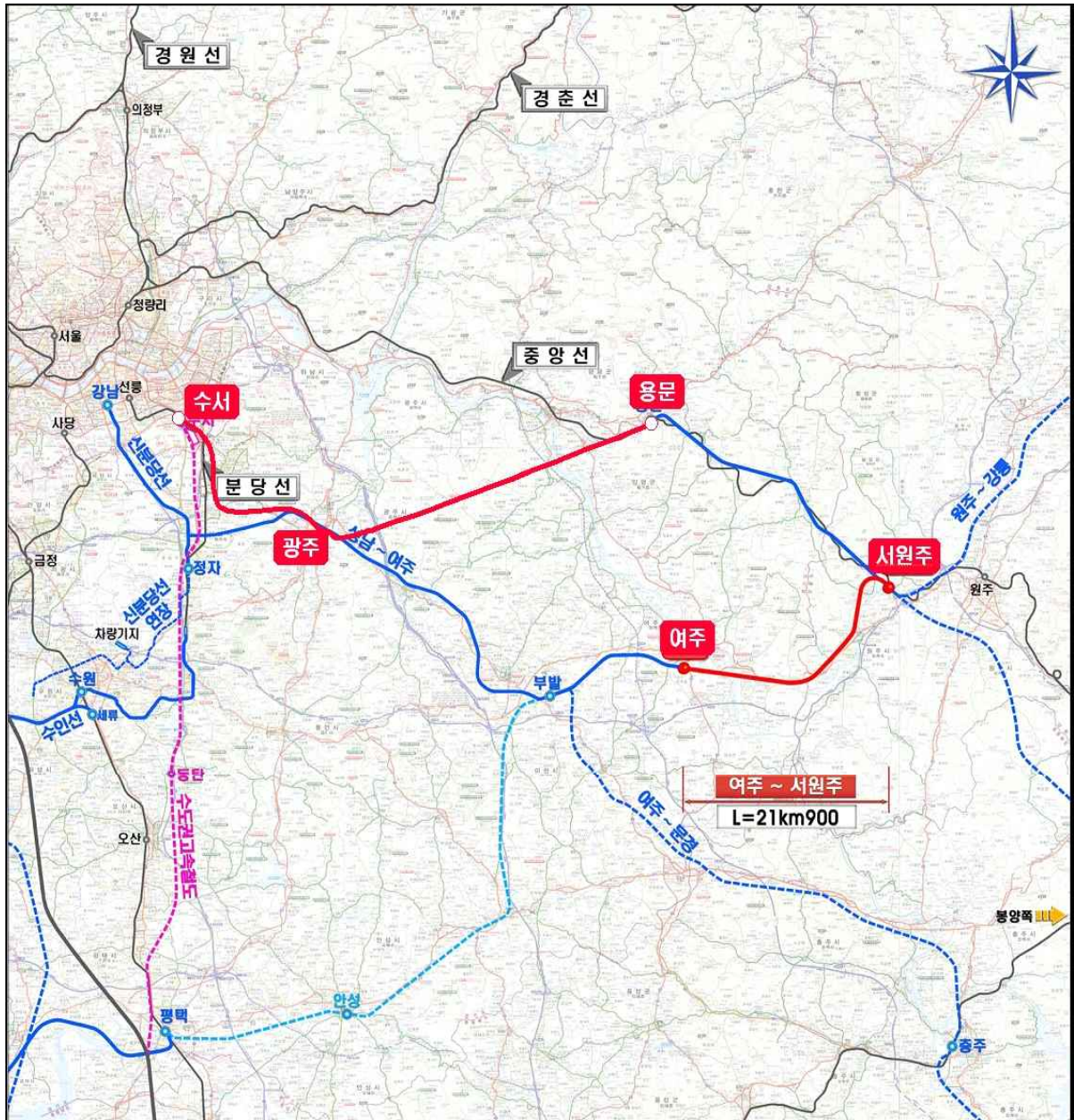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1.12~)이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중간검토 B/C=0.61)으로 공약실현에 차질 우려
 - 교통 SOC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발전 지원,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동서간선축 Missing Link 해소,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별도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조기 추진

5. 기대효과

- 수인선, 월곶-판교선, 성남-여주선과 원주를 연계하여 강원권 접근성 제고 및 도로통행량의 철도전환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혼잡완화



③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설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수요 증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대응
- 타당성재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완료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22%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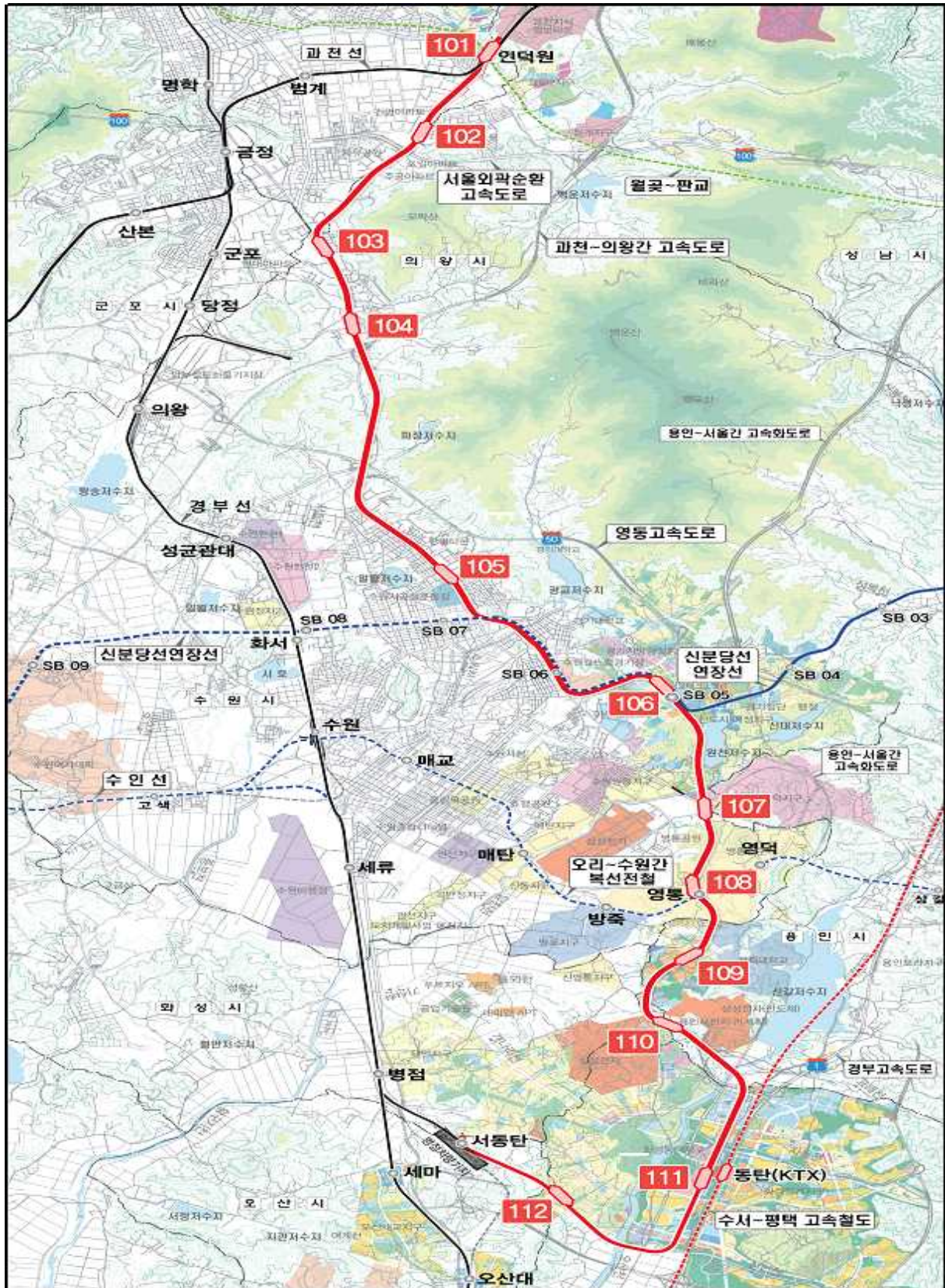
- (기재부) 예타조사 결과('11.11, B/C=0.95, AHP=0.514)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수서-동탄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중('12.10~)

* 예타 보고서 상 “GTX 또는 동탄신교통수단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타당성재조사 착수

- (국토부)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 및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인근 택지개발 등에 대한 교통수요 대처를 위해 필요

5. 기대효과

- 서울 강남지역과 수원도심을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권 통행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KTX 동탄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KTX 동탄역 접근성 개선



서울·경기-6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① DMZ와 인근 경기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 - DMZ 인근 지역(김포~파주~연천) 관광자원을 평화·생태의 주제로 재구성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환경부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김포-파주-연천)을 세계적 관광자원화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13~’22)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총사업비 : 2013년 ~ 2022년(10개년) / 4,610억원(국비 2,092, 지방비 2,002, 민자 516)
- 대상지역 : 인천(옹진, 강화),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사업내용 : 44개 사업(관광개발 30개 사업, 연계사업 14개 사업)
- 2013년 예산 확보 : 김포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등 4개사업, 20억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김포 애기봉 평화공원 등 지원(4개소)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8개소)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10개소)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10개소)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10개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
로 육성

관련부처 이행계획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단지 조성, 경원선 전철 연장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생태평화벨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필요

5. 기대효과

-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환 경 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13년 지역주민 의견수렴, 용도구역 보완·설정을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재신청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선정('14년) 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협의기구(Council)를 구성하여 효율적 관리 및 지원
- (DMZ 60년 생태평화의 해 선포식) 생태계의 보고 DMZ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이 지역에 대한 보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글로벌트러스트 전개) 'DMZ 땅 저축하기' 캠페인 지속 전개로 DMZ내 사유지의 공유화 추진
- (DMZ 서부지역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제평화상징을 테마로 한 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14년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MOU체결, '15년 설계 완료 후 착공, '16년 준공
- (생태계 조사) DMZ 일원의 자연환경현황을 조사하여 보전 및 복원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한강하구 장항 습지 복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12.4~'13.1월)에 따라 예상되는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 이용·관리, 장항습지 구간의 철책선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설치의 연차적 실시 ('13~'15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DMZ 생태평화의해 선포식	기념행사	글로벌 트러스트 전개	글로벌 트러스트 전개	글로벌 트러스트 전개	글로벌 트러스트 전개
생물권보전지역 선정 추진	선정 신청	결과발표 이후 관리방안 마련	DMZ BR 운영·관리	DMZ BR 운영·관리	DMZ BR 운영·관리
생태평화공원 조성(DMZ서부)	-	기본계획 수립	설계완료 후 착공	공사완료	개방
DMZ 생태계조사	권역별조사 수행	권역별조사 수행	권역별조사 수행	권역별조사 수행	권역별조사 수행
훼손생태계복원 (장항습지)	사업수행	사업수행	사업완료	사업지 확대	사업지 확대
생태계교란종 제거	돼지풀 단풍잎 제거	돼지풀 단풍잎 제거	돼지풀 단풍잎 제거	돼지풀 단풍잎 제거	돼지풀 단풍잎 제거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철원군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 표명, 북한과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어려움 예상
 -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통일부 등 범부처 협력하에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5. 기대효과

-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류공동의 자산인 DMZ 일대 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 도모

서울·경기-7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① 군사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② SOC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선사·고구려유적 등 민족문화 발굴·복원을 통해 DMZ와 연계한 문화관광 메카로 발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문화재청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추진 현황〉

- 경기북부 지역 특정지역 지정 신청 완료 : '12.12월
-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일대(김포, 파주, 연천 등)를 특정지역(임진강 문화권)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마련, 국토부에 지정신청

〈향후 계획〉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13. 1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승인 : '13.6월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관광지 등과의 연계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광특회계)

* 국비 지원 비율 : 공사비 90% 지원(공사비 일부 및 보상비 제외)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특정지역 지정	특정지역 지정	-	-	-	-
기반시설 국고지원	-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사업은 국비(포괄보조금/시도 자율편성) 90%, 지방비 10% (보상비 등)매칭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방비 확보 필요

5. 기대효과

- 지역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활용과 특정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기대

주관부처(문화재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비무장지대 구역별(중부, 서부 등) 천연기념물 동·식물, 선사·고구려 유적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보존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
-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추진('14~'17)

2.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화유산분야 자원조사	-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세계유산 등재추진		타당성 조사	잠정목록등 재	· 학술연구 · 보존관리계획 작성	세계유산 등재 신청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 환경부의 2011년~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유네스코 심사에서 보류됨
 - 보류사유 : 환경부가 ‘11년 9월 우리나라 단독으로 남쪽 지역의 비무장지대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북한측의 반대가 있었으며, 강원도 지역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로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가 유보되었음
 - 해결방안 : 남북관계 개선, 생물권 보전지역·세계유산에 대한 해당자치단체 주민의 인식 제고 필요

5. 기대효과

- 장수하늘소, 크낙새 등 남한에서 발견되지 않는 천연기념물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증식 및 복원
-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문화국가 이미지 구축과 국제적 위상 제고

서울·경기-8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①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 마리나항 조성지원 - 체험위주 해양레저 중심 개발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체험행사) 마리나 주변 확산을 위해 전곡마리나 등 경기만 지역 마리나와 연계하여 요·보트 및 해양레포츠 체험기회 제공
 - 마리나 선박(요트 등) 체험 행사계획 수립·시행('13, 상)
 - 전곡 마리나 등 경기만 지역 마리나와 연계하여 요·보트 체험행사 지속 추진('14~)
 - (시설확충) 마리나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등 신속히 추진하고, 방파제·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기반 마련
 - 제부 마리나항 착공('13, 하), 연차공사 시행('14), 준공('15.12)
- ※ 제부마리나 사업개요
- 위치 및 시행주체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항 일원 / 경기도
 - 총사업비/기간/규모 : 586억원/ '12~'15(4년)/ 방파제(2,575㎡), 계류시설(300척) 등
 - (배후부지) 전곡항 일대 산업단지 1,629천㎡(49만평) 조성 등을 통해 마리나와 연계한 요·보트 제조, 수리·판매, R&D 등 배후여건 조성
 - 전곡 해양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 준공('13.12)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부 마리나항 인프라 구축	-공사 착공	-연차소요 예산 반영 -연차공사 시행	-준공소요 예산 반영 -공사 준공	-	-
마리나 선박(요트 등) 체험 행사계획 수립·시행	-요·보트 체험행사 추진	-요·보트 체험행사 추진	-요·보트 체험행사 추진	-요·보트 체험행사 추진	-요·보트 체험행사 추진
전곡 해양산업단지 부지 조성	-산업단지 부지공사 준공		-	-	-

※ '15년말기준 제부마리나항 완공, '13년말기준 전곡 해양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마리나 인프라 적기 구축 및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 필요
 - 제부 마리나(국비 50% 지원) : '13년 49억원, '14년 99억원, '15년 98억원

5. 기대효과

- 경기만 해양 레저·관광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원

강원-1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① 연장 구간(92.8km)은 설계속도 230km/h의 고속화철도로 착공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별도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조기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춘천~속초 철도건설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8.6%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2.10월), 타당성 부족(B/C = 0.67, AHP = 0.449)으로 공약실현에 차질 우려

- (우리부) 동 사업은 교통수요 등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실현에 차질 우려
- 교통 SOC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발전 지원,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수도권-동해권 Missing Link 연결,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5. 기대효과

- 수도권~동해권간 철도망 구축으로 강원권 지역의 발전도모 및 교통편의를 제공
- 강원도 지역의 주말 및 휴가철 도로 혼잡 완화
- 장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시 수도권과 연계되는 Link 역할 수행



강원-2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① 태백~강릉간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②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관련대학과 연계해 메디케어산업 연구기반 조성 ③ 농산물 브랜드화와 직거래 통합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통합관리센터 설립	

① 태백~강릉간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강원도 트레일 노선 조사 및 기존 트레일 노선 간 연계를 위한 신규 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용역 결과에 따른 트레일(탐방로)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15~'17)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태백 ~ 강릉간 세계 최장트레킹코스 개발	관련 용역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사업대상지 내 트레일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으로 강원도 및 관계부처(산림청 등)와 사전협의를 필요 및 동 사업 관련 지자체의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조기 추진 및 소요예산 산출 어려움

* 산림청, 백두대간 트레일 사업('13~'15, 29억원/태백산권역 132km), 평창올림픽 트레일 조성사업('13~'17, 28억원/평창지역 107km)

5. 기대효과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②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관련대학과 연계해 메디케어산업 연구기반 조성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 지원]

- '1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

* 주요시설, 투자비용 등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국고 50 : 지방비 50)으로 추진

* 지자체 사업포기 시 추진 어려움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명상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지원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5. 기대효과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③ 농산물 브랜드화와 직거래 통합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통합관리센터 설립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5년에 '강원권 거점 물류센터' 설립

* 5대 권역별(안성, 장성, 밀양, 강원, 제주) 농협 농산물도매물류센터 건립 예정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통합관리센터설립	부지매입	착공	준공	-	-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물류센터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공동선별·공동계산 농가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집중하여 농가 참여 유도

5. 기대효과

-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강원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절감
- 기존 원물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소포장·전처리 사업을 통해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상품 공급 가능
- 물류센터를 통해 강원권 농산물 브랜드화 및 통합 마케팅 수행 가능

강원-3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①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현재 접경지역의 초광역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역으로 육성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운영 중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개요〉

※ (기간/대상) 2011~2030년(20년간)/접경지역 3개 시도(15개 시군) - (사업규모) 10개 부처·165건, 18.8조원(국비 5.4, 지방비 1.4, 민자 12) - 행안·문화·환경·국토·지경·통일 등 - 행안부 소관 : 76건, 9.6조원(국비 2.2, 지방비 1.0, 민자 6.4)						
구분	계	생태관광 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 성장지역 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접경특화 발전지구 조성
사업수	165	100	38	19	5	3
투자규모	18.8	2.9	8.9	4.0	0.7	2.3

- '12년까지 8개부처에서 총 38개 사업에 4,600억원(국비 1,700억원) 투자
-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환경보전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 거양

※ 평화누리길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DMZ 일원 통합정보화기반 구축,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녹색체험벨트구축 등

- ('13년) 행안부, 통일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에서 총 2,628억원을 지원하여 평화누리길 조성 및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등 39개 사업을 추진
- ('14년이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
- * 남북간 단절된 교통망 복원, 내륙 천연가스 운송기지, 접경특화발전지구, 궁예도성 등 문화유산 발굴·복원 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규정 개정	규제완화 사항 발굴 및 관련기관 협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13년 사업계획 수립('13.1월)
- 접경지역 규제완화 사항 발굴 추진('13.3월~)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추진계획
 - 2013년 하반기 제출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 로 민자유치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애로

* 접경지역 전체 면적의 52.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개선* 추진

* (예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 현실여건 반영

5. 기대효과

- 접경지역의 관광인프라 및 성장동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원-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① 캠프페이지 친환경 종합개발 ②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시설 및 자전거길 조성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부처 : 환경부	

주관부처(행정안전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2013년 : 춘천시의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원

* 캠프페이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관 등을 설치

- 2014년 : 춘천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지원

※ '15년~'18년 : 춘천시 공원조성 관련 관계부처 협의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캠프페이지 친환경종합 개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지원	공원 조성계획 수립 지원	공원조성관련 관계부처 협의 지원	공원조성관련 관계부처 협의 지원	공원조성관련 관계부처 협의 지원

* 공원 주요시설 :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관 건립(격납고 리모델링) 조성
을 추진

* '13년에 격납고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체육관 조성 추진 중(시비 51억 투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문광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안보여건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부처(환경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춘천시)

- 춘천시에서 매립 완료한 캠프페이지 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13년)
- 대기업,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유치 및 행정절차 진행 ('14~'15년)
- 생태공원 조성 ('16~'18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도시관리 계획 수립	투자자 유치 및 행정절차 진행		생태공원조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생태학습장 및 여가시간을 즐길 장소 확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강원-5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① 2015년 성남~여주 수도권 전철 및 2017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예정으 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②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서연결 철도망인 원주~강 릉간 복선철도 건설	

① 2015년 성남~여주 수도권 전철 및 2017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 통예정으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별도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조기 추진

※ 교통 SOC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발전 지원,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동서간선축 Missing Link 해소,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전체 공정률 9%

* '13년 상반기 중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잔여구간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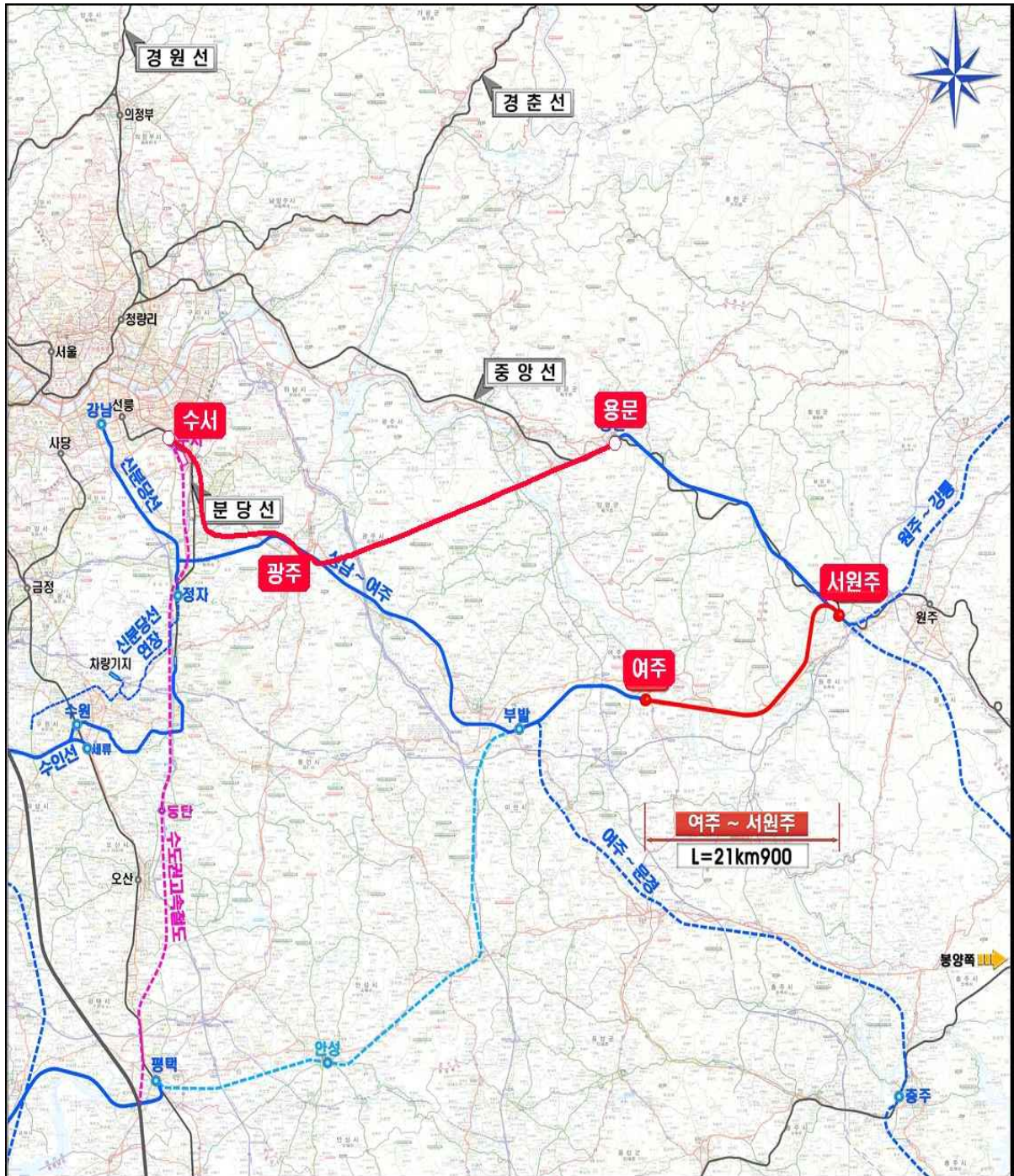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11.12~)이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중간검토 B/C=0.61)으로 공약실현에 차질 우려
 - 여주~원주 구간을 우선 추진하되, 대안으로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사업도 병행하여 검토·추진
- * 수서~용문이 연결되면, 강릉(원주~강릉선)과 경주·안동(중앙선)에서 원주를 거쳐 서울 강남(수서)까지 고속화 열차(EMU 250km/h)로 접근 가능

5. 기대효과

- 수인선, 월곶-판교선, 성남-여주선과 원주를 연계하여 강원권 접근성 제고 및 도로통행량의 철도전환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혼잡완화



②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서연결 철도망인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착공('13.6)

* '12.6월 평창~강릉 구간 노반공사 착공

- 당초 계획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18.2) 이전인 '17년까지 완공

* 강릉시 도심지구간 지하화 및 강릉역 반지하화, 원주~평창간 노선변경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협의 조속 추진(기재부와 협의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원주~강릉 철도건설	잔여구간 착공	공사 시행	공사 시행	공사 시행	완공

※ '17년말 기준 계획 :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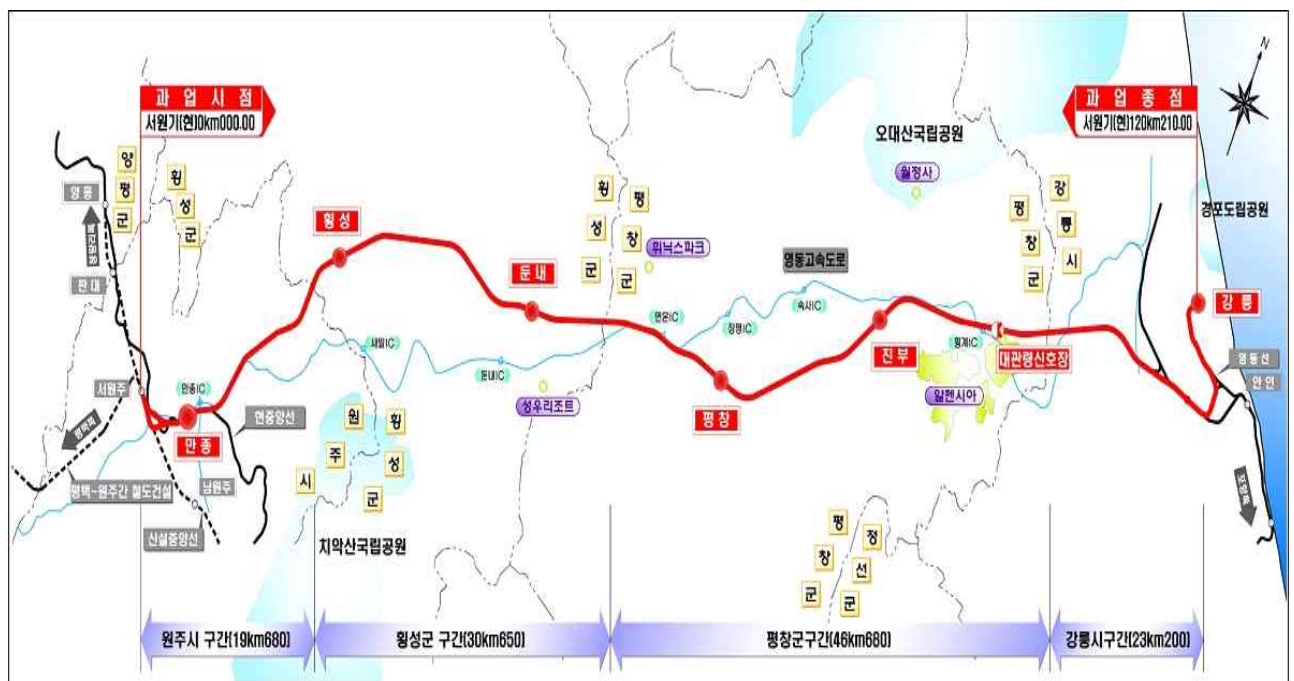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강릉시 구간 노선연장 및 지하화, 강릉역 반지하화, 원주~평창간 노선변경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협의 조속 추진(기재부와 협의중)

5. 기대효과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의 철도망으로 구축하여 운행시간 단축 및 지역 경제 발전
-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강원-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①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센터와 전용공단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연구용역)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 센터 신설 필요성(기존 지원체계 활용 방안 검토 등) 및 강원지역 의료기기 산업 발전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년중)
 - * 용역추진 기관 선정('13.2월), 용역완료('13.5월), 전략수립 및 예산반영('13.6월)
- (조직신설)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 센터 조직 신설(연구용역 결과 필요성이 확보될 경우, '14년)
- (인프라확충) 의료기기 생산·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14년 이후)
 - * '13년 중 완공될 원주첨단의료기기멀티콤플렉스센터(MCC, 국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 투입)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촉진 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업계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단계별로 구축)
- (생산·수출역량 강화)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14년 이후)
 - * (기술개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u-Health 기기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제품화 기술개발
 - * (사업화 촉진) 인력양성, 인증인프라 보완

* (전시회) 독일, 미국 등 기존 메이저 전시회 및 아시아, 신흥시장 전략 전시회 참가 지원

-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근거 마련) 균특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센터	정책연구	예산반영/ 센터기반조성 (20%) *조직신설, 장비 구축 등	예산반영/ 센터기반조성 (40%) *장비구축, 기술개발	예산반영/ 센터기반 조성 (70%)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및 전시회 지원	예산반영/ 센터완공 (100%) *장비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및 전시회 지원

* 취임 3개월 후 예상성과 :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 센터 설립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

3. 입법조치

- 법령 제·개정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진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의료기기 생산·수출 업무 추진을 위해 다수의 기관이 설립, 운영 중*에 있어, 유사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사)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79),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99), (사)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10),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03),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등

* 현재에도 광역경제특별회계에서 강원TP,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공단(강원본부) 등을 통해 강원지역 의료기기 업계의 생산, 수출을 지원 중에 있는 바, 별도의 조직 신설은 검토가 필요

- 전용공단 조성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국가산단 지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 또는 일반산단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소관 사항

* 지경부는 입지지정, 개발기준 선정 등 산단 조성에 관한 심의과정에 참여

5. 기대효과

- 기 구축된 강원 지역의 의료기기 생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경우 '18년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수출 국가” 도약

* 강원도는 '98년부터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도시(원주)를 육성한 결과 국내 최고의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로서의 기반을 확보(업체수는 107개사(전국의 5.7%)에 불과하나, 생산액 및 수출액은 각각 전국의 12.1%와 11.1%로 높은 비중 차지('11년)/)

* 의료기기 세계시장규모((Espicom, 억불) : ('11)2,733 → ('13)2985 → ('16)3,487

		' 12년	' 15년	'18년
◇ 중핵기업(매출 1천억)	:	3개사	6개사	10개사
◇ 대형기업(조기시장안착)	:	2개사	4개사	6개사
◇ 생 산	:	3.5조원	6조원	11조원
◇ 생 출	:	2.2조원	4조원	7조원
◇ 국산기기 국내시장점유율:		27%	40%	55%

강원-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① 강릉시 및 동해시 일원 4개 지구를 대상으로 북평~ICI지구, 망상~플로라시티, 옥계~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탄소제로시티를 육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강원도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09.11)
- 민간평가 등을 거쳐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12.9.25)
- 현재 공식지정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사전협의 중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농지·산지전용(농림부·산림청) 협의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1월 중순까지 협의 완료 목표
- 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13.1월말 혹은 2월초 예정,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의결)
-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개청('13.4월 예정)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정 및 개발사업자 선정	조성공사	조성공사	조성공사	조성공사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부처 협의 중이며,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약 이행 추진
- 다만, 일부 언론 및 기존 경자구역 지정 지자체에서 기존 경자구역 부실 등을 우려하여 추가지정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 기존 경자구역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일부 개발이 부진한 지역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경자구역 추가지정 우려 불식 추진
 - ※ 개발계획 확정시, 기존 경자구역 활성화 기본방향도 같이 발표 추진
 - 기존 경자구역 활성화 기본방향 주요 내용(안) : ① 국내외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②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 조기 실현, ③ 구역별 특화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5. 기대효과

- 산업생산 유발효과 : 고용유발 59,523명, 생산유발 14조 9,816억원, 부가가치 유발 5조 3,291억원
- 관광개발효과(망상 플로라시티) : 5,589억원

강원-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① 설악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 ②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환경부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군) 일대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94.8.31, 138.10km²)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광특회계 광역계정)에 설악동사업 포함, 관광인프라 구축지원 계획

· '13년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실시, 설악동 사업포함

* '12년도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국고 10억원 기 지원(광특회계 지역계정)

※ 가칭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요구는 남북 관련 특정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사항으로 우리부에서 추진 어려움(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동 법안 제정 논의된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통일부 소관으로 분류)

2.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설악동관광자원개발 지원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	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없음

5. 기대효과

- '70년대 개발 후 황폐화·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설악동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설악권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부처(환경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①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수한 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연간 3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 생태자원이 우수한 설악산 국립공원에 생태자원 체험, 환경교육 등을 위한 생태탐방체험시설(산악형) 조성사업 추진 ('13~'14년)

* 부지 선정 ('13.3월), 기본 및 실시설계 ('13.12월), 체험시설 준공 ('14년)

②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의 다양한 수요자(가족·학생·환경성질환자·외국인·취약계층 등)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의 개발·운영
- 설악산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DMZ, 백두대간 등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보급 ('13~'17년)

③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 국민들이 아름다운 설악권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조성
- 생태계 보전의식 고취, 주변 훼손지역 복원 등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도록 설악권을 연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13~'17년)

* '13년 영월(47km), 양구(13.5km), 화천(222.2km), 인제(15km) 등의 지역에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④ 생태관광지 연계

- 생태적 보전가치와 관광 매력도가 높은 설악(강원)권 내의 생태관광 지정지역과 연계하여 설악권 생태관광 단지로 육성 ('13~'17년)
- 설악권 생태관광 시범지역(강원 양구, '13년)을 주축으로, 주민·지자체·국립공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협의체 구성 ('13~'17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태관광기반시설 조성	설악산 지역 부지선정, 설계완료	시설 준공	운영	지속추진	지속추진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콘텐츠 발굴·적용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영월, 양구, 화천, 인제	계속·신규 탐방로 조성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생태관광지 연계	지역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실시	지정제, 협의체 운영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설악권 일대 생태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지역 및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생태기반(Eco-Based) 복합관광중심지대로 발전 도모

강원-9	청정농축산업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 육성
① 청정농축산업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 육성 (홍천에 청정 농축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여드리겠습니다. - 2012.12.13., 강원 홍천 꽃피공원 앞 유세)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분뇨처리 효율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원('13년, 홍천 1개소)
- (사료가격안정)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대책 추진 (홍천지역 소요파악 후 지원)
 - * 농가 직거래 구매자금('13년 신규, 전체예산 1,700억원) 및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가격급등 등 필요시 지원) 지원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조사료 공급 확대('12 : 전국재배면적 33만ha → '14이후 36)
- (축사시설 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13년) 및 사업비 지원 확대(홍천지역 소요파악 후 지원)
 - * 사업대상 확대,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지원체계 전면 개편,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2.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등을 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연차별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홍천지역 축산업 경쟁력 제고

총 복

충북-1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통합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지원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행정적·재정적 지원〉

- 통합에 직접 사용되거나 절감경비 등 200억* 지원 ('14년 이후)

* (행안부) 청주·청원에 특교세 각각 50억씩,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청주·청원교육청에 각각 50억씩 지원

- 청주·청원 보통교부세 6%(201억)* 10년간 지원 ('15년 이후)

* 체제개편특별법 제28조에 의거 국비 50%(10,088백만원) 및 특별교부세 50% 지원

-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 부족분(약 250억원 추정)에 대해 4년간 지원 ('15년 이후)

- 기타 전산통합 비용 등 현안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13년 이후)

※ 통합 청주시 행정구역 조정 및 청사 소재지 결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 ('13.9월경)되면, 4개구 신설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 추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

- 기금은 중앙차원에서 지원되는 재원 등으로 마련하도록 유도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통합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지원〉

- 상생발전방안은 2개 지역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제4조에 따라 청주시장 소속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
- 상생발전방안 이행추진상황 확인을 통해 추진 독려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청주·청원 통합 지원	통합 준비	통합시 출범 (7.1) 지원	행·재정 지원	행·재정 지원	행·재정 지원

3. 입법조치 : 관련 법령 기 개정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행·재정 적극 지원으로 통합 청주시의 안정적 출범에 기여
- 시·군 통합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의 모범사례로 정착 유도

충북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① 투자예산 점진적 확대 ②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 과학벨트 연구단(Site Lab)을 위한 기능지구 배정 추진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른 '12~'17년까지 기능지구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3,040억원의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
-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 개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3년)
-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투자 확대는 추가 검토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른 기능지구 지원방안('12~' 17)>

- 기능지구별 학연산 연계 기반 구축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연산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Science-Biz Plaza(SB 플라자) 구축 추진
 -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투자펀드 조성
 - ※ '16년까지 공공·민간출자를 유도하여 최대 2,000억원 조성, 지구별 특화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 유망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
 - 기초연구 성과 검증 및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학연산 공동 R&D 지원
 -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PSM)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과학벨트 성과 확산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 과학벨트내외 학연산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상호 One-channel로 연결하는 기능지구별 「Biz-Connect 센터」 운영
 - 과학벨트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 연구개발서비스 아웃소싱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추진, 지자체 협조를 통한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공간 등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기본 계획」 상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12~'17년 간, 3,040억원)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
 - '13년 확정된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의 15%에 불과 (기본계획 상 '13년도 사업비 400억원 중 62억원 확보)
- 해결방안 : 향후 예산당국 및 국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의 원활한 확보 추진

5. 기대효과

- 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학·연·산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한 기능지구의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충북-3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①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② 충북,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구간(이천~충주) 실시설계중('10.12~), 사업내용 변경(단선→복선)으로 타당재조사 시행('11.8~'12.11)
- 타당성재조사 결과(B/C 0.293, AHP 0.401), 복선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단선으로 실시설계 재개('12.11월)
- 단선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장기적 복선화에 필요한 복선용지의 추가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추진
- 기본계획변경안(단선→복선용지)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기존선 문경~김천구간(단선비전철)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시설 개량(고속화, 전철화) 방안 검토·반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중부내륙선 철도복선화	기본계획변경	1단계 공사시행	1단계 공사시행	1단계개통	2단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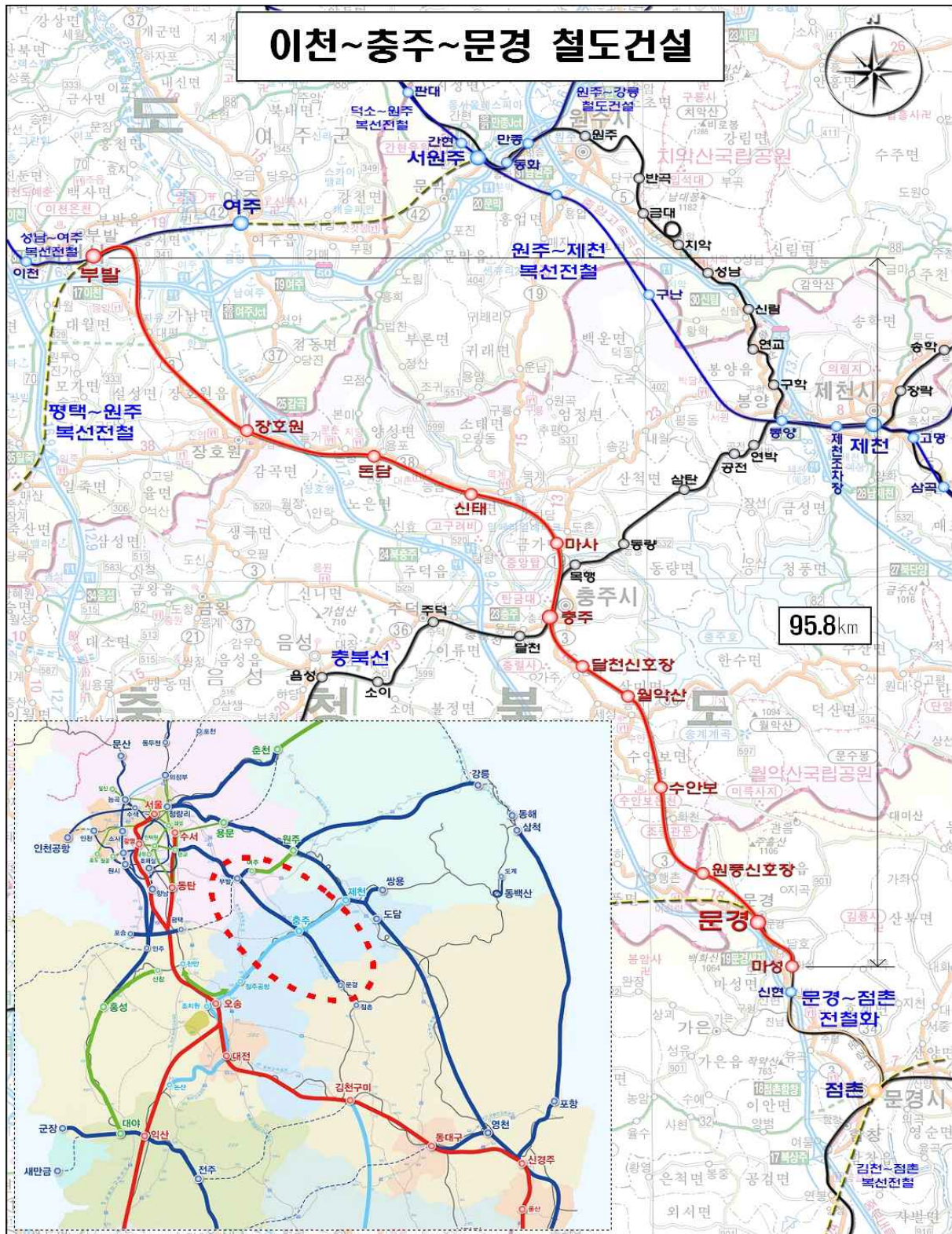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장기적 복선화에 필요한 복선용지의 추가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 (19,248→20,290억원) 필요

5. 기대효과

-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접근성 불량지역 해소
- 충북선, 경부선, 중앙선, 문경선 연결으로 철도의 효율성 제고 및 중부내륙지역 개발 촉진



충북-4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①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고속화도로 단계적 추진 ② 제천~평창간 고속화 도로 건설	

①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고속화도로 단계적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기본설계 중('11.2-'13.3)이며, 설계 마무리 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1공구) 추진예정

- '14년 : 실시설계 추진

- '15년- '17년 : 설계 및 공사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청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예산반영시) 기본, 실시설계	(예산반영시) 실시설계	(예산반영시) 실시설계	(예산반영시) 착공	(예산반영시) 공사

※ '17년말 기준 계획 : 예산확보시 착공 가능

* '13년 상반기 중 기본설계 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사업비가 과다하여 교통량이 많은 1공구부터 추진중이나, 도로개통의 효과측면에서 전 구간 동시 착수, 개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예정

5. 기대효과

- 충청내륙지역간 연계성 강화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충청, 호남권지역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개선

② 제천~평창간 고속화 도로 건설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사업 협의(강원도, 문화관광부 추진) 및 지원사업으로 포함여부 협의

* 현재 강원도에서 국도사업 14개, 국지도사업 2개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 협의중(강원도 → 문화관광부 → 관계기관 협의 → 대회지원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승인 → 고시)

- '14년- '17년 :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으로 결정시 설계, 착공등 후속 조치 실시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건설	지원사업 협의	(지원사업 결정및예산반 영시) 설계	(지원사업 결정및예산반 영시) 설계	(지원사업 결정및예산반 영시) 착공	(지원사업 결정및예산반 영시) 공사중

※ '17년말 기준 계획 : 착공 (지원사업 결정 및 예산반영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동 사업은 통과 교통량(3,366대/일 '10년)이 적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 동계올림픽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2차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5. 기대효과

-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충북5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① 공항 SOC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관련사업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시설 확충 추진
 - 청주공항 북측진입도로 건설사업 시행('11-'14, 0.7km 150억원)
 -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추진('13-'17, 2,744m→3,200m, 947억원)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 추진('13-'21, 56.1km, 7,787억원)
- 항공회담 등을 통해 국제선 노선 확대 등 활성화 지원

2. 추진일정

- (활주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3.2월)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13.3~'14.6) 후 '17.12월까지 활주로 확장공사 완료
 - * 예타 결과('13.2예정,KDI)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 결정 및 추진일정, 사업비 등 변경 예상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14년에 예산확보하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시행('17.1~'21.12월) 계획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활주로 확장	기본설계 (예타통과시)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공사시행	공사시행	공사완료
북측진입도로 건설	공사시행	공사완료	-	-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예산확보 노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 '13년 상반기 : 활주로확장 예타 통과 시('13.2) 기본설계 착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시행중인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13.2월)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13년 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반영
 - 예타 미통과시 사업 추진 불가로 '13년 예산 불용 예상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 추진을 위하여 '13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0억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사업추진 지연 예상
 - '14년 예산 반영

5. 기대효과

- (활주로확장) 대형화물기의 중량 제한 없는 운항으로 중부 물류 허브 공항으로 육성가능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경부선 2복선화를 통한 선로용량 확보, 세종시·청주공항·KTX오송역 활성화 및 중부지역 개발 촉진

충북 6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재조사(국회 예산 반영시)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고속도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
- 향후 교통량 증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협의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협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17년말 기준 계획 : 교통량 검토 및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결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재정(약 9.5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교통수요가 적어 ($B/C=0.14\sim0.38$), 교통량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진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세종시와 각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양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7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① 보은군 일대 복합휴양단지 조성 ② 충북의 바이오(Bio)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 주변 지역의 개발촉진 ■ 주관부처 : 산림청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세종시 등 중부권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북 남부권에 종합 산림휴양밸리 조성 추진

* 기간 및 예산 : '13~'17, 3,8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대상지 :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일원 2,538ha(국·공유림)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조성 1차년도	조성 2차년도	조성 3차년도	조성 4차년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절실

5. 기대효과

- 세종시 등 중부권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

충북·8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①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건강타운 기반시설 확충,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 등을 통해 중부내륙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약속 - 2012.12.13., 충북 제천 남천약국 유세)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 충북, 강원, 경북 3개 도를 연결하는 39개 사업 추진('13~'22)
- 신심승지 브랜드 만들기(총사업비 1,055억원), 녹색 감성길 연결하기(264억원),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하기(2,651억원) 등 추진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 2013년 ~ 2022년(10개년) / 3,970억원(국비,1,595, 지방비2,010, 민자365)
- 대상지역 : 3개도 17개 시·군
- 사업내용 : 3개유형 39개 세부사업
- 2013년 예산 확보 : 3개시도(충북,강원,경북) 11개시군 55억원 설계비 반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39개 사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없음

5. 기대효과

○ 중부내륙권의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로 지역간 균형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와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기대

충남·세종

충남·세종-1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① 진입로 개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②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도청 청사이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상 진입도로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 중

* 충남도청 진입도로 : 총사업비 1,133억원 중 566억원 국고지원('10~'13)

-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

* 충남 진입도로 1개 추가건설 지원요청 ('13년 타당성 조사비용 30억 반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확보	국고지원	국고지원	국고지원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

○ 입법추진계획

- 법령 일부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도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1038 이명수, 1902403 강창희)

* 종전부동산 부처이관, 활용계획 수립, 추진조직 구성 등을 위해 계류 법안 수정 필요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도청진입도로 건설사업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는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충남·세종-2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① 충청내륙고속도로를 통한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와 '13년 상반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협의(30대 선도사업으로 간이 예타 추진 협의)
- 예타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14년)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15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예타 시행	(예타통과시) 타당성조사 추진	(예산반영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산반영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산반영시) 공사착공

※ '17년말 기준 계획 : 타당성 확보 및 적정 예산 반영시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가교통축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하는 방안(예타면제) 검토

5. 기대효과

- 남북방향 충남 내륙축 형성으로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 확장이 곤란한 서해대교 구간 교통분산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간선기능 제고와 수도권 교통정체에 효과적으로 대처

충남·세종-3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①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②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및 관련 법 개정 여부 적극 검토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을 현행 광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간 소요사업으로 광특회계로 추진 시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추가적인 문화도시 선정·지원 불가능 [경주역사문화도시 62억('10년) → 38억('13년) 감소]

- 문화도시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3)

【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개요 】

- 목표 :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 ~ 2030년(22년) / 1조 2,577억원
(국비 4,001억원, 지방비 5,019, 민자 3,557억원)
- 사업내용 : 총 57개 사업(공산성 및 주변유적 정비, 백제사비 고도의 옛길 복원 등)
 - 공산성 정비(공산성 여장 복원, 수목 정비, 경관조명 개선 등)
 - 주변유적(정지산 유적, 고마나루) 정비
 - 백제사비고도의 옛길 복원을 통한 고도공간의 역사성 회복 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회계제도 개편 및 관련 법 개정	관련 법 제정 및 예산회계제도 개편 협의	예산회계 변경(광특→ 일반회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공주·부여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부처(문화재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고도(古都)의 정체성과 골격 회복을 위한 유적 정비·복원 사업
 - 부여 사비왕궁터, 부여나성 정비, 공주 공산성 정비 등
 -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재생사업 추진
 - 전통적인 가옥, 담장, 골목길 재생 및 조성 등
 - 주택개보수, 도로정비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
 - 제민천 옛물길 복원, 이주단지 조성, 백제역사마을 조성 등
 - 전통 문화가 주민들의 삶 속에 전승되는 거리 조성
 - 고도의 전통 먹거리, 볼거리, 공예 산업 발굴, 육성
 - 주택개보수, 도로정비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
- * 사업기간: 2012~2021년(10년 주기) / 지구면적 부여 292만㎡ 공주 204만㎡

2. 추진 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주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사업	대통사지 토지매입	공산성, 대통 사지, 정지산 유적 정비 ·	공산성, 대통 사지, 정지산 유적 정비 ·	공산성, 대통 사지, 정지산 유적 정비 ·	공산성, 대통 사지, 정지산 유적 정비 ·
	공주 감영터 토지매입	제민천 옛물길복원	제민천 옛물길복원	제민천 옛물길복원	제민천 옛물길복원
	왕릉교 고도지구 토지매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부여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사업	사비왕궁터 발굴	사비왕궁지 발굴 · 정비,	사비왕궁지 발굴 · 정비,	사비왕궁지 발굴 · 정비,	사비왕궁지 발굴 · 정비,
	부여나성 정비	부여나성 정비	부여나성 정비	부여나성 정비	부여나성 정비
	옛 길 조성	옛물길 · 옛 길 복원	옛물길 · 옛 길 복원	옛물길 · 옛 길 복원	옛물길 · 옛 길 복원
	이주단지 설계	이주단지조성	이주단지조성	이주단지조성	이주단지조성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한옥주택 개량 · 전통 경관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 지정한 지정지구의 해제 요구 및 고도보존계획(사업)에 대한 무용론 제기 불가피 ⇒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 법 개정 및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 희망, 기대에 비해 예산지원 절대 부족
- 예산 미지원시 정부정책 불신 및 고도보존 무용론 제기와 주민여론 악화, 민원 빈발

- 2013년도에 우선적으로 총액계상사업(문화재보수정비)에서 고도보존사업 예산 분리 편성, 주민지원사업 신규 지원

5. 기대효과

-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 고도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
- 환경개선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고도보존사업 성공적 조기정착
 - 사유재산 제한 등 기존 문화재 정책으로 야기된 주민 불편 해소
 - 주거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하여 주민참여 기대
- 고도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육성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 제고
 -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고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유적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충남·세종-4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 선정 및 타당성조사 시행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재조사(국회 예산 반영시)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고속도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
- 향후 교통량 증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협의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협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17년말 기준 계획 : 교통량 검토 및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결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재정(약 9.5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교통수요가 적어 ($B/C=0.14\sim0.38$), 교통량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진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세종시와 각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양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세종-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① 투자예산의 점진적 확대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른 '12~'17년까지 기능지구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3,040억원의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
 -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투자 확대는 추가 검토
-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점지구와의 연계전략을 차별화
 -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수립('13년)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별 역량 육성 및 기반 마련
 -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연·산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Science-Biz Plaza(SB 플라자) 구축 추진
 -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투자펀드 조성
 - 기초연구 성과 검증 및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학·연·산 공동 R&D 지원

- 전문이학석사(PSM,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과학벨트 성과 확산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 과학벨트내외 학·연·산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상호 One-channel로 연결하는 기능지구별 「Biz-Connect 센터」 운영
- 과학벨트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예산반영 정책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상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12~'17년 간, 3,040억원)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
 - '13년 확정된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의 15%에 불과 (기본계획 상 '13년도 사업비 400억원 중 62억원 확보)
- 해결방안 : 향후 예산당국 및 국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의 원활한 확보 추진

5. 기대효과

- 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학·연·산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한 기능지구의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충남·세종-6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② 상생협의회 구축 지원 ③ 광역교통망 확충 ④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수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⑥ 산업집적단지 조성	

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행복도시내 국·공립병원, 민간 기업 및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세종시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시 검토 의견 제출('13)
-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 미비사항에 대한 제도 보완('13)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행복도시특별법개정	법령개정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추진계획
 - 2013년 상반기 발의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행복도시내 기업 및 병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흡수효과 및 발전 격차 발생 우려
 - 인센티브의 정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5. 기대효과

- 대학·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어 세종시 자족성 조기 확보 가능

관련부처 계획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회심의, 세종시 및 관계기관과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행·재정 지원 방안 검토 및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위주로 추가적인 지원 사항 발굴 ('13년 상반기)
- 총리실,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 마련 및 확정('13 상반기)
- 관계법령(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13년 하반기~)

※ 주요 검토내용

분야	주요내용	
행정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강화	· 현행 세종시 '증장기 발전방안'을 '종합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세종시 관련 중요사항은 대부분 동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조직특례	· 세종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수시 조정
	의원정수 확대	· 세종시 늘어나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구 의원정수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감사위원회 설치	·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재정	행특회계 투자범위 확대*	· 현재 예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행특회계(8.5조원) 투자범위를 주변지역 등으로 확대
	광특회계 별도계정 설치	· 신규사업 등 투자사업을 위해서는 광특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예정지역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 세종시 출범초기 학교가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특례	·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시세 총액의 3.6%('13년기준, 약 50억)를 면제

* 행특회계 투자범위 확대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 사항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법령개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재정지원 방안은 기재부, 교과부, 행복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재부·교과부·행안부·환경부·국토해양부·지경부·문화부·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대전시장, 충청북도·충청남도지사, 민간위원 10명 포함 총 25명

5. 기대효과

- 세종특별자치시가 조기에 정착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과학벨트 기본계획(‘12~’17)」에 따른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 개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3년)
- 기능지구별 학·연·산 연계 기반 구축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연·산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Science-Biz Plaza(SB 플라자) 구축 추진
 -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투자펀드 조성
 - ※ ’16년까지 공공·민간출자를 유도하여 최대 2,000억원 조성, 지구별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유망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
 - 기초연구 성과 검증 및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학·연·산 공동 R&D 지원
 -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PSM)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과학벨트 성과 확산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 과학벨트내외 학·연·산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상호 One-channel로 연결하는 기능지구별 「Biz-Connect 센터」 운영
 - 과학벨트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2. 추진일정

- '13년 : 기능지구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 '14년 : Science-Biz Plaza 구축 상세기획 추진
- '16년~: 산학일체형 현장 중심 연구개발 인력양성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상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12~'17년 간, 3,040억원)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
 - '13년 확정된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의 15%에 불과 (기본계획 상 '13년도 사업비 400억원 중 62억원 확보)
- 해결방안 : 향후 예산당국 및 국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의 원활한 확보 추진

5. 기대효과

- 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학·연·산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한 기능지구의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② 상생협의회 구축 지원

■ 주관부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협의 : '13년 상반기 중
 - 상생협의회(실국장급, 반기별 개최), 실무협의회(과장급, 분기별 개최)
- 상생발전 제안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사업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상생협회의의 심의 및 총리실 지원 건의
- 행복도시와 주변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결도로망 개선을 추진
- 대전시 및 삼성전기와 기 체결한 업무협약 관련 협력과제 신규 발굴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생협의회 발족 안전발굴 지원건의	안전발굴 지원건의	안전발굴 지원건의	안전발굴 지원건의	안전발굴 지원건의

* '13년 상반기 중 상생협의회 구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행복청과 지자체 간 역할분담 및 중심 역할 수행에 대한 갈등 소지
- 상생발전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소요되는 자원 조달방법 및 총리실 등 중앙부처의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출할 필요

○ 해결방안

- 지자체 간 역할분담에 따른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또는 세종시 중심의 상생협의체 운영이 필요
 - * 기 추진 중인 행복-세종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확대 개편 추진
- 세종시와 인근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

5. 기대효과

- 행복도시와 읍면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통합을 유도함으로써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달성
- 인근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동반성장에 기여

③ 광역교통망 확충

■ 주관부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전국적 광역 교통망 확충(주요도시에서 2시간내 접근)을 위해 총 13개 광역도로(총 113km, 국고 2.7조원) 건설사업을 동시 추진
 - ‘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첫마을 입주를 위해 정안IC·오송역(KTX)·대전 유성 연결도로 등 3개 노선을 조기 개통 완료
- 단계적으로 건설 추진중인 10개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13년부터 조기발주 등을 통해 ‘17년 이전까지 광역교통망 확충 완료
 - 공사중인 사업(3개) : 테크노밸리 연결, 청주 연결, 청원IC 연결도로
 - 설계 등 준비중인 사업(4개) : 공주 연결, 오송~청주, 오송~청주공항, 조치원 연결도로
 - 신규 추진사업(3개) : 오송~조치원, 부강역 연결, 외곽순환도로
- 본격적인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新 교통수요 및 광역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보완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행복도시건설 광역교통망확충	도로건설	도로건설	도로건설	도로건설	사업완료

* '13년 상반기 신규사업 발주 : 공주 연결도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인근 고속국도 및 광역철도 등과 연계한 국가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
-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등 주변도시와의 광역 도로망 구축을 통해 도시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④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부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과학벨트 기본계획(‘12~’17)」에 따른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 개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13년)
- 기능지구별 학·연·산 연계 기반 구축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연·산의 공간적 통합을 이루는 Science-Biz Plaza(SB 플라자) 구축 추진
 -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투자펀드 조성
- ※ ’16년까지 공공·민간출자를 유도하여 최대 2,000억원 조성, 지구별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유망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
- 기초연구 성과 검증 및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학·연·산 공동 R&D 지원

-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PSM)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과학벨트 성과 확산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 과학벨트내외 학·연·산 혁신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상호 One-channel로 연결하는 기능지구별 「Biz-Connect 센터」 운영
- 과학벨트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2. 추진일정

- '13년 : 기능지구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 '14년 : Science-Biz Plaza 구축 상세기획 추진
- '16년~: 산학일체형 현장 중심 연구개발 인력양성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상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12~'17년 간, 3,040억원)의 원활한 확보가 필요
- '13년 확정된 기능지구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의 15%에 불과 (기본계획 상 '13년도 사업비 400억원 중 62억원 확보)
- (해결방안) 향후 예산당국 및 국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기능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의 원활한 확보 추진

5. 기대효과

- 기초과학 연구 성과의 기술사업화, 학·연·산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한 기능지구의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관련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거점지구 인근 외국인 생활권 조성]

- 외국인 정주 수요에 맞추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4-2생활권에 주거단지 조성('12.1-'15.12)
- 거점지구 유입 외국인의 주택수요 및 입주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주택 공급
-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13-'15) 및 학교·복합센터,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와 근린상가, 상업지역 조성 등도 병행('16-'17)

[거점지구 인근에 외국대학 유치]

-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3)
 - * 한밭대(대전), 교토공업·큐수공업대(일본), 울런공대(호주), 마틴루터대(독일)
- 외국대학 유치전략(설립근거 등) 마련위한 특별법 개정추진('13)

- 애미네타그룹 주도, 캐나다 및 미국소재 100여개 유명대학 대학타운 유치(계속) 및 부지매매계약 체결('13)과 '17년 개교를 목표

[거점~기능지구간 교통체계 구축]

- 사업기간 : '11. 9월~'15. 6월(2개구간), 사업비 : 4,013억원

* 현공정율('13.1월) : 19.7%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학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확정 과제 추진(3건)	확정 과제 추진(3건)	확정 과제 추진(3건)	확정 과제 추진	확정 과제 결산

* '13년 상반기 중 기능지구 Sb플라자 구축방안 협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교과부의 과학벨트거점지구 용지매입비 미반영 등 사업지연과 기능지구 핵심시설인 SB Plaza 입지 후보지 결정이 지연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소요량이 거점지구는 가구별 세부 주택공급계획(4,300세대)이 있으나, 기능지구는 공급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부지규모 등의 산정이 불가능
- 교과부(과학벨트기획단) 주관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간 정보공유와 갈등소지를 사전 예방할 필요

5. 기대효과

-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가용토지 부족이 예상되므로 주거환경 조성 및

외국대학 유치를 통한 거점지구 지원을 강화

-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기능지구 간(세종~청원~천안)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기능지구 활성화에 기여
- 외국대학 유치로 글로벌 과학기술인 양성 및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

수 민간기업 이전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수도권 기업이전, 지방 신증설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세종시의 기업유치 활동 지원

* 세종시를 ‘지원실적 저조지역’으로 분류하여 일반지역 대비 입지·설비투자 지원비율 5% 상향지원

-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을 활용하여 세종시 산업집적단지 입주기업들의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R&D 과제, 기술 컨설팅 과제, 인력양성 과제 등을 지원(‘13년 예산 : 544억원)

- ‘지역산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의 산업 진흥을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종시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집적단지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지원 지역산업지원사업 지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산 한도 내 지원

- 세종시의 기업유치 실적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산업집적단지 조성 및 이에 따른 기업입주가 본격화되면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및 지역산업 지원 사업 추진*

5. 기대효과

-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산업집적단지 조성을 활성화하여 세종시를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춘 지속 가능한 행정복합도시로 조기 정착

* (사례) 보조금 1억 지원 시(국비 기준) 21.2억원의 기업투자 유인과 4.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⑥ 산업집적단지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수도권 기업이전, 지방 신증설 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산업집적단지에 기업입주 활성화 지원
- 2단계 광역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 산업집적단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충청권 : 의학바이오, 차세대에너지, New IT, 융합기계부품

- 산업집적단지에 기업 애로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마케팅 등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생산-소비-고용의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조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종시 산업집적단지조성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광역선도산업 연계 -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산업집적단지가 국가산업단지(국토부) 또는 일반산업단지(세종시)로서 구체적 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지원 가능

5. 기대효과

- 기업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세종시가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행정복합도시로서 조기 정착

충남·세종-7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①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량, 논산~대전~세종~청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구축을 위해 '1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 신청('12.12 우리부→기재부)
-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국토균형발전,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기 착수 추진
- 기본계획 등 절차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완료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사 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비용(384억원)은 철도건설법(영제22조)상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예산으로 이설 곤란
 - * 대전시는 인입선('76년 신설)이 도시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국가부담 이설을 지속 요구
- 인입선 이설은 사업추진,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충청권내 거점 도시를 연결하여 철도 중심의 충청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기여
- 대전광역시 인접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광역권 사회기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전 북

전북-1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① 새만금개발청 설치 ② 새만금사업특별회계 설치 ③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① 새만금개발청 설치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새만금관련 기구·인원*을 활용하여 새만금개발청 개청준비단 구성('13.3)

*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국토부(새만금개발팀) 등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새만금개발청 설치방안 마련('13.8)

* 행복청, 일본 북해도개발청 등 국내외 사례를 비교

-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위한 직제 제정 ('13.9)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개발청 설치 완료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정
- 입법추진계획
 - '13.9월 제정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서 수행하던 새만금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향상 등 효율성 제고

< 참고 : 관련 현황 >

◆ 새만금사업 관련 행정기관

기 관 명	수 행 업 무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 새만금사업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 총괄조정 ○ 새만금위원회 운영 지원 ○ 부처간 쟁점사항, 기타 현안사항 조정 등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 새만금 전 지역(401km²) 종합개발계획(MP)수립 ○ 새만금 복합도시 개발 제도개선(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 방수제, 다기능부지 명소화, 농지 조성
환경부 (본부:물환경정책과 새만금환경T/F) (소속: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수질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새만금개발팀)	○ 문화관광용지 조성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 행사, 투자홍보, 어업보상 ○ 도의회, 중앙부처, 국회대응
전라북도 (소속: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 북측산단(18.7km²) 및 관광단지(9.9km²)개발 ○ 산업유치(투자기획, 유치활동) ○ 기업지원(건축지원, 환경보전, 토지정보)

② 새만금사업특별회계 설치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공약이행방안 검토 중)

- ③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관련부처 : 환경부

주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방조제 완공으로 노출된 간척지에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단지로 육성
- (방수제 축조)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9개공구 54.2km)는 '15년까지 완료 추진 ('12년말 추진율 36% → '13년까지 56%)
- (농업용지 조성) '20년까지 전체 농업용지 8,570ha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완료

* '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농업용지구간 4등급, 도시용지구간 3등급)과 연계하여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새만금사업 지속·안정적 추진 지원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예산반영
방수제 공사	54.2km 계속공사	54.2km 계속공사	54.2km 완공		
농업용지 조성	시범공구 (1,513ha) 착공	시범공구 계속공사	시범공구 중700ha 부분준공 6개 농업용지 (7,057ha) 착공	시범공구 계속공사 6개 농업용지 계속공사	시범공구 (1,513ha) 준공 6개 농업용지 계속공사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새만금 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12.11 공포) 시행령

○ 입법추진계획

- ‘13.9월까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국토부 주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조)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농업용지는 영농을 위한 용수 확보·공급을 전제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농업용지구 간 4등급, 도시용지구간 3등급)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5. 기대효과

-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9개 공구 54.2km) 축조 공사를 '15년까지 완료하여 새만금지역 개발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업용지조성 시범공구(1,513ha)를 '13년도에 우선 착공하여 새만금지역 내부토지 개발 가시화 및 타 용지의 민간투자여건 조성
 - '15년까지 대규모농업회사(새만금팜, 농산, 초록마을 등) 입주 부지(700ha) 우선 준공으로 민간투자를 조기 활성화하고, '17년까지 시범공구 농업용지조성 완료

관련부처(환경부) 이행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① 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 연차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13년~)
 - 중장기 생태계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13년)
 - 수질개선효과 정량화 모델 개발('13~'14년)
 - 새만금 수질개선효과 중간평가('15년, 총리실 합동)
 -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종합대책 조정·보완('16년~)
- ②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 생태환경용지 개발기본계획 예비타당성 검토('13년, 기획재정부)
 - 1단계('12~'20년) 생태환경용지 개발 기본·설계('14~'15년)
 - 1단계('12~'20년) 생태환경용지 공사('16년~)
 - 2단계('21~'30년) 생태환경용지 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17년)
- ③ 익산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
 - 현업축사 토지매수 후 수림대 조성('13~'15년)
 - 생태하천 복원 기본·실시계획 수립('13년)

- 생태하천 복원공사 착수 ('14년)
- 생태복원 공사 완료 ('16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질개선종합 대책	'12년 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 평가, 수생태계 모니터링 착수	수질개선 중간평가 모델 개발	수질개선 중간 평가	조정·보완	유지관리
생태환경용지 조성	예비타당성 검토(기재부)	기본 및 실시설계 (1년차)	기본 및 실시설계 (2년차)	공사착공	2단계 계획수립
왕궁환경개선 대책	왕궁지역 환경개선대책 추진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	생태복원 공사착수	토지매수 완료	생태복원 완료	사후관리 지속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새만금호 원수 사용업체 입주시기, 새만금호 수질상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물사용부담금 징수시점이 불확실하여 재원 확보 차질 우려
-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재원확보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12.12~'13.8월)

5. 기대효과

- 농업용수 공급, 관광·레저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 보장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 생태계 변화에 따라 천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환경 구현
- 생태환경의 가치향상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새만금의 이미지 제고

전북-2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①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전북 과학연구단지*가 미생물 분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등 관련 인프라 구축
 -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착수('13)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 시 입법화 추진('14)
 - 전북 미생물 융복합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15~)
- ※ '04년 전북 완주군 일대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여 '09까지 266억원 지원
- (2단계)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BT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전북 지역에 소재한 관련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업화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필요시 입법화 추진	사업 착수	사업 추진	사업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미생물 분야의 전문기관 설립 시 유사기관과의 기능적·지역적 중복
성과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해결방안

-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마련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 입법화 검토 추진

5. 기대효과

-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식품산업 등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해 미생물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으로 확대 발전

전북-3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① 부안군과 고창군을 연결하는 도로 및 부창대교 건설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14년- '17년 : 예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도77호선 부안-고창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 '17년말 기준 계획 : 타당성 확보시 공사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재정(약 3.5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교통수요가 적어 ($B/C=0.27$), 교통량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진여부 결정

* '02년 예타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음($B/C=0.54$)

* '11년 예타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음($B/C=0.27$, $AHP=0.434$)

5. 기대효과

- 추후 공사 완공시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4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①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휴양·힐링의 일번지로 조성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관련부처 :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계획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전북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되, 우선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13)
- * “임실치즈마을” 등 기존 체험시설을 활용할 경우, 예산 등 소요 최소화 가능
-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 동식물 매개치유단지 및 식약동원 연수센터 등 시설적합성 및 설치방안 확립, 전북도 자체예산)
- 사업계획의 경제성·정책효과성 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13)
- 사업 세부계획 및 설계용역 실시('14)
-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조성('15~'17), 시설운영('17 이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동·식물매개치료 단지, 식약동원 연수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세부사업 계획 수립	기반조성	시설공사	시설공사, 운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동식물매개 치유센터) 동식물이 지닌 ‘치유’ 기능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효과 역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만 증명가능
 - 또한 동식물을 활용한 치유센터 등은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국내에 설치모델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해 사전 연구 및 타당성 분석을 정밀히 실시할 필요
- (식약동원 연수센터) 임실군의 입지 등 감안 시, 사업 규모 대비 경제성 문제 발생 가능
 - 따라서, 임실치즈마을 등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대안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저한 사전 점검 필요

5. 기대효과

- (동식물매개 치유센터) 동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치유, 심리치료 등 가능
- (식약동원 연수센터) 체험에 기초한 농업농촌 가치 및 식습관 교육 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 및 농어촌 가치 재인식 가능

- 농촌체험교육 시장 규모 확대(현재 : 656억원 → 연간 1,000억원 이상)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 이행계획

【산 립 청】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장기 체류 산림치유 충족을 위해 진안군의 한방·아토피케어 특구 등과 연계한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 기간 및 예산 : '13~'17년, 1,500억원(국비)

* 대상지 : 전북 진안군 일원 3,000ha(국·공유림)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기본구상 용역	조성 1차년도	조성 2차년도	조성 3차년도	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절실

5. 기대효과

- 산림, 음식, 문화관광자원이 어우러지는 장기체류형 치유모델로 제시
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전라북도〕 금년도 준공 예정(’13.6월 / 본격개원: ’14년 초)인 태권도원과 연계 연수생 및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 휴양 및 건강유지 등 치유의 공간으로 특화 조성

- 치유 기능 : 한방케어센터, 체류형 힐링센터, 힐링사이언스 가든
- 휴양 기능 : 한옥텔, 콘도형 가족호텔, 리플레쉬 스파, 퓨어오가닉푸드몰, 야외문화공간 등
- 레포츠 기능 : 태권어드벤처, 챌린지 파크
- 힐링 프로그램 : 신체치유 및 명상·기(氣)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클리닉 등

【태권도 힐링캠프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 2013년 ~ 2017년(5개년) / 1,000억원(지방비 및 민자유치) *국비지원 없음
- 위치/면적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번지 일원/133,223㎡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민자시설지구로 추진하기로 기 승인

※ 전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08.12월) 및 시행규칙(’09.5월)」 제정,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계획 공고(’09.10월), 태권도원 민자유치 종합 마스터플랜 발표(’12.11월)

2.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태권도 힐링캠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실시설 계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조성	계속	계속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태권도원 및 지역의 자연여건과 연계, 국제적 관광수요 창출
-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문화·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전북-5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①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제석사지 등 특별보존지구 사업 진행 및 보존육성지구 사업 추진 ② 교육·홍보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 병행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익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
- 고도 익산을 대표하는 미륵사지 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으로 백제 역사문화권 조성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백제역사문화권 조성	사업추진	계속	계속	계속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 관련, 예산 및 조직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행안부, 기재부)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고도 익산의 문화적 가치 제고

관련부처(문화재청)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유적 정비·복원 사업
 - 금마도토성, 아석정 정비, 금마객사 복원
-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재생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 옥룡천 옛물길 회복, 이주단지 조성
 - 금마로, 미륵사지로 등 옛길 회복, 교동마을 조성, 한옥주민센터 건립
 - 전통적인 가옥, 담장, 골목길 재생 및 조성
 - 주택개보수, 도로정비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
 - 한옥형 호텔 및 펜션 등 전통숙박단지 조성
- 전통 문화가 주민들의 삶 속에 전승되는 거리 조성
 - 고도의 전통 먹거리, 볼거리, 공예 산업 발굴, 육성

* 사업기간 : 2012~2021년(10년 주기) / 지구면적 121만㎡

2.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도 익산 역사문화골격 회복사업 지원	옥룡천 옛물길 회복 역토지매입	옥룡천 옛물길회복 설계, 착수	옥룡천 옛물길회복	금마로 옛 길 회복	미륵사지로 옛 길 회복
		주택 재생사업	주택 재생사업	옛길 회복	전통 경관 회복
	이주단지 매장문화재 조사	이주단지 설계, 착수	이주단지 조성	이주단지 조성	전통상업 공방 조성
	고도육성기반 구축	금마도토성 정비	금마관아복원	금마관아 복원	금마객사 복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관련법에 근거한 고도 지정 이후 고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으
로 지역주민은 국비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였으나, 예산지원 절
대 부족
-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사업 등 고도육성
사업 지연 및 고도지구 내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 팽배로
고도보존육성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 발생
 - 지정지구의 해제 요구 및 고도보존계획(사업)에 대한 무용론 제기
불가피 ⇒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도록 주민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국비지원 필요
- 2013년도에 우선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에서 고도보존
사업 예산분리 편성, 주민지원사업 신규 확보 추진

5. 기대효과

- 고도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 고도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
- 환경개선에 따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고도보존사업 성공적 조기정착
 - 사유재산 제한 등 기존 문화재 정책으로 야기된 주민 불편 해소
 - 주거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하여 주민참여 기대
- 고도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육성정책으로 세계적 경쟁력 제고
 -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고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유적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전북-6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① 정읍에서 남원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 공사(새만금-정읍)

* 국도30, 21호선 89.3km 중 28.2km시행중, 3차계획 반영 7.1km, 나머지 구간(54.0km)은 별도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

- '14년 : 공사 완료(새만금-정읍),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포함 검토(정읍-남원)

* 도로부문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연구('13~'14년말)

- '15년- '17년 : 계획수립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 국도건설	공사	공사	-	-	-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	제4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 '17년말 기준 계획 : 새만금-정읍(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확보
 - 현재 사업계획이 없는 잔여 구간(정읍~남원)은 교통량 증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

5. 기대효과

- 추후 공사 완공시 새만금과 전북 내륙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7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① 식품안전성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정부지원시설 구축 - 대한민국 최초의 'R&D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육성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품질안전·기능성평가·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등 기업지원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13년 착공)하는 등 R&D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15년)
- 연구부터 생산·수출까지 기업하기 좋은 지원체계* 구축(~'15년)
 - * R&D·인력 공급·금융 등 세부 지원방안 마련, 검역·통관 통합사무소 설치 등
- 투자설명회, 기업방문 및 초청, 식품박람회 참가 활동을 통해 '15년까지 160여개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유치에 총력(연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착공 투자유치	산단 조성공사 투자유치	산단 조성완료 지원시설 운영	식품클러스터 본격운영	식품클러스터 본격운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R&D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
 -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장비·시설, 사무환경 구축 등 우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5. 기대효과

- 160여개 기업·연구소 유치 등으로 '17년까지 22천명의 고용창출
 - '20년까지 입주기업 매출액 15조원, 수출 30억불 달성 기대
- 기술개발(혁신)과 고부가 가치화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식품기업과 연구소와의 기술교류, 협력연구에 의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고부가 상품 생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개요〉

- 목 적 : R&D·네트워크수출중심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동북아 식품시장 선도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위 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
- 사업기간 : 2012~2015년(목표)
- 총 면 적 : 358만㎡(산업단지 232, 배후도시 126)
- 총사업비 : 5,535억원(국고 1,371, 지방비 622, 민자 3,542)
- 주관/시행 : 농림수산식품부·전라북도·익산시/나공사
- 입주기업 : 식품기업 150개, 식품연구소 10개, 기업지원시설 6개 등

전 남

전남-1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① 호남 KTX(오송~익산~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를 적극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민대통합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구간 신선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성숙시 무안공항 경유노선 신설을 검토

2. 추진일정

세부공약	1년차	2년차	3~4년차	5~9년차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경유 건설	타당성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적정 추진시기 검토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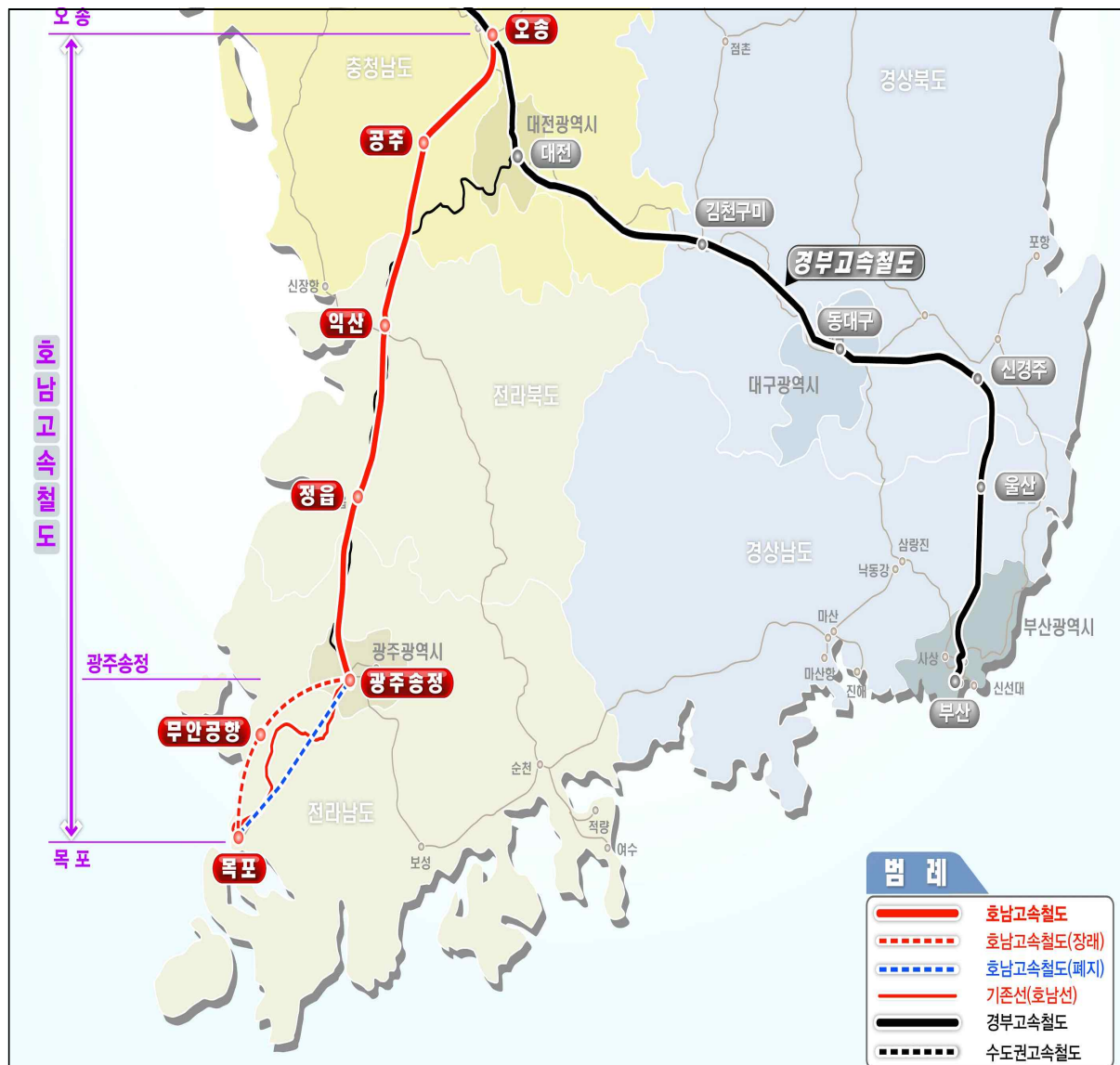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무안공항 경유 노선 신설시 KTX 서비스 소외로 나주시 등 직선노선 지역 반발

- 향후 사업추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 협의를 거쳐 추진

5. 기대효과

- 환황해권 물류 등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 및 낙후된 서남해안권 경제 활성화



전남-2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① 송정~순천간 철도 선형개량 병행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전선(삼랑진~순천~광주송정) 구간중 일부구간(삼랑진~진주, 광양~순천)은 既완료, 공사중인 진주~광양구간은 '15년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 순천~광주송정 구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기 착공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남해안철도 고속화	-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순천~광주송정의 경우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 실현에 차질 우려
 -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지원,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교통네트워크 연결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기재부)하고, 별도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공약사업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 등 추진

5. 기대효과

- 경전선 미개량구간(순천~광주송정)의 전철화에 따른 일괄수송체계 구축, 광역통행시간 단축
- 남해안 선벨트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연계협력 발전에 기여



전남-3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①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추진 적극 검토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신청
- '14년 : 기본 및 실시설계
- '15년- '17년 : 설계 및 공사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설계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설계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착공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공사

※ '17년말 기준 계획 : 타당성확보 및 예산반영시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과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감안시 국가재정법상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 경제성이 없어도 정책적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예타 면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03년 예타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음($B/C=0.72$)
- * '06년 예타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음($B/C=0.11$, $AHP=0.312$)
- 향후 교통량 증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

5. 기대효과

- 공사 완공시, 영호남 교류 활성화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전남-4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①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②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지식경제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여수시의 “미래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11.5~’12.1)결과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
 - * 경제성 분석결과(분양률 100% 가정시) B/C 0.89~0.92, NPV -380~-530억원
- 여수시는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및 투자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13년 정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신청 예정
- 국가산단으로 조성시, 국토부 관할사항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적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필요성 검토
 - * ‘13년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추진시 여수시 및 전남도청과 협력체제 유지
- 산업단지조성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경우, 이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강구
 - * 지역 광특산업과 연계, 관련 기반구축 및 R&D 지원, 고흥의 항공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연계 등

2. 추진일정 : 전남도청 등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수 미래소재 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신청시 협력	국가산단 조성 확정후 세부 내용 협의·확정	-	-	-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	-	-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방안 등 협의·검토 실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용역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왔으나 여수시의 부족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및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필요
 - 여수산단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유망 신소재 및 정밀화학분야 유치 필요
 - 분양율 향상을 위해 단계별 개발 및 민자유치 방안 등으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5. 기대효과

- 여수국가산단의 공장용지 부족 및 신규수요 대응으로 지역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
- 여수석유화학단지⇔울촌산단⇔광양산단⇔미래소재산단으로 연결되는 新산업벨트 구축으로 여수석유화학단지의 경쟁력 제고와 고도화에 기여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여수/광양만권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미래형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단개발 지원
 - * 현재, 광양만권에서 광양국가·울촌일반 등 13개 산단 19.8km²를 개발중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미래형 소재산업의 입지를 지원
- 아울러 광양만권 산단의 유치업종이 대부분 석유화학, 제철, 철강 등이므로 연계된 미래형 소재산업 선정
 - * 미래형 소재산업 : 정보통신·생명공학·우주개발·극미세기술(10억분의1)·환경·문화·대체에너지기술산업 등을 위한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항공기복합소재, 인공위성, 어군탐지기, 지능형 전조등 등)
- 다만, 개발중인 산단에 입지수요가 부족하여 추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수국가산단 확장 등으로 입지를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래소재산업 선정	정책입안 및 대상산업 선정	-	-	-	-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수립	사업추진	사업추진(계속)	사업추진(계속)

※ 기존 산단 활용시 '15년 이내로 사업완료 및 기업입주가능, 신규 산단 조성시 부분준공 등을 통하여 '17년경 기업입주 가능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전남도는 대상 신소재산업의 종류를 확정하지 못하여 예상되는 수요 및 입지소요면적도 추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입지선정 및 소요면적 등을 확정하는데 장기간 소요 전망
 -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소재산업의 종류 확정, 입지수요 및 대상지역 선정 등 추진

5. 기대효과

- 미래전략산업인 신소재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상생발전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전남-5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②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낙후된 항공안전기술 선진화를 위해, 항공기 등의 인증·시험·기초기술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구(항공안전기술센터)를 국가정책조정회의·기재부 협의를 거쳐 재단법인 형태로 우선 설립('13.1.10일) 하였으며,
 - 정부 예산지원 근거법을 마련('13년)하여 법정기관화하고, 기획연구('13년, 10억원) 및 예타를 거쳐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을 '14년부터 '20년 까지 설립 추진(총소요예산 약 8,510억원)
 - * 항공안전기술센터(항공기비행종합시험장 건립 포함) 법정기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13년)
 - * “항공기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세부기획연구('13년, 10억원)
- (‘13년도 항공 R&D 예산 조정 또는 집행잔액을 활용/입지, BC분석 등 세부사항 검토)

* 기획결과(경제성 분석 등)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14년초)

*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 추진('14~'20)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항공기비행종합시험센터	세부기획, 법령제정	예타, 항공기비행 종합시험센터 설립 (법정기관)	본개발	본개발	본개발

※ '17년말 기준 항공기시험종합비행센터 설립 추진 공정을 70%

* '13년 상반기 :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기획연구 소요예산 확보(약 10억원, '13년도 항공 R&D예산 조정) 및 기획연구 용역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법령제정, 예타 및 예산확보, 입지선정시 관계부처(국회, 기재부, 지자체 등)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협력 해결 추진

5. 기대효과

- 낙후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산업(항공기 제작 등)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5대 항공기술 강국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항공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기대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Sounding Rocket 개발 프로그램]

- Sounding Rocket* 개발 프로그램을 이 지역에서 실시하여 종합관 광명소 구축을 뒷받침함
- Sounding Rocket 기반기술 연구 및 엔진개발('14년~)
- Sounding Rocket 발사 및 운용('15년~)

※ Sounding Rocket : 과학실험 장치를 탑재하고 초고층 대기권 밖으로 발사되는 로켓

[캔위성 경연대회]

- 캔위성 경연대회를 우주교육관련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에서 개최하여 우주과학에 대한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 전남 고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캔위성 체험·경연대회를 고흥에서 개최
- 나로우주센터 및 우주과학관(우주시설 견학), 고흥 항공우주센터(캔위성 발사),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교육 및 숙박) 등 다양한 자원 활용

2. 추진 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ounding Rocket 및 캔위성 경연대회	구축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Sounding Rocket 기반기술연 구 및 캔위성 발사	Sounding Rocket 및 캔위성 발사	Sounding Rocket 및 캔위성 발사	Sounding Rocket 및 캔위성 발사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캔위성 경연대회 확대 실시 및 Sounding Rocket 개발사업 신규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를 나로우주센터 내 우주과학관과 통합운영하여 체계적 사업기획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

5. 기대효과

- Sounding Rocket 개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발사체 및 과학위성 분야 대학·대학원생을 비롯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 개발 후 매년 Sounding Rocket 발사를 추진하여 나로우주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우주항공 분야 주요 Event로 활용
 - 이와 함께 Sounding Rocket을 통한 한반도 대기권 과학측정 실험을 통해 과학탐구 활성화 및 일반인의 우주분야 관심도 제고
 - 또한 Sounding Rocket 개발 프로젝트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틀구축이 가능

- 실제 위성을 모사하는 캔위성 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위성 체계에 대한 중·고교생들의 이해 증진함과 동시에
 - 초소형 캔위성의 개발과정을 통해 중·고교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우주분야 저변확대에 기여

②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2-2016년)은 기수립(2011.12)되어, 현 시점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움

2. 추진일정

- 차기 단계에서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관련 내용은 반영을 검토할 예정('16)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우주개발과 관련한 전분야와의 통합적 효과 극대화

전남-6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① 광주와 완도를 잇는 4차선 도로 건설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타당성 재조사시 연장 축소(광주-완도 → 광주-해남) 등을 통해 타당성확보 추진
- 타당성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공사 등 후속절차 이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재조사 수행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실시설계 추진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실시설계 추진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착공	(타당성 확보 및 예산반영시)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타재결과 타당성확보 및 예산반영시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향후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우려

*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

5. 기대효과

- 낙후된 전남 중남부지역개발 및 광주권과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전남-7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①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②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③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①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레저관광특구로 지정 ②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재단 설립) 여수박람회장 부지·시설 관리, 민간투자 유치, 박람회 계승·발전 등 사후활용을 전담하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
- (재개장) 순천 정원박람회*('13.4~10월)와 연계하여 재단에서 BIG-O,스카이다워 등 특화시설 중심으로 단지 재개장('13.4)하여 관광객 흡수
 - *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 등 순천만 일원 1,342천㎡
- (사업자 공모)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12.9.5)에 따라 한국 관·엑스포홀을 제외한 전체 부지·시설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13.3~)

- (순천만 연계) 여수박람회장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2백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순천만 습지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 (섬관광 활성화) 여수박람회장의 크루즈 부두·여객선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진도·완도·남해·거제 등 인근지역의 섬 관광 개발 및 연계
- (관광거점 기능) KTX 종착역으로서 내륙관광의 종점이자, 남해안 해양관광의 기점으로 관광 안내·개발·협력 등 남해안 해양관광센터 기능 수행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수박람회장을 해양 레저관광특구로 지정	재단설립 재개장 사업자 공모	박람회장 개발 해양관광 연계	여수프로젝 트 등 활성화	연계기능 강화	거점기능 확대

* 특구 지정은 '13년 완료, '14년 이후 박람회장 개발 및 주변지역 연계방안 추진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입법추진계획
 - 2013년 상반기 개정·시행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민간사업자 공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박람회장 개발 지연 및 방치, 지역여론 악화 등 사후활용의 실패가능성 상존

⇒ 재단 설립을 통한 책임감 있는 사후활용 추진, 순천 정원박람회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단지 활성화,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매각조건 검토 등

5. 기대효과

- 여수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관람객 유치 확대,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③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 지원('13~)을 통해 본격 개발 및 민간기업 투자유치 촉진
- 중기재정계획 반영('13년), 기반시설 예산 확보 및 지원('14 ~ '17년)

* 동측 진입도로(10.9Km, 총 사업비 2,756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2.11)

* 전남도, 국비 지원을 상향(50→80%) 요구(국지도 : 100%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지원	예산 지원 (설계용역 등)	예산 지원 (도로, 토공 등)	예산 지원 (도로, 교량 기초)	예산 지원 (교량, 구조물)	예산 지원 (교량 상부 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재원 확보에 애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후 국고예산 반영지원

5. 기대효과

-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및 민간기업 투자 촉진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관련 특례 신설, 원형지 개발근거 신설 등

< 서남해안(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개요 >

- 목 적 :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건설
- 위치 / 면적 :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 / 34.4km²
- 사업시행자(주체) : 한양, 보성건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06 ~ ' 23 / 1조 8,788억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업도시특별법개정	법률개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농어촌공사와 시행자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

- 또한, 매립후 비용정산(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토지 취득 및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이 필요함)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시행자 손실 불가피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자의 손실방지를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개정
 -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에 대한 특례신설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방지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액을 현재 이용상황으로 평가하고 매립지 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가액 포함
 - 원형지 개발근거 신설 :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신속한 개발을 위해 원형지 개발 허용

5. 기대효과

-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시행자의 불가피한 손실 방지로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 가능

경 복

경북-1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① 구미, 포항, 영천 등 지역에 IT 융복합 산업화기반 구축 ② IT 융복합 핵심소재 R&D 역량 강화 ③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① 구미, 포항, 영천 등 지역에 IT 융복합 산업화기반 구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창조 미디어 랩) 창의적·실용적 IT융복합 대학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IT 융복합 혁신센터) 수요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IT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양산 및 수출 등을 지원하는 거점 지정·운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IT융복합 산업화 기반 구축	설립 검토	설립 및 운영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창조 미디어랩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계획 평가, IT 융복합 혁신센터 협약체결('13지역SW산업진흥지원-포항)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지역 IT 융복합 거점 기반 조성 및 차세대 글로벌 IT융합 시장 선점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 및 실현

② IT 융복합 핵심소재 R&D 역량 강화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IT 융복합 핵심소재 개발·지원) 첨단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섬유 등 핵심소재 개발·지원을 통해 IT융복합 클러스터 도약 기반 마련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IT융복합 핵심소재 R&D 역량강화	R&D 지원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첨단융합소재 유망품목별 사업화 방향 설정 및 핵심요소기술 확보, 기술지원·사업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기반 구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지역 IT 융복합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차세대 글로벌 IT융합시장 선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역량 강화

③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조성 〉

- 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관련 장비 구축, 업계의 활용 지원, 관련 기술 정보 제공, 시험평가 프로세스 수립 등 추진
- 항공전자 부품시험평가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항공전자 업계를 유치하여 경북을 항공전자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사업필요성, 규모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우선 추진 필요

* 국내 섬유기계 생산규모(21.7억달러, '11년)가 크지 않은 것 고려 필요

2. 추진 일정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조성 〉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단지 조성	항공전자 부품 시험평가센 터 구축 사업 착수	항공전자 부품 시험평가센 터 구축 사업 추진	항공전자 부품 시험평가센 터 구축 사업 추진	항공전자 부품 시험평가센 터 구축 사업 추진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본사업 착수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

- 구체적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추진('13.4~11월) 및 타당성 검토 후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이퍼텍스기계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13.4월, 해당 지자체)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류단지 조성 〉

- 현 중기재정계획 상 반영된 예산은 총 61억원 수준으로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증액을 고려할 필요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

- 타당성 검토후 발굴

5. 기대효과

- 항공전자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평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R&D 와 사업화를 지원하여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경북-2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①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 및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포항, 경주 등 동해안 및 낙동강 일원 ② 낙동강 태양광 부품·신소재벨트 조성 ③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추진	

①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 및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지경부)]

- 사업 타당성 조사('13)

* 고출력레이저 기술개발센터, 광원개발 장비구축, 고출력 레이저다이오드 개발 등

- 기추진중인 원천기술, 국산화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전략과 연계, “범 국가적 차원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세부 추진방안 마련 ('14)

* 산업용레이저 부품개발(광주), 차세대마이크로레이저(전남TP),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구축(고등광기술원),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대구),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부산) 등에 투자 중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교육과학기술부)]

- (1단계) 방사광가속기(3세대, 4세대) 및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등 기 추진 중인 관련 연구시설·장비,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추진

· 방사광가속기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11~'15, 4천억원) 및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및 빔라인 증설 등을 통해 세계적인 방사광가속기 인프라 구축

· 양성자가속기 : 연구센터의 조기 정착을 통한 양성자이용연구 활성화 및 신규 빔라인 구축 추진

※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을 위한 경주시 분담금(425억원)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아 연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

- (2단계) 1단계 사업 완료 후, 구축된 가속기 장비·시설과 연계하여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등 2단계 사업 검토·추진

※ 현행 대형연구장비 구축지도(로드맵)와 1단계 사업 추진결과 등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세부 추진분야 및 방안 검토, 가속기 기반의 R&BD 적극 검토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고출력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타당성 조사	범국가적 통합방안 등 사업추진안 마련, '15년 예산반영 추진	레이저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범국가적 레이저산업 통합계획 보완	범국가적 레이저산업 통합계획 확대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레이저 관련 기 추진 기반구축 과제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장비·시설 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과학계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단기간 대규모 재원 투입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

※ 현재 4기의 대형 가속기 구축 중(4세대 방사광, 중이온, 중입자, 양성자)

- 국가 대형연구시설 장비구축지도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여 전략적·효율적 재원 투입

5. 기대효과

- 레이저 분야 독자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 기술 종속성 탈피(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약 70%)

* 최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레이저 칩보다 내부구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형 모듈 단위를 생산하여 시장의 독과점이 가속화

- 레이저 칩, 모듈 등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레이저 관련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현재 레이저 관련 중견기업은 약 10개(매출액 500억원 수준)

② 낙동강 태양광 부품·신소재벨트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낙동강 태양광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14.6월) 및 클러스터화 추진('15년~'19년, 200억원 규모)

· (테스트베드 구축) '14.6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분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 완료

* '11년~'13년(총3년), 대경권·호남권·충청권 지역, 총 240억원

· (클러스터 조성) 기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태양광분야 광역 클러스터* 조성 추진(5년간, '15~'19)

* 제품 양산 및 검인증 장비 구축, 전문기업·연구소·학교 등 관련 네트워크 집적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낙동강 태양광 부품·신소재벨트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15년 예산반영 추진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 취임 3개월후 예상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3. 입법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대구경북지역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14.6월 종료)과 클러스터 조성사업('15년 추진 예정)의 사업기간 공백 최소화 필요
- 테스트베드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추경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5. 기대효과

- 대경권을 비롯한 호남권, 충청권 등에 조성중인 태양광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태양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③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추진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대규모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구조·대응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3대 극한대응 로봇 및 재난방재 시스템 개발

* 원전 다수보유(국내 21기 중 10기), 전국 산불의 42% 발생(강원+경북), 해안 및 독도 인접 등 경북도의 특성 및 국가적 수요를 감안하여 '원전로봇, 산불 감시·진압로봇, 해양로봇' 개발

- 원전 안전로봇 3종 개발(R&D) : 원천기술, 관련부품 등 개발 후 상용화 R&D 시행을 통해 ①평시 대응로봇(검사/유지보수), ②비상 상황 대응로봇(정보수집 및 원격작업), ③원전기기 교체/해체로봇 등 개발(200억원)
- 자연재해 정찰/방재 로봇 개발(R&D) : 환경 감시를 통한 산불·산사태 조기 발견 및 초동 조치, 산악지역 조난자 수색 및 구조 대응, 산불 진화 등을 위한 무인 감시정찰 로봇 및 화재진압 로봇 등 개발(150억원)
- 해양 재난대응 로봇 개발(R&D) : 해상 인명사고에 따른 정찰·대응·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수중/해상 대응로봇, 해일·지진 등에 대비한 해양재난 경보시스템, 독도 수호를 위한 무인 감시경계로봇 등 개발(150억원)
- 극한환경 대응을 위한 전용 로봇부품 개발(R&D) : 고온, 저온, 고습, 고압, 방사선, 유해가스 등의 극한 환경에 강인한 특수 부품 개발(200억원)

- 스마트 재난방재 R&D센터 설립(비R&D) : 관련 출연연, 연구기관, 기업 등이 모여 관련분야 공동 연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100억원)
-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실환경하 검증(비R&D) : 관련 장비를 갖추어 성능 평가, 안전성 검증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시장성 테스트(150억원)
- 극한환경 부문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비R&D) : 원전·수중로봇 등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기술/인재 교류, 개발된 로봇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력 지원(50억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 추진	사업 기획 예타 추진	예산 반영			상용화 기술 실증테스트 인력지원 (~2018 사업 계속)
		R&D센터 설립			
			실증단지 구축		
		기술 개발			
		국제 협력			

* 취임 3개월 후 예상성과 : '13년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로봇산업클러스터사업, 수중건설로봇사업 등 기존 사업에서 진행 중인 과제들과의 중복성 문제
- 기술개발 후 실 적용시 로봇의 기술적 완성도 부족, 로봇전문가 외 현장 전문가가 실제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필요 등의 불편 요인 발생

○ 애로사항

- 경북도,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한수원 등 재난 대응 관련 기관 및 로봇 실수요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해결방안

- 기존 사업에서 재난방재 로봇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동 사업의 지원과제 범위를 특정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
-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현장적응이 원활하도록 상시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처와 공동으로 추진

* 『지능형로봇 보급 및 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14개 부처 국장급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등 활용

- 개발 제품의 현장 투입 후 수요처의 피드백을 철저히 반영하여 제품의 기술적 수준을 시장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실환경 검증 이후 로봇 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부문 인력 지원 포함

5. 기대효과

- 美 멕시코만 원유 유출,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구미 불산가스 유출 등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 가능
- 대응팀의 추가적 인력 없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국민행복 증진
- 비상재난상황시 체계적 대응,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및 산림·해상 등 영토 수호·방위체제 강화에도 기여 가능
- 글로벌 차원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틈새 시장을 선점하여, 우수한 로봇기술력 제고 및 우리 제품의 수출 증대

* 美 국방첨단연구소에서도 전 세계 유수의 로봇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재난현장 대응 및 인명구조 미션 수행이 가능한 로봇 개발 시작(DARPA Robotics Challenge, '12.10월~'14.2월, 전세계 7개팀 경합)

- 극한 재난대응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 패키지 판매·활용 가능한 로봇 개발로 인해 신규 원전 수출 및 원전 교체·해체 시장에서의 상품력 강화
- 활용도가 높은 극한 분야의 상용화 로봇 기술을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 가능

경북-3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①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주관부처(행정안전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4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해 국비지원
- '13년 예산 반영액 506억원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14년 예산은 기재부·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13~'17년 중기재정사업 반영('13.4월), '14년 예산반영(5~9월, 기재부 협조), '14년 국회 예산 심의대응(10~12월), 경북도에 예산배정('14.3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북도청 건립비 지원	기 예산확보(506억원)	'14년 예산 반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애로사항)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나, '14년도 예산반영 시 지원액 축소 예상
 - 국회에서 '11년 예산심의 당시 1,649억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1,514억원이 반영된 충남도 지원('12년까지) 선례 등으로 요구액 전액 반영 애로
- * 총 1,649억 = 지상건물(1,164억원, 인구 200만~300만 청사기준면적) + 지하면적 반영(485억원)
- (해결방안) 경북도의 증액 요구 금액에 대해 기획재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해결

5. 기대효과

- 도청 소재지를 관한 행정구역으로 이전(대구→안동·예천)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수도권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 거점 확보
- 도민들에 대한 근접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도민역량 결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련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도청 청사이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상 진입도로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 중

* 경북도청 진입도로 : 총사업비 1,738억원 중 869억원 국고지원('12~'15)

- 진입도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국고지원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확보	국고지원	국고지원	국고지원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도청진입도로 건설사업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는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도청이전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경북-4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①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추진 ②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지속 추진	

①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포항~영덕)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착수('13년 하반기) 및 공사 발주('15년)
- (영덕~삼척) 향후 교통량 및 주변개발계획 등 여건변화를 보아가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예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14년 이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 착수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공사시행	공사시행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 사 요청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17년말 기준 계획 : 포항-영덕 착공, 영덕-삼척(예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영덕-삼척 구간은 향후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 보류 우려

*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

5. 기대효과

- 부산~포항 구간과 삼척~속초 노선을 연결하여 동해안 종축노선 완성
-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 강화

②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지속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재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재조사(국회 예산 반영시)를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고속도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
- 향후 교통량 증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협의	예타신청 여부 기재부 협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 '17년말 기준 계획 : 교통량 검토 및 기재부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결정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대규모 재정(약 9.5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교통수요가 적어 ($B/C = 0.14 \sim 0.38$), 교통량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추진 여부 결정

5. 기대효과

- 세종시와 각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
- 양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북-5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기 착수 추진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기재부)
- 별도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공약사업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추진계획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전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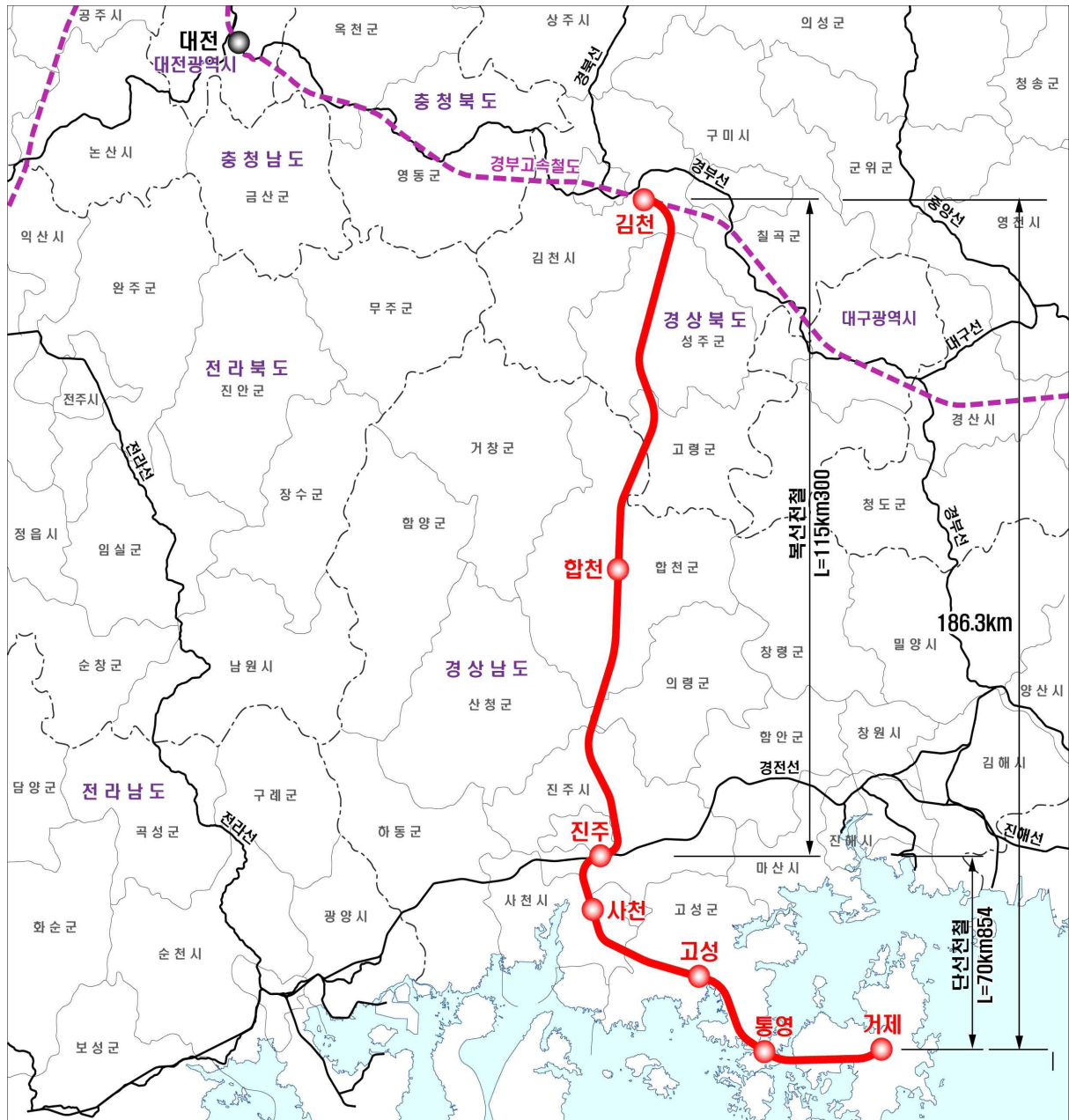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동 사업은 교통수요 등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 실현에 차질 우려
 - 교통 SOC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발전 지원, 교통기본권 차원의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교통네트워크 연결,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 B/C 분석을 철저히 적용하는 독일의 경우도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은 B/C 분석 면제
-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별도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조기 추진

5. 기대효과

- 수도권과 남부내륙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여 남부 내륙지역의 접근성을 개선 및 남해안지역 개발 촉진



경북-6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①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사업 적극 지원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황룡사 및 신라왕궁(월성) 복원]

- 경주 황룡사지 복원사업
 - 황룡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 구층목탑 모형 제작
 - 황룡사지 연구센터 건립, 복원 심화연구
 - 구층목탑 기본 및 실시설계, 복원 및 부속건물 복원 정비 등
- 신라 왕궁 복원사업 (경주 월성 복원)
 - 월성 해자 발굴조사
 - 내부복원 정비 타당성 연구, 월성 시굴조사
 - 월성 내부 발굴 및 가능 부분 복원정비 등

[전통문화산업 창조 콘텐츠 밸리 조성]

- 전통문화를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 창작지원(3D, 캐릭터, 게임, 만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코리아랩(CKL) 지역부설 랩 설립·운영 검토(공모절차 필)
- (예) 전통문화와 역사를 창작원천으로 한 융합콘텐츠 제작으로 특화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안동시, 영주시)]

- 휴양문화시설 : 한국선비서원, 퇴계명상센터, 한문화센터, 체험관, 청소년전통수련캠프장 등
- 숙박시설 : 한옥체험촌(신한옥 체험 포함), 전통특급호텔
- 상업시설 : 한식체험테마파크, 가양주테마파크, 전통음식촌
- 공공편의시설 : 산책로, 종합관리센터 등

※ 2010년부터 예산반영 기 추진 중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 2010년 ~ 2016년(7개년) / 2,954억원(국비1,543, 지방비859, 민자552)
- 대상지역 : 2개시
- 사업내용 :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 2013년 예산 확보 : 10,900억원(공사비 반영)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고령군, 성주군)]

- 휴양문화 : 문화공연장, 대가야건국설화공원, 가야테라피타운, 민속놀이마당, 기마문화체험장 등
- 공공시설 : 느티광장, 겨울쉼터, 조각공원, 수변산책로, 관리사무소 등
- 신화공원 : 정견모주 신테마관, 상아덤 마당
- 가야역사공원 : 오색꽃 수레길, 천신의 길(생태데크), 정견모주의 길(생태산책로)

※ 2010년부터 예산반영 기 추진 중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총사업비 : 2010년 ~ 2016년(7개년) / 1,107억원(국비619, 지방비357, 민자131)
- 대상지역 : 2개군
- 사업내용 :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
- 2013년 예산 확보 : 50억원(공사비 반영)

2. 추진 일정

세부추진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주 황룡사지 복원사업	복원 연구 황룡사구층 목탑 모형제작 황룡사 연구센터건립	복원 연구 황룡사구층 목탑 모형제작 황룡사연구센 터 건립	복원 연구 황룡사정비 기본설계 황룡사연구센 터 건립	복원 연구 황룡사정비 실시설계 황룡사연구센 터 건립운영	복원 연구 황룡사구층 목탑 복원 황룡사연구센 터 건립운영
경주 월성 복원사업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복원 기본설계 월성 정비 타당성 연구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복원 실시설계 월성정비 타당성연구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복원 월성 정비 기본계획수립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복원 월성 정비 기본설계	월성 해자 발굴조사, 복원 월성 정비 실시설계
전통문화산업 콘텐츠밸리 조성	CKL 기본계획 설립	권역별 공모 및 설계	개소·운영	운영	운영
한국문화테마 파크 조성사업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계속	계속	사업종료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계속	계속	사업종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경주 황룡사 복원 :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학술자료 등)가 없어 문화재 차원의 복원에 어려움이 있음. 익산 미륵사지, 양주 회암사지, 부여 정림사지 일원 경우에도 고증 미비로 미 복원
- 신라 왕궁(경주 월성) 복원 : 발굴조사(월성 해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복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도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왕궁 내부 발굴에 대해 학계(전문가)에서 신중한 입장이므로 발굴조사 및 복원은 학계 공론화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방향 결정 필요

5. 기대효과

- 경주의 역사적 진정성 회복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
 - 경주의 역사적 실체 규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
 -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안동, 영주시 및 고령, 성주군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로 지역간 균형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활성화와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기대

경북-7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① 국토 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 ② 경북 내륙 개발 소외지역, 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구간(이천~충주) 실시설계중('10.12~), 사업내용 변경(단선→복선)으로 타당재조사 시행('11.8~'12.11)
- 타당성재조사 결과(B/C 0.293, AHP 0.401), 복선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단선으로 실시설계 재개('12.11월)
- 단선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장기적 복선화에 필요한 복선용지의 추가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추진
- 기본계획변경안(단선→복선용지)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기존선 문경~김천구간(단선비전철)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 시설개량(고속화, 전철화) 방안 검토·반영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중부내륙선 철도복선화	기본계획변경	1단계 공사시행	1단계 공사시행	1단계개통	2단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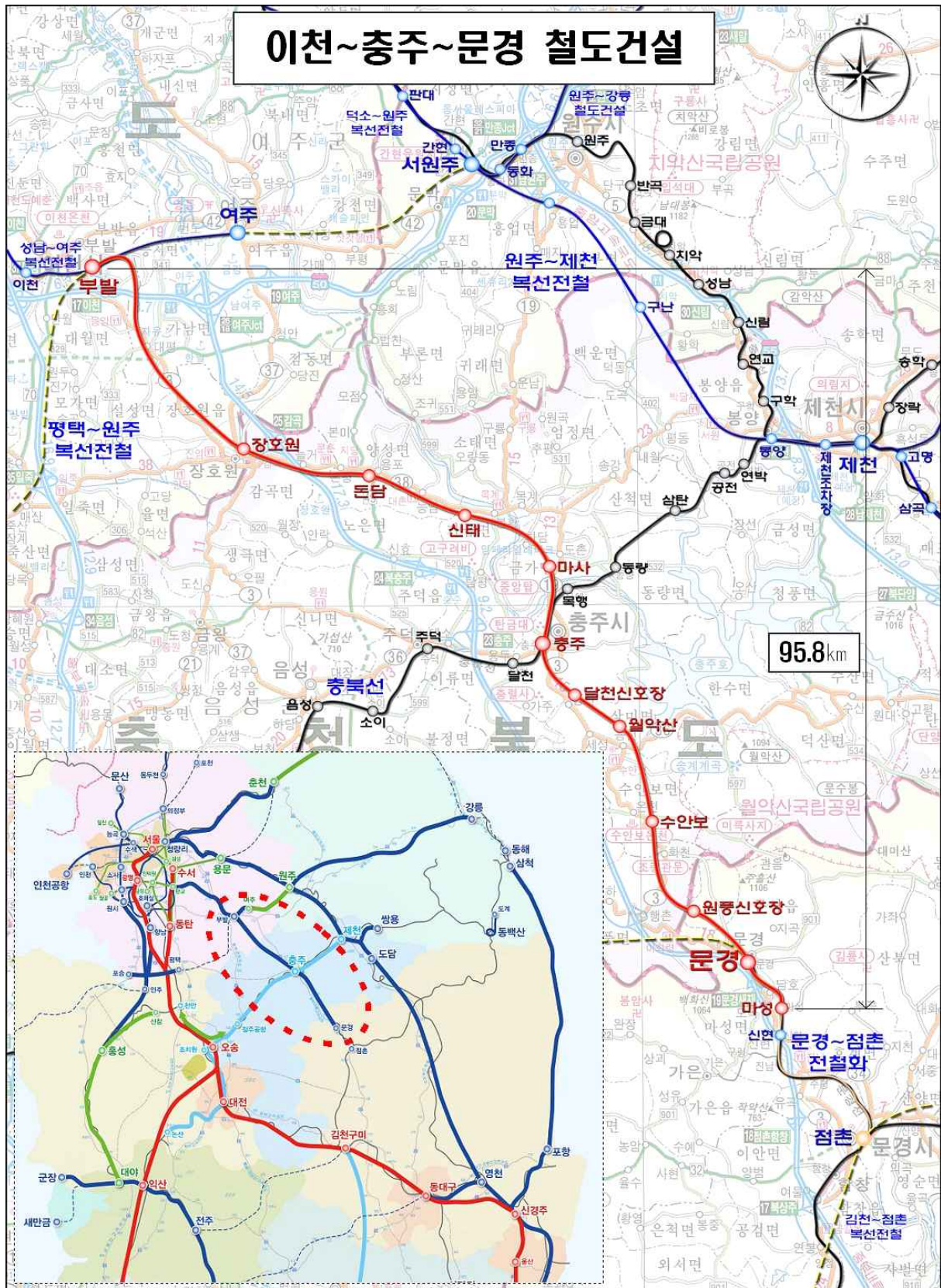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장기적 복선화에 필요한 복선용지의 추가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 (19,248→20,290억원) 필요

5. 기대효과

- 중부내륙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접근성 불량지역 해소
- 충북선, 경부선, 중앙선, 문경선 연결으로 철도의 효율성 제고 및 중부내륙지역 개발 촉진



경북-8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① 대구지하철 1호선을 하양까지 연장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하철 1호선을 하양까지 연장해서 우리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지하철로 편히 다니도록 만들겠다.”-2012.12.12., 경북 경산청과 시장 유세)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3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구1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 '17년말 기준 계획 :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5. 기대효과

- 대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 지원, 하양지역의 대구대 등 학생 통근수요 처리 해결에 기여

경 남

경남-1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①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치 ②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을 집중 배치 ③ 동북아 우주항공산업의 생산거점이자 세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 ④ 서부경남 일원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산단지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주관부처(지식경제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토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천지역 항공 업계의 신규 부지 수요 규모(30만평 이내)에 맞는 신규 산업단지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지원
- 산업단지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주도로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되, 정부에서 오피스 시설 등 관련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주무부처(국토해양부)와 협의
-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신규)을 통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R&D, 생산 및 수출 지원, 인력 교육 등 항공업계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구축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항공법 개정(안) :제 8조의 2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 (중략)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형민항기 생산기지	항공산업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산업단지 개발 착공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준공 및 업계 입주	
동북아 우주항공 생산거점이자 세계시장 전진기지로 육성					
항공부품 생산단지 조성					
항공기술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치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기획 및 ‘14년 예산 반영,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착수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계속)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계속)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계속)
항공 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을 집중 배치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 입법추진계획

- 법 개정(안)은 지경위를 통과('12.11월) 하였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사위 입법조사관실과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13년 초 법사위/국회 본회의 의결 예상

- 법안 의결/공포 후 시행일 전(6개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13.8월)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신규 공장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추가 개발이 필수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권한이 있는 지자체(경남도/사천시/진주시)와 국토해양부의 협조가 필수적
 - ※ 지자체는 최근까지 국토부가 대규모(132만평)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분양수요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산단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실수요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하되, 국토부에서 가능한 조성비를 지원하고 지경부에서 관련 기업 지원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
- '14년 이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신규로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착수할 필요가 있어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예산 협의를 진행할 계획

5. 기대효과

- 최근 국내 항공업계의 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신규 부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신규 산업 부지를 적시에 공급, 사천 지역 항공업계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업계의 기술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중소항공부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남의 항공산업 용지수요는 '20년까지 1.4km²로 추정(지경부, '12.5)되므로, 진주/사천지역 항공산업 용지수급상황, KAI의 장기 투자계획 및 집적화 대책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중규모 산단개발 추진('13~)

* 현재 진사지역에 10개(199만m²) 산단을 개발 중이며, '13년에 8개 산단(175만 m²)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 아울러 지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R&D·교육기관·인증센터 등을 사천 항공클러스터에 구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13~)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항공산단 조성	정책입안 및계획수립	계획수립, 단지지정,사 업착수	사업착수 (계속)	사업착수 (계속)	사업착수 (계속)

※ '17년말 기준 전체 공정을 50% 목표(부분준공 등으로 기업입주 가능)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현재, 경남도가 5년전부터 입지를 확정하여 추진한 관계로 지가가 상승하는 등 요구지역은 입지경쟁력이 약화
 - 아울러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단지면적은 4.3km²로 20년까지의 수요 1.4km²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조성 필요
 - 또한 공약사항인 “기술개발 연구 및 교육기관 설치,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등의 집중 배치”는 지식경제부에서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항공산업의 집적화 및 산단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항공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주요 시행자인 LH공사가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결정 필요
 -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식경제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필요

5. 기대효과

- 낙후된 항공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

경남-2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① 한려해상권, 지리산권, 섬진강권, 권역연계 프로그램 등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부처 : 국토해양부, 환경부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남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 한려해상권, 지리산권, 섬진강권, 권역연계 프로그램 등 권역별 특화된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 노도 문학의 섬 개발 등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남해안 관광자원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
 -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 하동 야생늪차공원 조성 등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리산의 관광인프라를 체계적 개발
 - 남해안 관광콘텐츠의 체계적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려해상, 지리산, 섬진강권 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지리산권 12개 -남해안권 7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지리산권 13개 -남해안권 7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지리산권 13개 -남해안권 4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지리산권 12개 -남해안권 4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 -지리산권 12개 -남해안권 3개 -남해안 관광 활성화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경남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테마형으로 개발해 경남 문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관련부처 이행계획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체류형 휴양지대 조성 기본계획 마련('13년 하반기)

※ 남해 헬스케어&스포츠 휴양 단지, 사천 신수도 휴양형 해상 관광지 등

- 건강문화 생태회랑 등 섬진강 녹색생태벨트 조성 부분 준공('13년 하반기)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류형 휴양지대 조성	기본계획	기본계획, 설계	예산반영, 착공(설계)	공사	공사
섬진강 녹색생태벨트 조성	기본계획, 준공	기본계획, 설계	예산반영, 착공(설계)	공사	공사

※ '15년까지 남해 헬스케어&스포츠 휴양 단지, 건강문화 생태회랑 조성 등 단계적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경남 지역에 한정된 공약으로서,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므로 동 공약에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

5.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삶’과 ‘삶의 공간’을 관광자원화하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형 문화체험 관광 활성화
- 경남에 산재한 지역자원을 테마로 연계하고 다른 산업과의 상호보완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테마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한 경 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립공원과 연계된 녹색네트워크 구축
 - 新문화관광 실크로드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지역주민 등과의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13~'17년)
 - 생태사진전, 백일장,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 추진으로 문화자원 공유를 통해 생태·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생태·문화행사 추진 ('13~'17년)
- 親환경적 국립공원 기반시설 조성
 - 생태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에 생태자원 체험, 환경교육 등을 위한 생태탐방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지리산-산악형, '13~'14년, 한려해상-해안형, '14~'15년)
 - 한려해상의 한산도 등 5개 섬을 연결, 섬별 특성을 고려한 親환경적 걷는 길(바다를 보면서 걷는 백리길) 조성 ('13~'14년)
-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한려해상·지리산국립공원-섬진강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운영 및 명품마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3~'17년)

2. 추진 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녹색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협의체 구성계획 수립	권역별 협의체 구성(공공기 관, 주민 등)	권역별 협의체 운영(공공기 관, 주민 등)	지속 운영	지속 운영
국립공원 기반시설 조성	생태탐방 체험 시설(지리산 계속)	생태탐방 체험 시설(지리산 준공, 한려해상 준비)	생태탐방 체험 시설(지리산 운영, 한려해상 착공)	생태탐방 체험 시설(지리산 운영, 한려해상 준공)	생태탐방 체험시설 운영(지리산, 한려해상)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걷는길 조성사업 완공(한산도 등 5개섬) 한려해상·지 리산·섬진강 권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신규개발(약1 0종) 명품마을(운 영 2개)	걷는길 조성사업 완공(한산도 등 5개섬) 한려해상·지 리산·섬진강 권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명품마을(운 영 2개)	한려해상·지 리산·섬진강 권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명품마을(추 가 1개, 운영 2개)	한려해상·지 리산·섬진강 권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명품마을(추 가 1개, 운영 3개)	한려해상·지 리산·섬진강 권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명품마을(추 가 1개, 운영 4)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자연생태 체험을 통한 국민 삶의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경남-3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① 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	

주관부처(국토해양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현재, 거제지역에서 조선업 및 해양플랜트산업과 관련된 3개 산업단지(1,498천㎡)을 개발중이고, '13년에 3개 산단(243천㎡)을 지정할 계획
- 따라서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사업”은 동 단지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검토('13~계속)
-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단지 지원, 핵심기술개발, 마케팅지원, 현장 교육·훈련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운영('13~'20)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원(168,297㎡)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13~'15)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지정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착수	산업단지 개발(계속)	산업단지 개발(계속)	산업단지 개발(계속)
* 해양플랜트 산업지원 센터 구축·운영	* 기본 인프라 구축(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및 부지정리)	* 기본 인프라 구축 (기본·실시 설계 및 센터구축)	* 기본 인프라 구축(센터 구축)	*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신산업 창출 및 사업화 지원	*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신산업 창출 및 사업화 지원

※ '17년말기준 추진 : 센터 구축 완료 및 산업계 근접지원체계 구축 등 전체 공정 70% 예상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관련부처(지식경제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조선해양 산업계의 수요, 실효성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13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규제특례법'에 따라 구체적 사업추진 가능 여부, 조선관련 국내외 수요 전망, 재원확보 여력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판단,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14년)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농림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협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부의 공유수명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소관부처 협의 진행('15년)
 - * 공유수면매립 행정절차 : 매립기본계획 반영신청 → 관계부처 협의(지경부 검토) → 중앙연안관리심의위 심의 → 계획반영 → 매립면허 취득 → 공사시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에 일반산업단지 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 지원('16년)
 - * 기초조사, 실효성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 필요성 확보시 국토부에 국가 산업단지 지정 요청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거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정책연구	특구 지정	공유수면 매립 지정	산업단지 계획 승인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산업계의 입주 수요 확보, 경제성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
 - 거제시가 요구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자칫 미분양에 따른 시행권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LH,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개발공사)의 부실화 우려
 - * 고성 조선산업 특구는 '07년 지정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후 특화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로 양촌 용정지구(192만㎡)의 공유수면매립이 중단된 상태
 - * 인근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93만㎡),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335만㎡) 등이 미분양 상태
- 기존 타지역 소재 입주희망 기업의 공장 이전시 기존 지역과의 마찰 가능성 검토 필요
 - * 거제시 내 대형조선소(2곳) 소재에 따라 기자재 생산, 조달의 일원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 고성, 하동 등의 입주기업이 이동에 대한 기존 지역의 반발 예상
- (해결책) 거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포괄한 동남권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수요 및 조성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 수행 후 추진
 - 사전 산업수요 및 선호, 경제성, 사업성 등의 검토를 통한 사업의 부실화 방지
 - 거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부산·고성·통영 등 기존 지역의 기업유출에 따른 지역간 마찰을 예방하고, 기존 미분양 산업단지의 활용계획도 반영

5. 기대효과

-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등 관련 기자재 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경남-4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 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지원 강화 ②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③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기반시설 지원 강화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도로 4개소 및 내부간선도로 2개소 등 6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진입도로(4) : 1호선 3.11km, 2호선 2.47km, 3호선 6.19km, 4호선 0.52km

** 내부간선도로(2) : 갈사만지구 5.10km, 대송산업단지 3.93km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하동지구 기반시설 지원 강화	진입도로 공사 진행	진입도로 공사진행	진입도로 1,3호선 완공	진입도로 4호선 완공	진입도로 2호선 완공
	내부간선도 로 사업착수	내부간선도로 공사진행		내부간선도 로 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하동지구 개발에 따른 편입대상 물건 소유자들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협의 보상 애로

→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협의보상 유도 및 미 협의시 신속한 수용처리

5. 기대효과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유발 28조, 투자유치 1조 4,960억원, 고용창출 22,385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②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남도와 창원시의 지정요청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외국인 투자수요, 입지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 지정여부 결정

* '1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평가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예비타당성 평가, 부처협의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	조성공사 착수	조성공사	조성공사	조성공사 완료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現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입주율 100%로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2년부터 경남도, 창원시와 사업비 매칭으로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을 추진 중

* 표준공장 8동 재건축, '10~'14년간 2,389억원, 입주면적 92천㎡증가

- '14년까지 재건축 완료시 입주가능면적이 92천㎡가 증가되어 50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유치*가능하나 자가부지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수요 반영 불가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필요

* 현재 100개사 → 표준공장 재건축 완료시('14년 이후) 150개사

5. 기대효과

- 산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생산 3조 5,015억원, 부가가치 9,602억원, 고용 7,928명의 기대효과 발생

③ 창원 첨단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기본방향) 노후화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QWL사업을 통해 스마트 가전통신과 첨단 기계부품 생산의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재창조 추진

* QWL(Quality of Working Life) :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첨단융복합 공간

- (세부 추진절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QWL밸리 확산계획을 금년 1분기중 수립하고,

*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 산업단지 업종고도화, 기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산단에서 '10년 하반기부터 총 31개 시범사업추진 중

-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산업단지를 상반기 중 선정

* 창원산단은 QWL 확산을 위한 후보산단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으로 '후보산단으로 선정시' 창원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첨단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공동 사업추진

- (핵심사업) 창원 산단의 경쟁력 분석(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핵심사업 선정

- 창원단지 내 재창조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스마트 가전통신과 첨단 기계부품 등의 융복합 집적단지로 복합개발

- * 신규 산업용지, 집적센터, 연구소, 직업훈련교육센터, 복지·편의시설 건립
- 오래된 저층형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창조산업, 벤처·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입지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지원 지식기반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R&D, 컨설팅, 특허, 디자인 등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
- 스마트 가전통신과 공작기계,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기계부품의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주기적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업종간 융·복합화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창원첨단복합 국가산업단지조성	QWL밸리 확산계획 수립, 확산산단 선정	사업 공모, 사업 추진	사업 추진		

※ 취임 3개월후 예상성과 : QWL밸리 확산계획 발표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 기반시설개선 등 非수익 공공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다양화
 - * (중장기 재원대책) 정부 출연금, 산단공 출연금, 드응로 ‘(가칭)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마련하여 전국의 거점 노후산단의 지속적인 구조고도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과 국가재정의 역할강화를 추진

5. 기대효과

-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재창조될 경우 2017년까지 입주기업은 연평균 7% 증가한 3,100개사, 고용인원은 연평균 3.5% 증가하여 105,000명이 될 것으로 기대
- 스마트 가전통신과 첨단 기계부품산업 생산 중심의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
- 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산단 내 기업의 매출증대,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및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 사업비 지출을 통해 경기활성화 촉진
- 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의 집적시설을 건립하여 연구, 교육, 문화 등의 역량을 강화

경남-5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① 창원에 과학기술원을 건립하여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② 경남 연안에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을 적극 검토 ③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조기 건립 및 아시아디자인 허브 구축	

① 창원에 과학기술원을 건립하여 기초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창원과학기술원법안('12.6, 김성찬의원 대표 발의) 제정을 통해 창원에 과학기술원 건립 추진
 - 국회 계류중인 「창원과학기술원법」 제정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 창원과학기술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창원지역에 추가로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중복 우려 및 새로운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기관의 운영 내실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존재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창원과학기술원 건립	입법절차 진행	사업 착수 (법통과시)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 창원과학기술원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창원과학기술원법안
- 입법추진계획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청회 개최 및 법률 제정 지원('13년)
 - 창원과학기술원법 시행을 통한 건립 추진('14~)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예상쟁점 및 애로사항 :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시 기존기관과의 기능적·지역적 중복성과 설립 타당성 검토 필요
- 해결방안 : 입법과정의 공청회 등을 통해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유사기관은 모두 입법화를 통해 설립

5. 기대효과

- 동남경제권 산업규모에 걸맞는 고급과학기술 우수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산업의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이끄는 고급·전문 인력 육성

- 지역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도모

② 경남 연안에 해양레포츠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한국해양
레포츠기술원 설립을 적극 검토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추진배경

-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해양레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실행 필요성 인식
- 경상남도에서 경남 남해안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건의

○ 주요 추진내용

- 경남 남해안(통영시)에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건립 추진 지원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오비도’)일대)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년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	기본 연구용역 (지방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립 공사	건립 공사 계속	건립 공사 계속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해양레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③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조기 건립 및 아시아디자인 허브 구축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디자인연구소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13.1월~)
 - 디자인, 건축 및 콘텐츠 관련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연구소의 원활한 건립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자문 역할
- 기본·실시 설계 및 건축사업관리(CM) 업체 선정·위탁 운영('13.2월~)
 - 연구소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 설계공모 과정의 오류, 공정성 시비 방지와 시공, 감리,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건립 전 과정 위탁 실시
- 연구소 시공사업자 선정 및 건축공사, 장비구축('13.6월~'14.8월)
- 준공 이후 동 연구소가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별도의 지원사업 신설 등 추진(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신흥 디자인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디자인연구소 건립	설계 및 건물 시공	연구소 준공 및 장비구축	-	-	-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연구소 운영전략 수립 및 설계 완료(5월)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14년도에 연구소 건립 및 운영 예산 확보 필요

5. 기대효과

- 디자인 트렌드 예측, 선행디자인 연구 등을 통한 중장기적 디자인 역량 확보로 국가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디자인 산업 규모 확대

* 국가 디자인경쟁력 : ('10년) 15위 → ('15년) 10위내

* 디자인 산업 규모 : ('10년) 7.1조원 → ('15년) 9조원

- 디자인을 통한 중소기업의 가치혁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디자인 활용비율 확대 : ('10년)12.6% → ('15년)15%

경남-6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① 부산~순천간 복선화사업 계획기간 내 완료 지원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경전선(삼랑진~순천~광주송정) 구간중 일부구간(삼랑진~진주, 광양~순천)은 既완료, 공사중인 진주~광양구간은 '15년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
- 순천~광주송정 구간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조기 착공 추진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21
남해안철도 고속화	-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행

※ '17년말 기준 계획 : 공정률 9%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순천~광주송정의 경우 경제성 분석 위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공약 실현에 차질 우려
 -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낙후지역 지원, 적정 교통서비스 공급, 교통네트워크 연결 등을 종합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기재부)하고, 별도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공약사업 심의(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기본계획 등 추진

5. 기대효과

- 경전선 미개량구간(순천~광주송정)의 전철화에 따른 일괄수송체계 구축, 광역통행시간 단축
- 남해안 선벨트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연계협력 발전에 기여



경남-7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① 마산로봇랜드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① 창원국가산단 중심의 지역산업 고도화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기반의 로봇 신시장 창출
 - 첨단 제조 로봇, 극한 수중 환경 작업 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 개발 상용화 및 로봇전용단지·인력 양성 기반 구축
- ② 5년에 걸쳐 미자립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검증, 상용화 및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연차별 추진
 - (단기) 미자립 기술·추가 기술 개발의 설계 및 기반 시설 구축
 - (중기) 개발된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여 검증·보완 및 기술 업그레이드
 - (장기) 로봇 시장 진출 및 타 분야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확산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예비타당성 심사 및 예산 편성	상세 개념 설정 및 사업 착수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실시 (~2018 사업 계속)		

* 취임 3개월 후 예상 성과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 예비타당성 조사계획

- '13년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절차를 진행 중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애로사항)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완공('15년말)이 지연될 경우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의 연계 추진에 지장 초래 예상
- (해결방안) 마산로봇랜드의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 추진

5. 기대효과

- 국가 미래 발전전략과 연계한 로봇 산업 육성
 - 국가 로봇 미래전략과 연계하여 인간 협업형 로봇 공장 상용화
 - 엔터테인먼트 로봇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서비스 산업 고도화
-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첨단제조·엔터테인먼트 로봇 선도기업 육성 및 Top Brand 제품창출
 - 10배 이상의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효과 기대

※ 고용 증가('11년: 835명 → '19년: 0,000명), 매출 증대('11년:1,049억원 → '19년:1조억원)

제 주

제주-1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①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 추진 ② 도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제5차('16~'20)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항공수요 조사 과정에서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13~'14)
-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기존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을 비교 평가, 최적대안 결정('14)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수요 조사	비교평가 대안결정	예타조사/기본계획	설계	착공

* '17년말 기준 설계 완료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 '13년 상반기 :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발주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기존공항 확장안과 신공항 건설안 비교 평가시 제주도내 지역간 이견 발생 가능
 - ☞ 제주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5. 기대효과

- 항공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인 공항 개발을 통해 지역민 편의증진 도모

제주-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① 민군 커뮤니티 조성 ② 친환경 경관 조성	

① 민군 커뮤니티 조성 ■ 주관부처 : 국방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주관부처(국방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
 - 항만공사('10. 1 ~ '15. 12월) : 방파제 및 계류부두 조성 공사
 - 육상공사('13. 3 ~ '15. 12월) : 민군공동시설('13. 3월 착공), 영내시설('13. 9월 착공), 진입도로('13년말 착공)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민군복합항 건설	공정률 48%	공정률 78%	완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회 부대의견 이행 방안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조사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1.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위 3개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중략)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국토부 예산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한다.

- 조속한 시일 내에 민·군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하여 민항 기능 보장 추진
- 총리실 주관 시뮬레이션 시현을 통하여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
- 정부 합동(총리실, 국방부, 국토부)으로 제주도와 조속히 협의하여 군항·민항의 기능이 원활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협정서 체결 추진

○ 반대단체는 입지선정 절차, 공사 추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 인권유린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자체를 반대하면서 공사 방해 시도

*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며, 반대측 설득 노력 병행

○ 강정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되어 갈등 심화

* 총리실 주관 정부-강정마을 주민 간 토론회 추진 등 소통을 위한 노력 지속

5. 기대효과

-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 위치로 북 위협에 효과적 대응 유리
-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양활동과 자원보호 및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보호
-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항 건설로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에 기여

관련부처(행정안전부) 계획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민군복합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 발전계획 개요〉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
·(기간/대상) : ‘12 ~ ’21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사업규모) : 37개 사업/1조 771억원(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사업내용) : 크루즈 터미널 및 화합과 공존의 민군커뮤니티조성사업 등
※ 우리부사업 : 강정마을커뮤니티센타 건립(22억), 첨단과수화훼단지(1억),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64억))

-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소관부처별·단계별 추진

· 1단계 사업 : 2013 ~ 2016년 / 4,820억원

· 2단계 사업 : 2017 ~ 2021년 / 5,876억원

※ ‘12년 지원 실적 5개 사업 75억원(국비 50, 지방비 25)/5년간(‘13~’17) 총 소요예산 : 5,062.45억원(국비2,961.6)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및 크루즈 터미널 조성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및 크루즈 터미널 조성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및 크루즈 터미널 조성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및 크루즈 터미널 조성	친환경 경관조성 및 민군 커뮤니티 조성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주민갈등으로 지역발전사업 추진 애로
 -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홍보 강화

5. 기대효과

- 첨단과수화혜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소득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생산유발효과가 약15,54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48억원, 신규 고용창출 18,042명 예상('11.12월,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결과)

② 친환경 경관 조성

■ 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서귀포항(강정지구)크루즈 터미널 및 부대시설(공원, 진입도로)건설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9.11~'11.12), 항만기본계획 변경('12. 6)

* '13년 예산확보 162억원(보상비 62억원, 공사비 100억원)

* 토지보상 완료('12. 6~'13년 상반기 중)

* 공사착수 예정('13. 7월 중)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보상실시 및 크루즈터미 널 착공	크루즈터미 널 완공	크루즈터미 널 운영개시		

* '13년 상반기 : 토지보상 완료

※ 크루즈 터미널 및 부대시설(공원, 진입도로) 준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료('15년)전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위해 '14년 잔여 사업비(242억원) 적기 확보 필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필요
 -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 제주도간 7차에 거친 실무협의 추진중

5. 기대효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인근 배후 부지내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뿐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주-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①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 종마 육성 ② 승마장 시설 개선 및 부대시설 현대화 ③ 말 산업 전문인력 육성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 요 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 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국내 말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13년부터 ‘말산업 특구*’ 지정 (‘13.6월 지정계획 공고, ‘13.12월 말산업 특구 선정)

* 일정 지정요건을 갖춘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며, ‘13년 첫 특구 지정 이후에는 말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승마 시설 개보수 및 설치를 지원하고, 제주마 혈통보존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08~’15년, 연간 2.5억원)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통해 제주도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 말산업 특구 지정사업, 승마시설 및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은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원(상반기 공모,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지원)

2. 추진일정

- ‘13년 상반기 공고 예정인 “말산업 특구 지정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말산업육성지원사업지침 등에 따라 연차별 추진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해당 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제주도 말산업의 지속 발전 및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주-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①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의 차질없는 완공 ②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③ 저렴한 청정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12년 제주LNG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 후 현재 제주도에서 부지매립공사 기 시행중 : ~ '15.3
- 제주애월기지 설계 및 공사계약 체결 : '13.4 ~ '14.12
- 제주도 공급설비 기본계획 확정 : '13.10
- 제주애월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 '15. 4 ~ '17. 12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 : '17. 12

제주애월기지 건설사업 개요
☐ 가스공사 제주애월기지 (부지+탱크+본설비) ○ 부지면적 : 61,000㎡ (18,000평) ○ 저장탱크 : 25,000㎥×1기 (향후 수요 고려 1기 추가부지 확보) ○ 기화설비 : 공랭식(2톤/시×6기), 스팀식(10톤/시×2기) ☐ 사업비 : 약 1,620억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부지매립공사 (제주도)		제주LNG 저장 및 공급설비 건설 (가스공사)		천연가스 보급

* 취임 3개월 후 예상성과 : 제주 애월항 방파제 및 부지매립공사 착공

3. 입법조치 : 해당 사항 없음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특이사항 없음

5. 기대효과

- 값싸고 청정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제주도민 연료비 절감
- 동 천연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주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주-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①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및 신품종 개발 지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고품질 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연차별 실소요액 지원

- (고품질 생산) 생산시설현대화*,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 기반 정비** 지원

* 품종갱신,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다공질 필름, 비가림하우스, 유통시설현대화 등

** 기반정비(누계/신규) : ('12까지) 355ha → ('13) 415(60) → ('17) 725(310)

- (유통시설 확충)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선과장 등록제 도입으로 감귤 품질 균일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

- (신품종) 환경적응성 우량 신품종 및 소비자 선호품종 개발

· 기관별 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육종연구 추진('14)

· 여름 출하용 품종, 중·소형 만다린, 저비용·고당도 품종육성 등 ('17, 6품종)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감귤산업 명품화	정책추진	정책추진	정책추진	정책추진	정책추진

3.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감귤 농업특성상 지역조합과 작목반 등이 많아 통일된 의견보다 조합별 사업요구가 많음
 -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별사업보다 공동사업 위주로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4. 기대효과

-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제주도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액 1조원(현: 9천억원), 수출 15백만 달러(현: 5백만 달러) 달성

제주-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① 4·3 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②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요도	☒ 핵심 ☐ 중점 ☐ 일반	기간	☐ 단기 ☐ 중기 ☒ 장기
예산소요	☒ 예산(기금) ☐ 비예산	입법조치	☐ 법률 ☐ 하위법령 ☒ 불필요

1. 이행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제주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14년~) : 매년 의료지원금 10억 추가 지원
 - (기지원내용) 재단운영, 공원관리, 문화·학술사업 등 지원(20억)
 - (추가지원) 희생자 및 유족 의료지원(10억)

※ 희생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61세 이상 유족은 본인부담금 30% (5,400원 이하는 전액)
- 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확보 : 총120억('13년 30억, '14년 90억)
 - 평화교육센터, 고난극복체험관, 전위예술공간 하늘연못, 화해와 상생의 종 제작

※ 4·3평화공원 현황 : '01년~'08년에 걸쳐 592억원을 투입, 2단계 조성사업 완료
- 제주4·3사건 국가기념일 지정여부 결정('13년)
 -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 필요

※ 국가기념일 지정 시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2. 추진일정

세부공약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념일 지정 검토	타당성 등 검토				
재단 국고지원 확대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예산확보	-

3. 입법조치

- 제·개정 대상 법령
 - 국가기념일 지정 시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입법추진계획
 -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내부 확정 시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013년 하반기 개정

4. 예상쟁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제주4·3사건처럼 특정지역의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시 타 지역 유사 과거사 사건 관련 단체의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가 예상됨
 - 다만,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고려 필요
- 또한 보수단체의 반발과 국방부 입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3단계사업('12~'13년)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연장('14~'15) 조치 필요

5.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 지원확대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 및 국민통합에 기여
- 3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제주4·3평화공원을 현대사 교육 및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과거사로 인한 갈등을 해소